

# 2013 연차보고서

2013. 12

# 『2013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보험연구원은 국가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균형된 금융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2월 개원하였으며, 2010년 11월 독자적인 법인 설립을 통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세계화, 융합화, 겸업화 등 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을 포함하여 국내외 금융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이 금융소비자 만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장단기 과제 발굴과 현실적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2013년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에서는 2013년 보험연구원이 각종 보고서 발간을 통해 발표한 연구성과를 사업목표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 각종 연구행사 개최내용을 실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대 핵심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부문에서는 보험연구원이 2014년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경영 선진화, 신성장 동력 발굴, 고령화시대 보험산업 역할 확대, 소비자 보호와 신뢰 제고란 사업목표 하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의 연구계획과 주요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 연구 관련 활동을 담았습니다. 보험 및 금융 전문 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 정기간행물 소개와 금융·보험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등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문은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 연구조직과 각 연구부서의 주요 연구영역 및 업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며 재무건전성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재무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수익성 위주의 성장 필요성, 업권 간/업권 내 경쟁 심화,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 확산이라는 시장환경 변화도 예상됩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경영·정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며, 아울러 보험산업의 장기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차보고서가 보험연구원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은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보험연구원장 강 호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consisting of several fluid, connected strokes that form the name 'Kang Ho'.

# I . FY2013 주요 연구

## 1.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14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4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시행 과제
- 25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 26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27 암보험 상품의 현황과 발전방향
- 28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 29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믹스전략과 시사점
- 30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가 주는 시사점
- 31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
- 31 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 대응 전략과 시사점
- 3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 2.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 36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38 거시경제 환경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40 변액연금 사업비 체계 다변화 방안
- 42 지속성장을 위한 보험판매채널의 미래전략

## 3.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 46 건강보험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47 IFRS 회계정보를 활용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의 한계와 과제
- 49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4.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 52 국내 경제의 장기부진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 54 역모기지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56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안
- 58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세제 효율화방안

- 60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62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5. 금융·보험 제도 개선 및 선진화

- 64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공시 개선방안
- 66 보험산업 자유화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 69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연구
- 72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74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II)

## 6.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78 금융소비자의 변액연금 수수료 체계 선택에 관한 연구
- 79 장수리스크 측정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 CEO Report

- 80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KiRi Weekly 이슈

- 81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 82 국제 신용평가기관 기소의 의미
- 82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83 가계부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84 내방형 보험점포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 85 개인연금 소득공제제도 효율화를 위한 소고
- 85 재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공동운명원칙 적용 예의를 인정한 최근 판결
- 86 노후의료비보장 강화방안
- 87 남북유럽 복지 비교와 시사점: 보건의료
- 87 유럽복지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88 실손의료보험의 한방법정비급여진료비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

## Contents

- 89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간·공사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소고
- 90 금융자문업 글로벌 제도개편과 시사점
- 90 정년 60세 연장의 의미와 시사점
- 91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 92 외제차 부품시장 경쟁촉진의 쟁점 및 당위성과 실행방안
- 93 변액보험 해외투자 펀드의 환헤지 전략에 관한 소고
- 94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민영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 95 저금리 대응, 대응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 96 미국 취약계층 보험공급망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97 일본 방카슈랑스의 소비자보호 규제 특징과 국내 시사점
- 98 영국의 새로운 보험감독체계 특징
- 98 주요국 그룹감독 비교와 시사점
- 99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와 재보험의 역할
- 100 공정한 정비요금을 위한 선결조건: 자동차제작자의 정비기술정보 제공의무 강화 필요
- 101 유럽과 미국 금융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차이와 시사점
- 101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 102 금융산업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논의
- 103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
- 104 공동(재)보험의 단일요율과 요율투명성에 대한 공정경쟁 측면의 검토 필요
- 105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106 민영간병보험의 발전방향
- 106 솔벤시 2의 보험부채 평가관련 최근 개정 논의와 시사점
- 107 스테이지암보험 현황과 시사점

### KiRi Weekly 포커스

- 109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대재해채권(Cat Bond)
- 109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개편의 영향 및 시사점
- 110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의 의미와 시사점
- 110 재형저축 판매 재개와 저축성보험에의 영향
- 111 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 111 담뱃세 증세 논란
- 111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 112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 112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 자유화 조치와 시사점
- 112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 113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 113 전세가격 급등기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필요성
- 114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과 건강보험
- 114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과 정책과제
- 115 최근 독일 해약환급금제도 변화의 특징
- 115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 정보의 투명화 필요
- 116 「EU보험모집지침개정(안)」 발표와 영국 보험업계의 반응
- 116 소비자 민원감축: 상품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전환해야
- 117 해외 공사적연금 비중과 시사점
- 117 보험산업 독점규제 적용에 관한 소고
- 118 HSBC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 118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 118 솔벤시 2 최근 동향
- 119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고려사항
- 119 카드슈랑스 판매제한 규정 적용의 영향과 시사점
- 120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 회사 지정의 의미와 시사점
- 120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률이 낮은 이유와 시사점
- 121 글로벌 보험그룹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Aviva Group 사례
- 121 8.28 전·월세 대책 평가와 진단
- 122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 122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 122 해외환자 유치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 123 국내 경제의 장기 부진 가능성
- 123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보험증권화 도입 필요성
- 124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 124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 125 계약형 퇴직연금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지배구조 개선방향
- 125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 125 미국의 출구전략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
- 126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고

## Ⅱ . FY2013 주관 행사

### 1. 정책세미나

- 130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 132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 134 이상기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날씨보험의 역할과 발전방향
- 138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 141 자동차보험 수리비 개선 및 부품시장 경쟁촉진 방안
- 144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 146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재와 미래
- 148 자동차보험 이원화 운영방안
- 150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제고 방안

### 2. 국제세미나

- 154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소개
- 156 자연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CAT Model과 CAT Bond 활용
- 158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환경변화와 과제

###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170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
- 172 "Risk to Strategy": 리스크 관리와 경영 전략의 연계
- 173 보험/재보험을 통한 대재해 대처 사례
- 174 자산배분과 시나리오 분석
- 175 변액보험 헷지 방안
- 177 Asset Demands and Consumption with Longevity Risk

### 4. Global Insurance Forum

- 180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사례
- 181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평가 및 개선방안
- 182 아세안 금융산업 현황과 해외진출

## 5. 보험정책포럼

- 184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 상시감시 방안 및 리스크 현황
- 185 기후환경변화 평가 및 시사점

## 6. 기타 행사

- 188 한국연금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192 201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195 IAS 현안, 보험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
- 197 노인자살 문제와 방지 방안

# Ⅲ. 2014년 주요 연구 계획

## 1.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 202 글로벌 환경변화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2. 경영 선진화

- 204 보험사의 수익구조 변화전략
- 205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 206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 대응전략

## 3. 신성장 동력발굴

- 208 보험사의 해외진출 방안
- 209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성장 가능성 연구
- 210 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전망

## 4. 고령화시대 보험산업 역할 확대

- 212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 213 가구형태 변화와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Contents

### 5. 소비자보호와 신뢰 제고

- 216 보험민원의 합리적 해결방안
- 217 금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 218 보험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219 설계사의 법적지위와 채널연구

## IV. FY2013 연구 관련 활동

- 222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223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 224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225 고령화리뷰
- 226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 227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 V. 일반 현황

- 230 경영비전
- 230 연혁
- 231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232 임직원 현황
- 232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237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 2013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 정책/경영보고서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 이슈·포커스

웹 주간지 『KiRi Weekly』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 I.

## FY2013 주요 연구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금융·보험 제도 개선 및 선진화  
금융·보험 이슈 연구



# 1

## Chapter

#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시행 과제
-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암보험 상품의 현황과 발전방향
-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믹스전략과 시사점
-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가 주는 시사점
-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
- 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 대응 전략과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보고서

14

## 연구배경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5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실물경제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부담으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크게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완화정책 축소 부담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전세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부채 조정으로 설비투자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내수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과 적자재정에 힘입어 2013년 경제성장률은 2012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정부는 2014년에 내수 주도로 경제성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2013년에도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던 금리 하락 추세는 2013년 여름부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부담으로 다행히 진정되었으며 2014년에 금리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금리의 절대적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2014년에도 자산운용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며, 내수부문 회복이 쉽지 않아 보험수요도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다.

또한 2014년 보험산업은 신계약비 이연제도 변경, 특고법 제정 추진, RBC 규제 강화 등 경영에 부담스러운 제도 및 감독환경 변화에도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도 계속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전망을 전제로 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적 이슈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경제전망

IMF는 2014년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어 2013년보다 0.7%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진국은 미국의 성장세 확대와 유로지역의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2013년보다 0.8%p 높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흥국은 경기부양 정책과 해외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3년보다 0.6%p 높아진 5.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성공여부,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지출 확대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3년 대비 0.6%p 상승한 3.3% 성장할 것으로

2014년 국내경제는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어 2013년보다 0.6%p 높은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된다. 선진국의 완만한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지연된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에 수입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수지는 2013년보다 156억 5,000만 달러 증가한 513억 6,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도한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소비 부진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8%)을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소비자물가는 내수부진 지속과 원화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요금 인상 및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1.1% 대비 1.2%p 높은 2.3% 상승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연평균 2.8% 수준을 나타냈으며 2014년에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원/달러 환율은 연간 1,04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제도 변화** 2014년 보험산업이 직면하게 될 주요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 및 계리제도 상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2014년부터 회계연도가 3월 마감에서 12월 마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 회계연도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 12개월간으로 전환된다.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개선할 예정이며, 2013년 12월 말부터 시행예정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RBC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RBC비율 상승 및 가용자본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안정적인 듀레이션 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연결방식 RBC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연결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한다.

보험상품 및 소비자 보호관련 제도 변경도 예정되어 있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한다. 저금리 기조에 대응한 보험회사 수익원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도 추진

2014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4.3%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저축성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 수요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으로 4.6% 성장이 전망된다.

된다. 특히, 해외 부동산업의 자회사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한편, 보험 광고, 모집, 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와 꺾기 규제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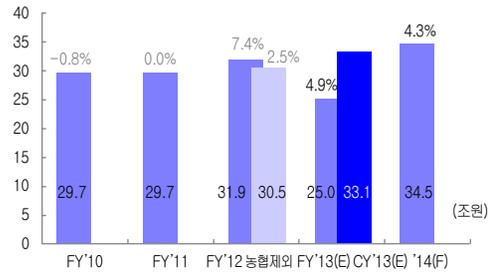
## 보험산업

### 전 망

#### 생명보험

2014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이 강화되고 계속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4.3%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FY2012 세계개편으로 인한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저축성보험 풀림현상이 확대되면서 상품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 신상품 출시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또한 FY2013 초회보험료 증가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도 2014년 보장성보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E)는 2013년 4월~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3) CY'13(E)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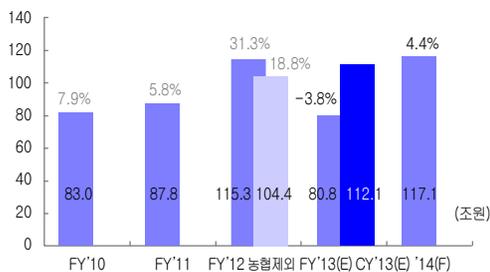
2014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 소멸, 저금리 환경 지속,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 노후소득 관심 확대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유지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도 성장하면서 4.6% 성장이 전망된다. 2014년에는 FY2013에 작용한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과거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나 개정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기저효과가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Y2013 생명보험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에는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유입 등으로 4.3%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FY2013에 작용한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과거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경기회복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보험의 경우 일반단체보험과 퇴직연금 성장요인 부재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FY2013 생명보험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에는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E)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3) CY'13(E)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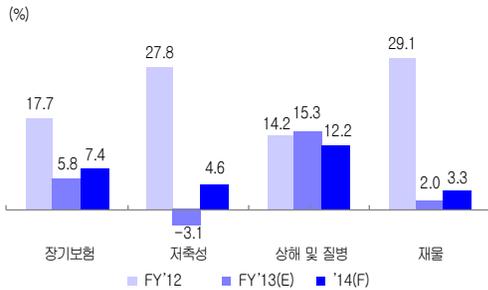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둔화로 증가율이 7.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타금융권 저축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 인 높은 금리를 제공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또한, 2012년 8월 발표된 세계개편<sup>1)</sup>의 영향으로 세계개편 시행 이전 세계혜택을 받고자 일시납 저축성보험 신규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세계개편 시행 이후 2013년 4월부터 기저효과로 신규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FY2013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3.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저축성보험은 급감하였던 신규판매의 소폭 회복세로 4.6% 증가가 전망되나 이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sup>2)</sup> 시행 이후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12.2%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제도 변경 이전 신규가입이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 1) 2012년 8월 발표된 세계개편안에 의하여 2013년부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계혜택이 축소됨.
- 2)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둔화로 증가율은 7.4%에 그칠 전망이다. 개인연금은 FY2013 증가율보다 소폭 상승한 6.7% 증가가 전망되고, 퇴직연금은 2.9%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한 계속보험료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물보험의 경우 종합적 위험 관리를 위하여 출시된 신상품 효과가 점차 줄어들어 3.3%의 저성장이 전망된다.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FY'13(E)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014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3 6.1%에 비하여 0.6%p 상승한 6.7%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 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장점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금 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400만 원<sup>3)</sup> 상향조정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 퇴직연금 도입이 대부분 마무리<sup>4)</sup>되어 증가율이 2.9%에 그칠

3) 2011년 1월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

전망이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의 단계적인 손금 산입한도 축소<sup>5)</sup>와 IRP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등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폭의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는 있다.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FY2012		FY2013(E)		2013(E)	2014(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4.1	21.1	3.3	6.1	4.3	4.6	6.7
퇴직연금	3.3	3.3	2.9	2.2	3.3	3.4	2.9

주: 1) FY'13(E)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 CY'13(E)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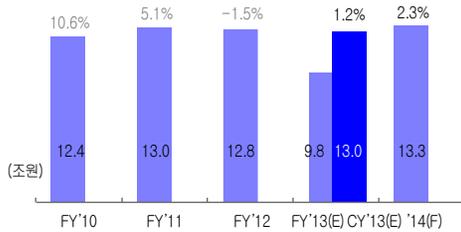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2.3%의 저성장이 전망된다. 물량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소폭 회복세가 기대되나, 주행거리 연동특약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 등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저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 4) 2012년 12월 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6.5%로 추정됨(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5)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히 폐지됨. (2013년: 15%, 2014년: 10%).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물량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2.3%의 저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소폭의 경기회복에 힘입은 6.2%의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경우 실적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와 연관성이 높아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량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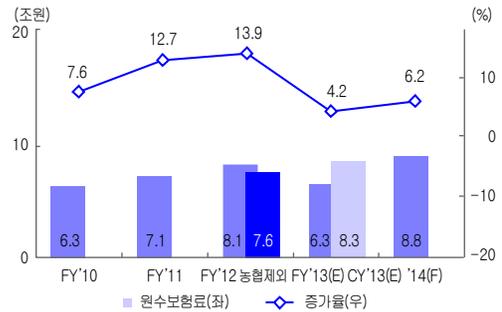


-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E)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3) CY'13(E)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소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FY2013 증가율 4.2%에 비하여 2.0%p 상승한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보험은 건설경기 부진에 의한 시장 침체와 다른 보험종목으로의 물건이탈 추세가 지속되면서 0.1%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보험은 물동량 소폭 증가와 FY2013 저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6.8% 증가가 전망된다. 보증보험은 FY2013 저성장

에 대한 기저효과로 6.1% 증가가 예상된다.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성장세 둔화와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종보험은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6.4%의 제한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종업원 복지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단체상해보험과 종합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특종보험도 농협손해보험의 실적이 추가된 이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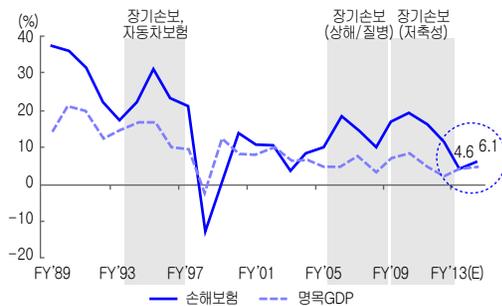
-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E)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3) CY'13(E)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2014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6.1% 증가가 전망된다. FY2004 이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고성장을

2014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  
을 중심으로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증가율은 명목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FY2013과 2014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  
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된다.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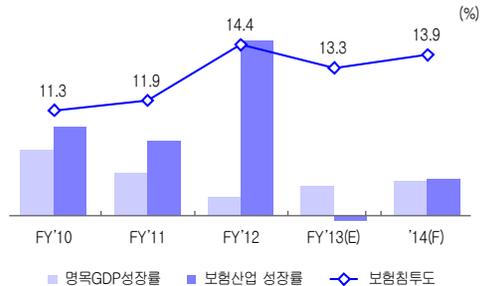


-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E)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3) CY'13(E)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 보험산업 종합

2014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  
률이 모두 명목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E)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3) CY'13(E)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2014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sup>6)</sup>(총  
보험료/명목GDP)는 명목GDP 성장률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13.9%까지 상  
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13보다 0.5%p 상승한 8.5%, 손해보험 침  
투도는 0.1%p 상승한 5.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6)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 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보험산업 전체를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2014년 성장률은 모두 명목경제성장률과 유사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침투도는 1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sup>7)</sup>(총보험료/총인구수)는 381만 3,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32만 2,000원, 149만 1,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E)	2014(F)
생명보험	1,679.8	1,764.5	2,306.0	1,608.9	2,321.5
손해보험	1,056.5	1,224.7	1,370.7	1,074.4	1,491.4
전체	2,736.3	2,989.2	3,676.7	2,683.3	3,812.9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E)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F)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3) CY'13(E)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주요 경영과제** 2014년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는 첫째, 방카슈랑스, GA 등 독립채널 관련 문제,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둘째, 공사 간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회복, 셋째, 위험률 차익 중심의 경영 강화, 넷째, 손해보험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의 운영구조 정비, 다섯째, 감독당국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개

7)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 등을 제안한다.

첫째,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 채널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방카, GA 등 독립채널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복지재정이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보험산업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셋째, 보험회사 경영은 기존의 사업비 차익 중심에서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의 요율규제가 사업비 차익 중심의 사업구조를 초래하였고 소비자 민원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본업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자동차보험 운영 구조를 재정립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손해율 악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1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심화로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자본규제 추세에 따라 국내 감독당국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요율규제 등 관련 정



# 테마진단

##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시행 과제

조재린(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3년 봄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재보험 거래에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을 경우 해당 재보험에 보험회계가 아니라 예치금회계를 적용하는 감독기준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전가 정도에 따라 재보험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데는 위험전가 정도가 낮은 재보험이 위험전가의 특성 이외에 자금조달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서 전통적인 재보험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할 경우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감독규정도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전가된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으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예치금(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제도는 감독규정도 불구하고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위험전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보험에 보험회계가 적용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2년 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2012년 10월 「재보험관리 모범기준」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동 평가기준과 모범기준은 보험회사의 재보험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위해서는 Data 수집, 모형설정, 모수추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전가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재보험관리 모범기준」에서는 “손해보험의 재보험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재보험자 기대손실(ERD)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모든 손해보험 재보험에 대해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계량적 수치가 보험위험전가 여부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보험위험 전가성이 있는 재보험계약의 경우에

도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재보험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이용하여 재보험을 통한 위험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산분배 등 위험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송윤아(연구위원)·전성주(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3년 봄호

1994년 Hanover Re가 처음 대재해채권을 발행한 이후 자본시장이 결합된 비전통적 재보험, 즉 보험연계증권(Insurance Linked Security, 이하 ILS라 함)은 세계 재보험담보의 약 17%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전통적 재보험을 대체 또는 보완하고 있다. LGT는 보험연계증권 등이 2014년에는 적어도 생·손보재보험시장의 22%, 2016년에는 25%를 차지하면서 전통적인 재보험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ILS 활성화가 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ILS가 재보험시장에 충분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재보험요율 인상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재보험시장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재보험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로 재보험회사는 극단적 보험리스크 사업에서 그리고 대재해 이후 공급자중심 시장에서 높은 요율과 함께 높은 이

윤을 남겼으나 ILS를 통해 시장에 자본이 넉넉해지자 이러한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ILS는 재보험시장에 추가 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대재해 이후 재보험요율을 안정시키고 원수보험회사에 전통적 재보험 이외의 위험전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재보험회사와의 협상력을 강화하였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재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리스크를 줄이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기대손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재보험요율 때문에 극단적인 보험리스크를 전통적 재보험을 통해 헤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해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EU의 보험제공 금지 조치로 인해 대혼란을 겪은 후 국내 담보력 확충의 필요성과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대재해 빈발과 그로 인한 재보험시장의 경성화에 대한 우려, 재보험 신용리스크 상존, 보험산업의 자본중심 규제 강화, 재보험수요 증가 등 국내 담보력 확충의 필요성과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필요성이 다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연계증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기승도(수석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3년 여름호

26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은 상품 및 요율이 자유화 되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산업의 운영행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 및 요율이 자유화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여론과 정책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최근 2013년에도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긴장이 시장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여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이 자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유화가 실현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자체 내에 근본적인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자동차보험 내부에 존재하는 근본적 갈등요인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자동차보험제도의 변경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이후 자동차보험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현재 자동차보험제도의 가장 큰 제도를 중심으로 그 변화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제정이다. 이 법률은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험산업 입장에서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며,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둘째, 198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다. 동 법률은 자동차운전자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일부 중대교통법규위반 사고가 아니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법률로서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법률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셋째, 1983년 자동차보험 취급사의 다원화이다. 다원화 이전에는 한국자동차보험(주)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독점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다.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자동차보험 상품을 공급함에 따라 서비스질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자동차보험(주) 이외의 민영보험회사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때부터 자동차보험은 자유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넷째, 1994년 자동차보험가격자유화 시행 및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가격자유화의 완전 시행이다.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는 1994년부터 범위요율제도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 부가보험료 및 순보험료 요율자유화 및 상품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자동차보험자유화 조치로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상품으로 시장에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련의 자동차보험제도 변화를

보면, 자동차보험에 두가지 큰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자동차보험을 민영보험으로서 자유화된 보험상품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 흐름은 주기적으로 충돌하면서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자동차보험의 본질이고, 변화되지 않을 부분이라면 이 흐름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단일 운영방법을 의무담보와 임의담보로 운영구조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암보험 상품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석영(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3년 여름호

최근 암보험 상품은 보장 확대, 보장기간 연장, 그리고 가입연령 확대 등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본고는 암 발생률과 새로운 암보험 상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리스크와 감독당국과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암 발생률의 경우 2010년 조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4명, 여자는 397.7명이며,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남자 333.6명, 여자 297.0명이다. 국내 암보험 상품은 1988년 7월 21세기 암보험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사망담보 위주로 상

품급부가 설계되어 판매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2000년 이후 예상치 못한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암보험 상품판매에 소극적이 되었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암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보험회사들은 암보험 상품 판매를 꺼리게 되는, 즉,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반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0년 이후 보험회사들은 그동안의 경험 통계와 국민암보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암보험 상품은 보장 기간을 100세 혹은 종신으로 연장하거나, 가입 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거나, 재발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거나, 암의 단계별로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들의 출시로, 소비자들은 필요 시 암보험 가입이 보다 수월해졌으며, 기존의 암보험에서 받지 못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암보험 상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장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세리스크, 가입연령 확대로 새롭게 가입이 확대된 연령층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수준리스크, 최초 암 발생이후 재발하는 암에 대한 정확한 발생률 예측 어려움으로 인한 수준리스크, 그리고 암의 진행 단계에 대해 정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리스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험률 산출단계에서 보험상품 담보에 추세리스크와 수준리스크들이 안전할층에 충분히 반영

하여야 할 것이다.

암보험 상품의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은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집적하고 필요시, 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하며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암보험 상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경험 자료와 시장 분석을 통한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3년 가을호

인구고령화로 정부와 개인의 장기요양(Long-Term Care, LTC) 비용이 급속히 증가해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비용 분담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민영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LTCI)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민영 장기요양보험이 전체 장기요양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7%)과 일본(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 미만이다.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인데, 보험 침투도(penetration) 측면에서 프랑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의 상대적인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민영장기요양보험 시장의 성공요인은 첫째, 프랑스 공·사 장기요양보험의 상호보완관계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메디케어)를 제

공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의 공적 장기요양보험(노인간병수당, APA)은 60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특징은 본인부담금이 큰 편이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의 폭(0~90%)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상위 소득층의 경우 정액형 민간 장기요양보험을 구매하여 본인부담금을 보충하고 있다. 이는 중상위 소득층은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미국과 비교된다.

둘째, 미국의 실손형 보험에 비해 프랑스의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수요가 큰 이유 중 하나는 보험이 자식이 제공하는 돌봄을 구축(crowding out)하는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물형태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시장에서 요양서비스를 구매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수발(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식은 부모에 대한 수발행위를 줄이게 된다. 하지만 부모들은 낮은 간병인보다 자식으로부터 돌봄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간 간병보험을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정액형 상품은 장기요양판정이 나면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는 자식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손형에 비해 자식 수발을 구축하는 효과가 작아 민영 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정액형 상품의 장점은 실손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상품이 단순하며 심사과정이 간단하여 소

비자의 이해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단체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어(전체 시장의 45%) 민영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낮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상호보완적인 공·사 장기요양보험 관계, 단체보험의 활성화 등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믹스전략과 시사점

황진태(연구위원)·박선영(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3년 가을호

글로벌 시장환경에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저가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IT기술 발달에 따라 저비용채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판매채널 중 인터넷·모바일 등 신채널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험상품 정보와 보험상품 간 비교 시 이러한 도구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2010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의 3,555명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 가량이 최소한 한번 이상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43%는 향후 1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내 보험판매채널 규제환경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당국의 민원감축 요구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시 전속채널 기반이 강한 보험회사의 채널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독립채널의 존도가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성장 및 수익성이 좋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 독립채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책임 규제와 별도의 모범규준 마련이 중요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채널경영전략 수립 시 현재의 상황과 장기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기존 채널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속채널 기반이 강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기존 설계사 채널의 고능률화를 통해 안정적 성장 및 수익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해당 채널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전속기반이 약한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다변화된 채널구축을 통해 채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믹스전략 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①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 ② 고객정보에 적합한 통합된 채널 구축, ③ 신규 채널 조화 및 시너지 효과, ④ 상품-고객별 특화 전략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대비한 믹스전략을 구사할 경우 신규고객층 발굴, 기존고객 유지관리, 크로스셀링과 업셀링, 전통적 판매채널의 생산성 향상, 채널 간 마찰 감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시 복잡한 환경변화, 보험회사의 경영목표, 위기 시 관리 능력, 보험시장 내 경쟁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가 주는 시사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봄호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는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재직 중인 2006년 이른바 롬니케어라고 일컫어지는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선의 경쟁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일명 오바마케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롬니케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론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세 없이 기존의 재원을 전용하여 건강보험을 개혁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용 효율성 문제가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사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비교적 높고 재정 여건도 양호한 편으로 건강보험 가입 강제화를 시도하기에는 무난한 조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롬니케어의 경우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덕에 초당적인 협조가 가능했다.

롬니케어는 기본적으로 ① 개인과 고용주에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② 건강보험 상품을 단순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③ 기존

의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최빈곤층을 지원하고 ④ 관련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등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빈곤층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재원을 전용하거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활용하였으며 차상위층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지급 대상을 세분화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노력했다.

롬니케어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우선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인 건강보험 미가입률의 경우 2006년 6.4%에서 2010년 1.9%로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15.2%에서 16.3%로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의 의료 복지 예산을 전용했음에도 전체 비용이 9억 600만 달러 정도 증가했다. 그 중 절반 수준인 4억 5,300만 달러가 주 정부의 재정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부담에 대한 평가는 첫째, 매사추세츠주 복지 예산의 1.4% 수준이라 통제 가능하다는 점과 둘째, 비용의 증가세가 안정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비용 부담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체제는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니 시사점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롬니케어가 복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을 세분화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재정의 효과성을 최대한 제고하려고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롬니케어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부유한



미국은 1890년대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종류의 사적연금 개발을 통해 공적 연금의 한계를 사적연금시장 확대와 금융시장 활용을 통해 극복해 가고 있다.

일본은 1980~1990년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발전되었으나, 2000년 이후 신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다양한 연금상품(예, 다양한 변액연금 및 연금상품의 취급허용) 개발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공적연금개혁을 보완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재정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예, 급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하고, 세계혜택과 결부한 리스터연금 도입 등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노후보장 및 재정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초고령화 및 재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통한 공·사연금 상생 발전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연금 기능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세제(보조금 포함) 혜택 강화형(독일 등) 및 준강제형 사적연금 제도 도입(영국, 스웨덴 등), 저소득층 및 소비자 맞춤형 다양한 연금 상품(미국, 일본 등)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사연금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1단계), 다음으로 공·사적연금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며(2단계), 마지막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세제 및 보조금, 지급보장제 등)이 따라야 할 것(3단계)으로 보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채원영(연구원) | 테마진단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가을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전세계 보험업의 수익성은 은행업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2009년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2년간 평균 자본수익률의 경우, 선진국 은행업 8.5%, 선진국 보험업 8.0%인데 금융위기 당시 보험업의 평균 자본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보험업의 회복속도가 은행업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신흥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업의 자본 및 자산수익률이 2003년에서 2007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은행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의 수익성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원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실자산, 일부 보험회사에게 손실이 집중되었다는 점, 그리고 2009년 이후 생명보험업의 보험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은행업의 경우 디레버리징과 매출감소를 비용절감을 통해 상쇄하지 못하여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순자산비율을 비교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우 모두 2008년 이후 보험업의 주가순자산비율이 전산업에 비해 낮지만 은행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흥국의 경우 2010년에서 2012년간 보험업 자본수익률이 은행업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 Chapter

# 2

##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거시경제 환경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변액연금 사업비 체계 다변화 방안
- 지속성장을 위한 보험 판매채널의 미래전략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변혜원(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 | 보고서

36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회사들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어 왔으며, 소비결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고려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적 제도 변화 추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CSR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본 연구는 장기 이윤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CSR 이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고는 국내 소비자들의 CSR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설문조사하고 해외 보험회사들의 CSR 이행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CSR에 대한 정의 및 이해는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의 CSR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해외 보험회사들의 CSR 이행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CSR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주요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이나 경제에서 적용되는 법적 규제적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CSR을 경제적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최근 관련 경제학 연구들은 크게 후생경제학적 접근과 기업이 CSR을 이행하는 유인 및 체계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략적 CSR 관련 연구들은 기업의 CSR 이행의 유인을 기업의 시장 위치나 장기 이윤 제고에서 찾고 있다.

국내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기업의 CSR 관련 정보가 구매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상품을 그렇지 않은 기업의 상품보다 더 구매한다고 했다. 이는 CSR을 통해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거나 이윤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CSR 실현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신뢰도에도 재무건전성, 시장 점유율, 상품서비스 품질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R 이행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만, 재무건전성 제고,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준법 강화가 신뢰도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보험산업의 CSR 이행 사례를

국내 보험회사들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윤 제고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CS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성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험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크게 주사업 분야와 CSR의 결합, 기관투자자로서의 CSR 이행, 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먼저,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보험, 소액보험, 노령인구를 위한 보험 제공 등을 통해 기존에 보장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보장기능이 약했던 시장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방식, 또는 기후변화 경감을 유도하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산업 및 녹색산업의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법 등이 주사업 분야와 CSR의 결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외보험사들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조성을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과 관련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를 이행하고 있었다. 셋째, 해외 보험회사들의 사회공헌은 주로 재해, 환경, 금융연구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손해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아울러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 CSR을 이행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CSR 특징으로는 첫째, 국내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주로 사회공헌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대상 할인상품,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장애인 대상 보험, 기부보험 등과 같은 CSR과 관련된 상품이 존재하나

가입 수준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이 CSR 이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윤을 제고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CS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성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결론** 본고는 국내 소비자들의 CSR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해외 보험회사들의 CSR 이행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위험보장에 취약했던 저소득층이나 고령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제공하거나, 기후변화 경감 유도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사회책임투자(SRI)를 통해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해외 보험회사들은 사회책임투자 중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고 있었다. 셋째, 보험회사들은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기업의 CSR 전략 맥락 아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보험업과 밀접한 분야, 예를 들어 재무 관련 연구, 금융교육, 재해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 거시경제 환경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전성주(연구위원)·전용식(연구위원)·김세중(선임연구원) | 보고서

38

**연구배경**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성장률 기준으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9%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보험업의 높은 성장세는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적 요인과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위험보장 욕구 확대에 의한 수요 확대, 그리고 이러한 수요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의 결과이다. 더욱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후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역할과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공사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 그리고 보험산업에 대한 제도변화의 영향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산업의 성장전망과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거시 경제변수들과 보험업 주요 변수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거시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험산업 블록을 포괄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대내외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산업을 전망하는 데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 거시경제 환경의 보험산업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립한 KIRI 모형은 케인지안 체계에 바탕을 둔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으로 일반 거시부문의 경우 최종소비와 투자 등으로 이루어진 실물경제와 금융, 대외거래 등 3개의 최종 수요부문과 노동, 물가 등 2개의 공급부문으로 총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형은 이러한 5개 부문에 보험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거시방정식 체계를 살펴보면, 43개의 행태방정식과 13개의 정의식을 포함하는 총 56개의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된 중규모 분기 거시모형이다.

본 모형의 핵심 부문인 보험산업 부문은 크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나누어진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험 수요를 대표하는 추정치로 보험료 지출을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 산업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산업의 원수보험료를 종속 변수로 채택하였다.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은 금융·재정·물가·대외거래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등 산업별·부문별 모형을 개발하고 연계시켜 부문별 경제전망 및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와 관련한 정책효과 분석, 대내외여건과 정책변화를 감안한 주관적 판단과의 상호 피드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본 모형은 전반적인 한국경제

KIRI 모형은 케인지안 체계에 바탕을 둔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으로 금융·재정·물가·대외거래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등 산업별·부문별 모형을 개발하고 연계시켜 부문별 경제전망 및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와 관련한 정책효과 분석, 대내외여건과 정책변화를 감안한 주관적 판단과의 상호 피드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거시계량모형에 보험산업을 명시적으로 연계해 특화시킨 중규모 모형으로 거시정책효과분석을 위해 설정된 대규모 모형보다는 적은 수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모형의 효율성을 꾀하였으며, 총수요와 물가, 이자율 등 보험산업의 수요 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경제의 핵심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IRI 모형의 동태적 안정성 및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는 표본기간 내에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값을 추정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표본기간동안 예측값을 추정할 때 실제값이 아닌 모형이 추정한 내생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평가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일반 경제 부문의 RMSE% 오차값은 실질 GDP의 경우 1.70%, 민간소비 1.65%, 소비자물가 0.81% 등 대체로 5% 내외의 RMSE 오차값을 갖는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 부문의 RMSE% 오차값을 살펴보면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5.68%,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6.9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3.95%, 일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4.24% 등 보장성 보험 부문의 오차값은 대체로 5% 내외의 안정된 값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세계혜택과 관련된 제도변화를 겪은 생명보험의 생존보험과 손해보험의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RMSE% 오차값이 1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본 모형의 예측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고 동시에 제도적인 변화가 정착되면 모형의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정된 예측력을 갖도록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책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해외이자율이 1%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 및 원수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정책금리인 Call금리가 1% 인하되거나 잠재GDP가 1% 감소하였을 때에는 회사채 수익률이나 실질 GDP가 감소하여 대부분의 수입 및 원수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 KIRI 모형의 개발로 인해 국제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경제 대내외 충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거나 보험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초회보험료 및 수입보험료 전망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변액연금 사업비 체계 다변화 방안

진 익(연구위원)·이성은(연구위원) | 보고서

40

**연구배경** 최근 변액연금 사업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커지는 상태에서 외견상 보험회사 이익의 대부분이 사업비와 관련된 비차익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금융선진 각국에서도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체계 개선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사업비 체계 변화에 따른 편익은 확대하는 한편 비용은 축소할 수 있는 보험회사 가격전략, 정책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소비자와 공급자가 상생할 수 있는, 즉 보험산업 지속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 체계를 탐색하는 것이 분석목적이다. 변액연금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회수에 적합하고 금융소비자 불만을 해소하여 변액연금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변액연금 사업비 체계를 확인하고, 현 체계의 특징, 사업비와 연동되어 있는 계리제도 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현 사업비 체계에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한다. 끝으로 사업비 체계 변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회사 가격전략,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만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수익도 확대될 수 있는 사업비 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선취방식과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 후취방식 사업비 체계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사업비 체계가 현행 선취방식에서 대안적인 후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회사 수익에 나타날 영향을 평가하였다.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후취방식 사업비 체계에서 보험회사의 수익이 보다 증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검토하였다.

최근 타 금융업권 유사상품과의 수익률 비교 공시, 사업비 부가내역 공시 강화 등에 따라 후취방식 사업비 체계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변액연금의 보장 내역,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등)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선취방식에서의 해지 시 낮은 해약환급금, 낮은 수익률 등의 금융소비자 불만요인이 후취방식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후취방식 사업비 체계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회사가 후취방식 사업비 체계를 도입하였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소비자 만족과 보험회사 수익 제고가 가능하도록 사업비 체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비 체계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해약공제액, 신계약비 이연,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등의 보험계리기준의 조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으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후취방식 사업비 체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보험회사 관점에서 후취방식이 선취방식 대비 불리하고 보험회사 수익성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후취방식에서의 사업비 재원 확보 기간이 현행 선취방식 대비 보다 길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후취방식 사업비 체계를 활용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의 영업유인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금융소비자에게는 선취방식이, 보험회사에게는 후취방식이 보다 유리하다면, 이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경영환경 변화 방향을 고려하면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업비 체계를 다변화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변액연금이 빠르게 성장하여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만약 타 금융업권의 유사 상품에 대비하여 변액연금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변액연금의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사업비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방식의 사업비 체계들을 비교하여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매력적일 것이다.

그런데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계리기준의 조정을 통해 일정한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비 체계 다변화가 보험회사 관점에서 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후취방식 사업비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만족과 보험회사 수익이 모두 증가하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하다. 즉 금융소비자가 선취방식에 비해 후취방식을 보다 선호한다면, 보다 높은 수수료 총량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 영업이익, 판매채널의 수입도 증가할 수 있다. 위험을 공유하는 대가인 추가적 위험프리미엄, 유지율 개선, 변액연금 장점에 대한 금융소비자 인식 제고 등이 가능하다.

**결론** 보험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비 체계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리기준의 조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해약공제액, 신계약비 이연,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등의 기준이 사업비 체계 다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액연금 사업비 체계 다변화를 위해 과거법 해약환급금, 표준해약공제액 등과 관련된 보험계리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 지속성장을 위한 보험판매채널의 미래전략

황진태(연구위원)·박선영(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보고서

42

**연구배경** 최근 글로벌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으로는 M&A 등을 통한 국제보험시장 확대로 경쟁심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국제적 규제 강화, 인터넷 및 모바일 등 디지털기술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기술 확산으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업 영업행위 및 관리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저금리·저성장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IT기술 발달을 들 수 있는데,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둔화와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저가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IT기술 발달로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험판매채널 관련 환경으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GA채널 모집질서 문란, 규제당국의 민원감축 요구에 따른 법규준수리스크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현황과 이슈를 간략히 살펴본 후, 각 채널별 경쟁력, 성장성을 전망·평가하고 각 보험회사의 경쟁지위별 채널경쟁을 제시하며, 멀티채널 전략에 대해서도 제언한다.

**주요내용** 최근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미래 채널전략의 기본방향을 설계사 등 전통적인 대면 채널은 자문서비스 제공 중심, TM, CM(인터넷) 등의 저비용 비대면 채널은 판매 중심형 채널로 발전하는 것에 들 수 있다. 대면 채널의 경우 고비용이라는 약점으로 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전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복잡하면서도 고가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능력 배양이 시급하다 하겠다. 반면, 저비용에 해당하는 비대면 채널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문서비스 제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저비용 채널의 장점을 살려 저가 상품 중심의 판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널전략을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전속설계사 채널의 경쟁력이 다른 채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설계사 채널의 성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다양한 채널의 등장으로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이 지속되거나 또는 설계사의 법적 지위가 변하거나 수수료 분급이 확대될 경우 전속설계사 채널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설계사 채널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동인에 해당될

보험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해 지고 있다. 보험회사는 회사의 경영목표, 위기 시 관리능력, 보험시장 내 경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 있다. 종합하면, 설계사 채널은 향후 고능력 설계사 양성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독립채널의 경우 금융겸업화 추세 지속 예상으로 그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독립채널의 장점은 소비자의 다양한 (복합)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자문서비스가 강조될 미래 환경에 적합한 채널이라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모집질서 문란,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성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여부에 따라 독립채널의 성장성이 가능될 것이다.

TM, CM 등 신채널은 IT기술 발달과 저가 상품 니즈 증가 예상으로 향후 성장성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험회사들도 최근 이러한 저비용 채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채널은 다른 채널의 보완적 역할 수행도 가능해 보완적 채널믹스 전략 차원에서도 고려의 대상이다.

한편, 경쟁지위별 채널경영전략으로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리더형, 챌린저형 보험회사의 주력채널이 전속설계사 채널인 만큼 이들을 고능력화하여 생산성 및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자들의 특성이 과거의 소극적인

컨슈머로부터 점차 적극적인 행동양식을 가진 프로슈머(prosumer)로 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다양한 채널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니치 및 팔로워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자사의 경영노하우를 살린 특화전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시장 또는 틈새시장에 맞도록 채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직판 또는 전속설계사 채널 기반이 약해 방카슈랑스와 GA 등 독립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보험회사의 경우 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지분참여나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속 성격의 채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론** 이러한 개별 채널전략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멀티채널 전략을 구사할 경우 복잡한 환경변화, 보험회사의 경영목표, 위기 시 관리능력, 보험시장 내 경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채널 다변화를 위해 신채널 도입 시 기존 채널과의 마찰을 피하고, 이들 신규채널 간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을 탐색하는 고객이 구매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채널 간 통합이 중요할 것이다.



Chapter

3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 건강보험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IFRS 회계정보를 활용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의 한계와 과제
-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건강보험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조용운(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보고서

46

**연구배경** 그동안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판매에 적극적이었지만 수익을 얻기보다는 대규모 손실의 발생 그리고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잠재보험금지급규모의 추세를 분석하여 최근의 보험료 상승현상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노후의료비의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연령별 진료비 지출증가율을 분석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의료비보장보험제도의 설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이후 1인당진료비 증가율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입원의 경우 0-64세 군은 연평균 3.4%(외래는 4.4%), 65+세 군은 7.9%(외래는 8.4%)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자입원의 경우 0-64세 군은 연평균 4.1%(외래는 4.5%), 65+세 군은 10.5%(외래는 8.5%)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05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이 진료비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입원의 65+세 군은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연평균 11.4%(외래 7.6%),

총본인부담진료비는 17.5%(외래 13.4%)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계되어 그 차이가 6.1%p(외래 5.8%p)로 나타났다. 즉, 65+세 군의 인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 연령군의 총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자입원의 0-64세 군은 그 차이가 2.4%p(외래 1.6%p)로 나타났다. 여자입원의 65+세 군은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연평균 14.2%(외래 6.7%), 총본인부담진료비는 20.1%(외래 11.3%)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계되어 그 차이가 5.9%p(외래 4.6%p)로 나타났다. 즉, 65+세 군의 인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 연령군의 총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자입원의 0-64세 군은 그 차이가 1.5%p(외래 0.6%p)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특히 고령자의 본인부담진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원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진료비의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 보험회사는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진료비 증가 추세를 적절히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과 함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IFRS 회계정보를 활용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의 한계와 과제

김해식·조재린(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대외적으로는 2013년 6월 2단계 IFRS 4(IFRS 4 phase 2, 보험계약)의 개정 공개초안(the 2nd Exposure Draft)이 발표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중 IFRS 4 phase 2 최종기준서가 발표되고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보험부채 時價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최근 EU 보험감독당국(EIOPA)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Solvency 2를 이르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시행 관련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Solvency 2를 벤치마크로 삼아 온 국내 금융감독당국 역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제도 개혁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회계제도가 사실상 하나의 회계체제라고 할 수 있고, 2011년 각국의 회계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IFRS 4 phase 1이 시행 시에 금융감독당국이 비상위험준비금, 보험부채적정성평가, 재보험자산 등의 단서조항을 감독규정에 모두 수용함으로써 향후 IFRS의 변화도 감독규정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IFRS 4 phase 2의 내용이 금융감독당국의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활용되는 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회계정보를 활용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예상손실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초과하는 자본, 즉 지급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보험회사 자본규제의 핵심이다. 이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는데에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표시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국제 추세는 자산의 시가평가에 맞춰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일반회계의 IFRS 4 phase 2나 감독회계의 Solvency 2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Solvency 2가 적용되는 EU 회원국들은 별도의 감독회계인 Solvency 2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지급여력평가도 여기에 따르는 형태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더불어 IFRS를 지급여력평가에 활용하는 형태이다.

국내의 경우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IFRS 4 phase 2를 활용한 캐나다식 지급여력평가가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회계, 계리 등의 시장인프라 부족으로 IFRS4 수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IFRS4와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감독규정의 이원화가 효과적인 연착륙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FRS 4 phase 2가 제시한 내용의 시행이나 국내 보험시장의 회계, 계리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해외 선진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

우선, IFRS 4 phase 2의 내용을 보면, 보험부채를 구성하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서비스마진 항목 등에서 Solvency 2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미래현금흐름의 경우 Solvency 2와 IFRS 4 phase 2의 보험계약에 대한 정의가 달라 현금흐름의 범위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험부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할인율의 경우 Solvency 2가 무위험수익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IFRS 4 phase 2는 무위험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할인율 모두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현행 할인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 보험시장보다 부채 증가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험부채와 관련하여 Solvency 2는 이미 현금지출이 일어난 신계약비를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IFRS 4는 신계약비의 일부를 현금흐름에 포함시켜 암묵적으로 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위험조정인 경우 IFRS 4는 향후 다양한 기법의 발달을 고려하여 위험조정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Solvency 2는 자본조달비용(cost of capital)만을 허용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IFRS 4가 원칙

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무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Solvency 2는 상대적으로 특정 방법이나 세부 기준 제시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IFRS 4 phase 2 적용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선택을 입증하는 관행이 정립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회계감사와 보험데이터 축적, 계리분석 등 회계, 계리 등 시장인프라의 부족이 장애가 될 것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업의 경우 대형사는 최대 7년 중소형사는 최대 7.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Solvency 2의 경험을 통해 IFRS 4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유럽과 달리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모두에서 경험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 보험시장에서 부채시가평가와 지급여력강화의 동시 시행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 부채시가평가라는 회계규제는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지급여력규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IFRS 4와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감독규정의 이원화가 효과적인 연착륙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조재린(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추세는 단순한 담보금 요구방식에서 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대응하여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으며, 점차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감독당국도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체계를 EU Solvency I에서 2011년 RBC 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국제 지급여력규제의 변화에 따라 RBC 강화가 시행 중이며, 부채적정성평가 강화도 예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내 지급여력제도 강화와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과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지급여력규제 체계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억제,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부터 보험회사의 요구자산 산출에 적용할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IFRS4 phase II 준비금 시가 평가에 대비하는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저금리에 따라 표준이율이 인하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가격규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 강화 플랜이 국제적인 추세와 관련 규제 간 상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관련한 국제적 추세의 공통분모는 정량평가의 위험 세분화와 정량으로 파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정성평가의 강화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5년부터 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유럽은 Solvency II의 시행 시기를 2016년 이후로 예정하고 상황에 따라 정성평가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 준비금 시가평가에 관한 회계규제의 시행은 2018년부터 적용될 것이 유력하며, 이때 국내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비금을 지금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 대응은 지급여력규제 대응보다 회계규제 대응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급여력규제는 준비금 규제, 보험료 규제, 자산운용규제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관련 규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가격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이 보험 회사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료 규제와 자산운용규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급여력강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유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있다.

이에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준비금시가평가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가 동시에 시행되면 중·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전액 내부유보 하더라도 현행 권고수준인 RBC 비율 150%를 회복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5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채시가평가만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RBC 비율 150% 회복에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 분석은 추가적인 가격규제 없이 수익성 등 다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분석임을 주의해야 한다. 즉, 현재의 수익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RBC 비율 150% 회복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가격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이 보험회사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료 규제와 자산운용규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급여력강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유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결론** 먼저 영향평가 결과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부채시가평가의 분리 시행이 바람직하며, 부채시가평가에 대한 재량권이 없으므로 시가평가에 대비한 부채적정성 평가 강화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급여력규제 강화는 부채시가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량규제는 2016년까지 회사별 특성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2년간의 영향 평가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성평가는 보험회사 관점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ORSA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ORSA를 시행할 것을 제안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지급여력규제에 따른 보완 조치로써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상시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재보험 및 파생상품 활용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수익성 유지를 위한 보험료 결정 자율권 보장하는 등 시장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익의 적극적인 내부유보를 통한 실질적인 자본확충 노력과 전사적 위험관리(ERM) 강화를 통한 자사에 맞는 자본적정성 확보 등 능동적인 지급여력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Chapter 4

##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 국내 경제의 장기부진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 역모기지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안
-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세제 효율화방안
-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국내 경제의 장기부진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윤성훈(선임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보고서

52

**연구배경**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이후 저물가·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이러한 일본 사례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가 훼손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조정으로 수요가 부족해짐에 따라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부채 조정 과정을 경험하였던 일본 사례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도 금융기관 부실, 정책실패 및 일본의 구조적 문제 등에서 부채 조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과는 달리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심화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에 대해 2000년대 초반의 연구와 최근의 연구를 비교하는 한편, 부채 조정이라는 최근의 해석과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고령화 등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부진 가능성을 검토한다.

**주요내용** 2005년 이전의 연구와 이후의 연구를 종합하면, 인구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둔화와 자산 가격 폭락이라는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부채 조정, 그리고 위험회피 성향 확대에 의한 소비와 투자 감소가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의 연구에서 지적된 일본 경제의 장기 부진 원인으로는 통화정책 실패와 은행 부실, 유동성 함정 등이 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실패가 장기불황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의 부채 조정이 통화정책을 무력화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이 실물경제 부진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물가하락의 원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신용경색은 존재하지 않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 조정과 이로 인한 고정 투자 및 위험자산 투자 감소가 일본의 장기불황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업의 투자는 신규투자보다 시설유지와 관련된 감가상각투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재원 측면에서도 은행대출 감소, 자산매각,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하는 자금조달 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부채 조정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분석되었다. 가계자산 감소, 가처분소득 감소, 미래에 대한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은 자산가격 폭락에서 촉발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조정, 이로 인한 고정투자 및 위험자산 투자 감소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의 자금잉여와 기업의 자금 부족 축소,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가 나타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가계 소비가 감소하였다. 임금상승률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자산가격 하락으로 저축 여력 또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GDP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급격히 확대하였는데, 재정지출 확대가 일본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막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둔화와 마이너스 GDP 갭 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도 가계와 기업의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 자금 공급원인 가계의 자금 잉여가 줄어들고 있고, 자금부족 부문인 기업의 자금 부족이 줄어들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실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위축은 내생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져 장기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    국내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20년 전의 일본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가계부채 위험은 상당한 수준이고 기업부채와 구조조정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복지욕구 확대로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2000년 이후 지속되어온 성장 둔화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주체의 위험회피성향을 확대시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지출 확대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장기간 적자재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가계/기업 부채비율, 부동산 가격 하락, 인구 고령화 등 장기부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로부터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부진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역모기지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박선영(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보고서

54

## 연구배경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가 예상되면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역모기지는 주택과 부동산 등 비유동화 자산은 충분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이 주택지분을 현금화해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으로 대내외 보험사들이 주목해온 시장이다. 최근 미국정부는 고령층의 consumption smoothing과 은퇴 재원의 주요 지출 항목인 간병비 마련 차원에서 주택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 이하 LTCI)을 연계하고 LTCI 비용지출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미국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2004년 The American Homeownership and Economic Opportunity Act of 2000의 일환으로 LTCI 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택연금을 LTCI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역모기지와 LTCI의 연계는 공·사보험 연계(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를 통한 합리적 재원마련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걸맞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는 노령층의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운영 차원에서 주택지분 활용방안을 주택연금 중심으로 살펴보고 간병서비스 재원마련 차원에서 주택연금의 활용방안을 점검한다.

## 주요내용

주택지분을 활성화해 이를 현금화하는 역모기지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간병위험에 대비하는 역모기지 연계 간병제도 도입 방안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고는 역모기지를 연계한 간병제도 도입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세제혜택 지원방식으로 역모기지를 통해 간병비 지출을 충당할 경우에 간병비 지출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2013년 연금 세법개정안에서 연금계좌에서 사용한 노후의료비 지출을 연금 수령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는데 이를 간병비 지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 성격의 장기요양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공사 파트너십 형태의 간병제도 마련을 제언하는 바이다. 공사 파트너십의 경우 간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가 서비스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민간 기관들이 역모기지 대출을 취급하고 정부가 이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역모기지 대출을 말한다. 셋째, 연금, 생명보험, 간병보험이 결합된 하이

역모기지과 LTCI의 연계는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합리적 재원 마련이 가능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역모기지를 연계한 간병제도 도입방안으로 역모기지를 통한 간병비 지출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 공사 파트너십 형태의 간병제도 마련, 주택담보형 간병보험의 도입을 제안한다.

브리드 간병보험이 새로운 추세로 각광을 받으면서 제3세대 하이브리드 간병보험의 일환으로 주택담보형 간병보험의 도입을 제안한다. 보험회사가 역모기지 대출을 취급하고 이 자금의 일부로 LTCI 특약이 부여된 즉시연금에 가입토록 하는 패키지 형태의 영국의 **lifetime mortgage**와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단, 주택가격 하락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신용생명보험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주택 담보대출 관련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활성화도 필요하다.

역모기지 연계 간병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하는 바이다. 주택설정형 간병보험을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으로 특화해 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속성 보험” 즉 “끼기”를 막기 위해 대출 취급업자가 보험판매 업무를 공동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의 「대출취급자 보험상품 판매 금지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사한 신용생명보험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법규정 부분의 보완도 필요하다.

**결론**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고 은퇴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위협받으면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적 추세 속에서 역모기지 연계 간병제도 도입 방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안

이창우(연구위원)·김동겸(연구위원) | 보고서

56

**연구배경**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해 효율성보다는 재원의 형평성, 의료접근성 등 형평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목표는 국민의 건강(Health), 재원의 형평성(Fair Financing), 기대부응(Responsiveness)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전달, 의료자원, 재원, 관리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목적과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체계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은 공평한 재원을 통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의료비를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평한 재원의 목표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또한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을 통하여 재원이 조달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까지 고려할 때 전체국민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영의료보험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심사 혹은 계약 등의 기능이 미비하여 의료공급측면에서 의료비관리기능이 미약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민영의

료보험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재정과 의료비관리의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의료비 관리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주장하는 문제점의 사실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이 효율적 의료비 관리에 방해가 되는 존재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실증분석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생하면서 의료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액형 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이용과 외래이용이 비가입자보다 많다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정액형 의료보험의 가입으로 의료이용을 많이 하며 이러한 결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며 최종적으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액형 의료보험은 소득보상 혹은 상병수당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복가입 등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본 연구결과는 이전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실손형 의료보험은 부가적 보장을 원하는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질병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과 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반면 실손형 의료보험은 입원이용여부의 결정과 외래이용여부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입원이용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가입자와 동시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입원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적 함의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외래이용여부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외래이용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에서 제시하는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실손형 의료보험이 직접적으로 외래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결론** 실증분석 결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는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외래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입원이용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가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였을 때의 의료이용량 증가 효과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부가적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늘려 전국민에게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보다 실제로 수요하려는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더 유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실손형 의료보험의 역할은 부가적 보장을 원하는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발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복구를 원하는 개인들에게 재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세제 효율화방안

정원석(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 | 보고서

58

**연구배경** 늙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아쉬움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수반하는데 그중 노후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이러한 노인빈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후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노후소득의 두터운 보장을 위한 가입동기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4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소득공제방식은 소득공제율이 세율과 같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높은 공제율로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리고,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은 더 낮은 공제율로 더 적은 절세효과를 누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도부터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지원방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예상되는 경제주체의 반응을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 기존의 소득공제를 가정할 때 과세표준액이 1억 원인 A와 과세표준액이 1,000 만 원인 B가 400만 원을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A는 한계세율 35%를 적용받아 140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고 B는 6%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아 24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개인의 세율과 관계없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일률적으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A와 B 모두 48만 원의 절세효과를 얻게 되어 앞서 적시한 세제혜택의 역진성 문제가 줄어들게 된다. 2012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좀 더 실증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가계에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세액공제를 통해 받게 될 경우 소득공제 대비 약 14만 원 정도(약 50%) 증가한 반면 3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에서는 절세금액이 소득공제 대비 약 49만 원(58%) 줄어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처분 소득의 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가입여부와 가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소득계층별 개인연금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구하였다. 그 결과 가입자 중 하위 25%를 기준으로 한 저소

바뀐 세액공제제도에 따라 중간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의 가입률 및 가입액은 개인연금 수요에 대한 작은 소득 탄력성으로 감소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공제로 전환 시 발생하는 환급액 차액을 개인연금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고, 고소득층의 한도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하여 개인연금시장은 키우면서 조세수입 감소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득계층의 개인연금저축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간소득계층의 개인연금저축수요에 대한 탄력성은 유의미하며 탄력성도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상위 25%를 기준으로 한 고소득계층의 개인연금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탄력성의 절대값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를 종합하면, 바뀐 세액공제제도는 소득공제제도에 비해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중간 및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각 소득계층별 개인연금에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중간소득층의 탄력성이 크므로 중간소득층의 개인연금가입률 및 가입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은 감소하나 개인연금수요에 대한 소득의 탄력성이 작으므로 개인연금가입률 및 가입액의 감소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해 본다면, 첫째 시뮬레이션 결과 세액공제로 전환 시 소득공제보다 전체 환급액은 적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그 차액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로 고소득층의 개

인연금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작게 나오는 이유는 400만 원 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400만 원 한도는 높여주면서 세액공제율은 낮게 제공할 경우 개인연금의 전체 파이는 키우면서 조세수입 감소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론** 노후의 경제적 위험을 위한 대비가 공적영역으로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함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다. 세계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은 노후보장의 사적영역의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 하겠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도의 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노후보장의 설계 및 지원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이태열(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보고서

60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현세대 노인층의 경우 자살율과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사회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7년 후인 2020년부터는 스스로 급격한 고령화의 주체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별다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0년대 이후의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욱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 잠재력의 소진에 따라 국가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적, 사적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내용** 국민연금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지속이,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적복지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부문도 여유있는 계층 중심으로 보장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는데다 최근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이념, 계층, 이해집단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복지에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큰 폭의 개혁보다는 완만하고 점진적인 부담 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재정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부터 매년 0.15%p 수준으로 요율을 완만히 인상할 경우 2054년에 15.0%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추가 요율 인상 없이도 기금 고갈 시점은 2070년 이후로 크게 후퇴하는 등 재정안전성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의 출산율 개선, 근로여건 개선, 이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체제 변화와 같은 개혁은 미래세대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약 1.5% 수준의 추가 수입 증가(매년 0.1% 수준의 요율인상과 유사)로도 재정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요율 인상의 부담을 완화

공공복지는 점진적인 부담증가와 같은 현실적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재정 안정성을 개선해야 하고, 민영 부문은 공공 복지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취약분야에 대한 보장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과제이다.

시키기 위해서 피부양자를 축소하거나 총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급여 대상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료 정보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정보포털과 같은 접근성이 뛰어난 정보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영 부문의 경우 공공복지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장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과제이다. 노후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를 5분위로 분류하여 추정한 결과, 중위층(3분위)의 노후 소득은 사적연금의 충실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적연금은 중위층의 노후 소득 확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보장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과 이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민영부문이 공공부문의 의료비 억제 노력에 동참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며, 공

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 속에서 비급여 표준화 및 제3자 청구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결국, 현대대가 공적 복지 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담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민영부문은 고령층이나 중위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여 국민의 복지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조용운(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김미희(연구위원) | 보고서

62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기관과 10여개 기관에 불과한 전문건강관리서비스기관 등이 극히 일부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가 일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된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현재 건강관리서비스(질병관리+건강생활관리)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업에 국한하여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보험산업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모형을 구상하여 보험산업이 국민건강증진, 의료비 절감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산업은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이다. 공·사건강보험자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즉, 지급보험금을 줄이고자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및 호주의 경우 공적 보험자는 보험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민영보험회사 등의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공급자와 위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단체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고, 공적 보험자, 자가보험을 제공하는 중대형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건강보험 회사들은 외부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제공자 혹은 대형건강보험회사와 위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은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비의 급증을 경험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결론** 1인당 실질 GDP에서 1인당 실질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이 지난 10여년 간 연평균 미국 1.6%, 일본 2.6%, 호주 1.0%에 비해 우리나라는 4.6%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정부 그리고 공·사건강보험자의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수요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 산업보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산업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공급하여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Chapter 5

## 금융·보험 제도 개선 및 선진화

-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공시 개선방안
- 보험산업 자유화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연구
-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보험업 시장분석 연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 보험업 시장분석 연구: 재보험
-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II)

#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공시 개선방안

김해식(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재무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비 규제, 민원 감축 및 보험상품 공시 개선 작업 등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등장이라는 감독체제의 변화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험회사가 판매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품설명서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과 다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 보험협회에서 얻고 있는 상품비교정보(이하 비교공시)가 현재보다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국내 보험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비교공시정보를 제공하는 보험협회채널은 소비자가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매단계의 소비자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상품설명서 개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교공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상품설명서의 개선은 소비자의 보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얻는 채널이 다양할수록 보험 이해도가 높고 그 채널이 비공식적인 채널과 비교해 공식채널일 경우 소비자의 보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보험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전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변액연금의 상품설명서 요약본(구 핵심설명서)을 모델로 하여 그 내용을 소비자가 상품구매에서 보험금 수령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묻고 답하는 스토리텔링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바꾸어 개선안(신 핵심설명서)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상품설명서 자체의 분량을 줄이는 시도는 많았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소비자와의 방대한 계약 사항을 풀이하고 있는 상품설명서 자체의 분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품설명서가 판매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오히려 상품설명서는 그대로 두고 이를 1~3쪽

보험소비자의 주된 정보획득경로를 고려할 때 상품설명서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내용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별도의 핵심설명서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공시에서는 소비자 인지도 개선이 시급하고, 비교공시 검색 기능이 개선되어야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요약한 핵심설명서를 통해 판매자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살펴볼 여유를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때, 핵심설명서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나 가입설계서 등의 내용과 연결되도록 참조 표시를 달아 판매자에게는 유용한 설명지침서로, 소비자에게는 상품설명서 내의 요약본이 되도록 하였다.

소비자 실험은 20대 이상 성인 남녀 일반 소비자를 A(구 핵심설명서), B(신 핵심설명서), C(두 핵심설명서 모두)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핵심설명서를 보여준 후 상품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비자 실험을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소비자가 그룹에 관계없이 신, 구 핵심설명서 모두의 짧은 분량과 일목요연한 설명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둘째, 그런데 핵심설명서를 읽고 난후 치러진 소비자 이해도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구 핵심설명서를 읽은 소비자보다 신 핵심설명서를 읽은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핵심설명서를 모두 보고 주관식으로 평가한 C그룹에서도 개선안이 더 이해하기 쉬우며 구매를 결정할 때에도 개선안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하고 있다. 다만, 신뢰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핵심설명서를 읽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

다고 판단한 데에는 질의응답 형태와 글씨 크기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용어 풀이, 그림 및 예시 활용, 색상 사용 등이 이해에 도움이 된 반면, 법률용어 사용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품설명서의 경우 1~3쪽 분량의 핵심설명서가 모든 보험상품에 제공될 것을 제안하며, 개선안이 향후 핵심설명서의 내용과 형식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교공시 활용과 관련하여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체험에서는 모집수수료가 저렴한 상품과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찾는 데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어려운 용어와 도움말 부족, 검색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의 부재, 회사별 비교가 어려운 결과 배치 등이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검색 기능 개선과 함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는 판매단계에서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상품설명서는 핵심 내용을 이야기에 담아 질의응답형으로 전달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비교공시는 검색 기능의 개선에 해답이 있다고 제안한다.

# 보험산업 자유화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최 원(선임연구원)·김세중(선임연구원) | 조사보고서

66

**연구배경**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현재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험산업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관점을 자유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환경 및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자유화라고 하면 1990년 후반부터 추진된 시장개방과 보험산업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이후 보험시장 개방과 보험요율 자유화가 마무리된 2000년대 초반까지 요율자유화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루어진 자유화와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보험요율에 국한된 것이며 단순하게 사실을 나열한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대하여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하여 보험산업 발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다양한 자유화에 대한 정의 가운데 우리는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두 가지를 충족하는 시장을 ‘자유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보험시장 개방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외환위기를 촉매로 이루어졌으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은 1980년대 초반 대미 통상압력이 가중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생·손보 간의 시장개방 정도의 차이를 근거로 미국은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하여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빠르게 개방되었다. 그리고 시장개방과 함께 규제 및 제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으나 당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선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OECD 가입 및 외환위기로 인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실한 보험회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 외환위기에 따른 보험산업 구조조정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이루어진 1980년대 보험시장 개방 이후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충족하는 시장을 '자유시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OECD 가입 및 외환 위기로 부실 보험회사의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보험요율이 자유화 되었다. 보험시장 개방과 요율자유화 진행에 따라 인가제도 간소화, 보험상품 다양화, 소비자중심 판매채널로의 변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상품개발의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제는 진행되었다.

에도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질적인 향상을 보여주지 못했던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보험산업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이 개발되고 판매채널의 전문화도 이루었다. 외환위기 이후 추가 시장개방의 성과가 이전에 이루어진 시장개방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개방 과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보험요율 자유화에 대한 문제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금융자유화의 우선 과제인 금리자유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험요율 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요율자유화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비교적 영향이 적은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정요율을 범위요율로, 그리고 자유요율제도로 보험요율을 자유화하였다. 보험요율이 자유화 된 이후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와 더불어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요율자유화 이후에도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험시장 개방 및 요율자유화와 더불어 규제완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 판매채널, 소비자보호 등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시장 개방과 요율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인가제도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보험상품 다양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판매채널의 경우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판매채널에 활용할 수 있는 IT기술과 관련 매체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소비자 중심의 판매채널로 변화하였다.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과 관련한 감독규제는 점차 상품개발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의 종류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결론** 보험산업의 경우 성숙한 보험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역할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산업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자유화는 대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 이루어진 규제완화 과정은 선진화된 규제 수준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개방의 시기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험산업 자유화는 보험산업 내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완화 과정은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 선진화된 규제수준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향후에도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보험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연구

기승도(수석연구원)·김혜란(연구원) | 보고서

**연구배경**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의 자유화의 흐름과 여론의 흐름은 그 속성상 상반된다. 상반된 두 흐름은 시차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으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두 양상의 충돌은 운영구조의 혁신적인 개편이 있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운영구조의 어떠한 부분이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하는 근거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 해소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현재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제도는 사회계약의 일종이다’ 라는 전제하에 현 운영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사회구성원은 자동차보험관련 사회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구성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정한 가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이기심을 모두 배제할 수 있도록 무지의 장막 가정이다. 무지의 장막하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지 못한다. 즉 자신의 성별, 피부색깔, 재산정도, 학력 등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사회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무지의 장막하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구조를 도출해본 결과, 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을 규제해야 하는 담보와 자유화해야 하는 담보로 구분하여야 한다. 규제담보는 대인배상사고 및 대물배상사고 담보이며, 자유화담보는 이 두 담보를 제외한 모든 담보이다.

둘째, 규제담보와 자율담보의 보상한도 등에 대한 내용이다. 규제담보 중 대인배상사고 담보의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하고, 대물배상사고 담보의 가입한도는 차량가액 미만으로 정해야 한다. 대인배상사고담보의 내용은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고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물배상사고 담보는 자동차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목적 등을 포함하여 보상범위를 대인배상에 비하여 대폭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담보는 동 상품을 공급하는 곳(보험회사)에서 자유롭게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상품내용이 사회계약적 관점에서 사회에 해악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상품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규제담보의 요율구조 및 상품내용은 공급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표준상품 및 표준 요율구조)해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의 근거와 해소방안 제시를 위하여 '무지의 장막'을 가정하고 무지의 장막하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구조를 도출하였다.

요율수준은 공급하는 곳(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자율담보는 상품내용, 요율구조 및 요율수준이 동 상품을 공급하는 곳마다 다를 수 있다. 자율담보의 요율수준은 여론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동 담보를 공급하는 회사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 금융당국은 회사들 사이에 경쟁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보험료 공시, 진입규제 완화 등)를 취해야 한다.

넷째, 요율요소에 대한 부분이다. 규제담보의 경우에 유전적요인은 요율차등화요소로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요소의 경우도 사고를 예상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요소도 요율차등화 요소로 사용할 수 없다. 자율담보는 모든 요소를 요율차등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요율차등화요소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기 어려운 정치적 요인과 관련된 것은 사용될 수 없다.

다섯째, 요율수준 결정에 대한 부분이다. 규제담보의 경우, 요율수준은 No-Loss, No-Profit 원칙이 적용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율수준결정에 여론 등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반면에 자율담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요율수준결정에 회사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무지의 장막 아래 있는 사회구성

원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자동차보험제도의 운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 결과, 사회구성원과 합의한 모형과 현재 운영되는 모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운영방법에 대한 것인데 현재는 단일운영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합의한 모형에서는 이원화 운영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모형에 부합되게 현재방법을 이원화하여 운영한다면, 현재와 같이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반복적인 갈등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화운영방법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담보는 상품내용, 요율구조 및 요율수준에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방법은 요율심의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이곳에서 규제담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규제담보 요율수준은 No-Loss, No-Profit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율담보는 상품내용, 요율구조 및 요율수준 결정에서 완전 자유화 되어야 한다. 현재는 자유화 되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자유화의 모습이다. 완전 자유화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선해야 한다.

합의한 모형은 이원화 운영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규제담보는 상품내용, 요율구조 및 요율수준에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자율담보의 경우에는 상품내용, 요율구조 및 요율수준에서 안전 자유화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의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운영모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는 이원화운영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모습이 잘 정착될 경우, 자동차보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정확한 인식이 정립되고,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부합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즉 본질(국민의 인식)과 형식(제도)이 일치됨으로써, 현재와 같이 본질과 형식의 충돌로 인한 반복적 갈등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이승준(연구위원)·강민규(변호사)·이해량(인턴연구원) | 보고서

72

**연구배경** 2000년 4월 부가보험료가 자율화되면서 보험업 요율결정 과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금융감독원의 가격 관련 행정지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료 등 결정 과정에 대해 경쟁당국이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법규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금융위원회의 전문적 보험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 경쟁규제라는 이원적 규제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이원적 규제체계 아래에서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보험회사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보험시장 경쟁규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쟁규제는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모든 산업에서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시장 자유화 기조 아래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

는 크게 대내적 자유화와 대외적 시장개방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독점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과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로 보험회사의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관련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행정지도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보험회사 공동행위 관련 심결사례는 7건이 있다. 이러한 보험시장에 대한 독점규제의 적용은 가격관련 행정지도의 지속과 독점규제 적용제외 조항 부재에 따른 이원적 규제의 상충을 일으켜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험업 공동행위의 경쟁촉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 적용에는 전문적 보험규제와 일반적 독점규제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은 점차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제외 대상 행위를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도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공동행위 등에 경쟁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독점규제 적용의 문제점과

보험시장에 대한 이원적 경쟁규제의 개선방안으로 경쟁규제 법체계 정비,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의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가격경쟁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해외사례로부터 이 연구는 보험시장에 대한 이원적 경쟁규제의 개선방안으로 경쟁규제 법체계 정비,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의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가격경쟁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거대위험이나 불량물건 등 시장실패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정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보험업법에 명시하여 이들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경쟁규제까지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지도는 전문규제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기관 간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험회사 규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시장에는 잠재적 보험소비자를 위한 일반적인 경쟁규제보다 보험회사 경영건전성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다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전문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보험시장의 경쟁규제는 사전적 규제를 풀어 경쟁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혁신을 보장하되,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결론** 보험업은 대수의 법칙과 단체성에 기반한 사업모형을 가지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통계의 집적보험료 산출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공동행

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규제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전문규제당국의 명령과 지침 등은 보험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은 이러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규제와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규제가 피규제기관인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시장에 대한 이원적 경쟁규제의 개선방안으로 경쟁규제 법체계 정비,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의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가격경쟁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보험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바탕 위에서 이원적 규제에 의한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을 통한 소비자후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II)

이기형(선임연구위원)·이승준(연구위원)·김경환(수석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 고온, 한파,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의 증감 폭이 커져 농가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안정망 장치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따르면 현 정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하여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강화하려는 기초를 갖고 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임산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가입률도 낮아 실질적인 임가 소득안정망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며 임목에 대한 재해보험도 미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임가의 종합적 재해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의 제도적, 기술적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용역은 2012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구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임산물재해리스크 관련 보험제도 운영현황 및 수요요인 분석을 통해 각 품목별 임산물재해보험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산물재해보험의 확

대·도입 및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보험의 효용성과 보험실시가능성을 각 작물별로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임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는 품목을 이전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연구에서 수립된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임목에 대한 재해보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상품운영의 기본이 되는 보험약관 등과 같은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험요율은 임종, 임상, 소유구분, 영급에 따른 등급요율을 기본요율로 산출하였고 단기계약 할증, 계속계약 할인 등 개별요율과 작업위험담보, 벌(풍)도목위험담보 등 특약요율을 적용하였다.

둘째, 임목가치 평가의 기초자료 및 보험금과 보험료의 산정, 손해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목을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기반해 평가하여 수종·수령별 임목표준금액표를 산출하였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 절차 및 손해사정 조직 운영과 분쟁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존을 담보하는 보험목적물의 특성상 일반 재물보험과 손해사정 단계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2012년 연구에서 수립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임목에 대한 재해보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임산물재해보험의 확대·개편에 핵심자료로 활용되어 임업경영에 대한 위험관리체계의 선진화로 임가의 소득안정망 개선, 산림경영의 안정과 임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사전적 위험관리 유인 증가, 이산화탄소 감축 및 거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 있는 혼돈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손해사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임산물재해보험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위험분산방안과 시범사업 운영방안, 보험제도의 정착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임산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을 위해서는 국가재보험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단, 임산물재해보험은 담보리스크상 거대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국제 재보험시장에서 재보험담보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사업자(산림조합)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재해보험과 다른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과손해를 90%의 비례재보험방식을 제안한다.

한편 시범사업은 사업자의 경험 부족 및 임산물재해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사업기간을 달리 정하고 2년 이상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지리적 요인(산림율, 사유림비율)과 실질적 요인(사유림 입목축적, 사유림 산주당 면적)을 고려하여 총 2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대상 수종은 인공림, 육성천연림으로 한정하며, 보험가입 최소면적은 1ha로 제한한다. 또한 1ha 이상 산주 및 비시범사업지역에서 산림을 본업으로 하는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이 가입대상이 된다.

끝으로 보험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홍보전략을 수립·실행하며, 임업정책자금

수혜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은행권 대출자에 대한 임산물재해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해복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자발적인 위험관리간행을 제고시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임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임산물재해보험의 확대·개편을 위한 핵심자료로 보험제도화 및 확대시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임업경영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재해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존함에 따라 임가의 소득안정망을 개선하고 산림경영의 안정과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자연재해 복구비가 다수 임가의 보험료지원 예산으로 사용되어 사전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임목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이산화탄소 감축 및 거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Chapter

# 6

##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CEO Report
- KiRi Weekly 이슈
- KiRi Weekly 포커스

## 보험금융연구

78

### 금융소비자의 변액연금 수수료 체계 선택에 관한 연구

진 익(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3호

본 연구는 향후 변액연금 수수료 체계가 다변화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선취방식만이 제공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금융소비자의 요구, 금융정책당국의 개입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수료 체계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금융소비자가 하나의 방식을 다른 방식에 비해 선호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액연금 가입 시점에서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제시될 때 합리적인 금융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로부터 금융정책당국의 시장개입과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액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수용할 의향이 있는 판매·유지수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포괄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금융소비자는 설사 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변액연금에 가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기피적인 금융소비자는 현행 선취방식에 비해 변동성 위험 공유가 가능한 후취방

식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둘째, 금융정책당국은 변액연금 수수료가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수렴해 가도록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당국이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이 검증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수료 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수료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교공시를 보다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보험회사는 경영전략 차원에서 수수료 체계의 다변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 계약을 장기로 유지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선취방식이 보다 유리하므로, 그러한 금융소비자에게 영업을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선취방식과 후취방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위험성향의 금융소비자로부터 연금수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영전략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변액연금 수수료 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한 연구로, 효용함수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수익률 변동성, 금융소비자의 위험기피도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보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의 상반된 이해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후취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장수리스크 측정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김세중(선임연구원) |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3호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망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Solvency II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충격방식과 VaR방식, 그리고 스트레스 방식 등 세 가지 측정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각 방식에 대한 모형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하여 확률적 사망률 모형으로 Lee-Carter모형, Currie모형, CBD모형, CBD2모형 등 네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충격방식으로 측정한 장수리스크는 사망률 모형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충격방식이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망률의 분산정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격방식으로 측정한 장수리스크는 저연령과 고연령 모두 사망률 충격이 20%로 동일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수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충격방식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VaR방식으로 측정한 장수리스크도 모든 모형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충격방식과 달리 증가폭은 고연령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별로 연령에 따른 장수리스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VaR방식에 모형리스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각 모형에서 1년 후 사망률의 변동성과 1년 후 사망률의 변

동이 1년 이후 기간의 사망률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VaR방식의 장수리스크가 CBD2모형을 제외하고 충격방식으로 측정한 장수리스크와 유사하거나 작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충격방식이 모든 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측정방식이기 때문에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VaR방식보다 장수리스크를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방식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수리스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VaR방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Currie모형을 제외하고 장수리스크가 충격방식이나 VaR방식에 비해 매우 크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스트레스 방식이 평균적으로 충격방식에 근접하는 신뢰수준은 95~99 백분위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RBC제도에 장수리스크가 도입될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충격방식, VaR방식, 스트레스 방식의 장단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충격방식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수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사망률 개선 정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VaR방식의 경우에는 모형리스크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 방식의 경우에는 모형리스크 반영뿐 아니라 장수리스크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뢰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CEO Report

##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윤성훈(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유럽의 대표적인 복합금융그룹인 Royal Bank of Scotland(이하 RBS), ING, Dexia, KBC, HSBC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보험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축소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RBS, ING, Dexia, KBC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단기자금 중심의 자금조달로 위기 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HSBC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자발적 사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유럽지역의 보험사업 매각과 보험사업과 자산관리 사업의 연계 등 사업범위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원인은 ① 그룹의 신속한 회생(RBS), ② 보험사업 부실 정도(ING, Dexia, KBC), ③ 은행·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 상승(ING, HSBC)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은행·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

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은 고객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과 소매금융상품 판매 시너지 창출 등 은행·보험업 겸영의 장점을 희석시킬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복합금융기관들이 보험사업을 매각 혹은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보험업 겸영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겸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서 업권 분리와 동일 업종 내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산업 감독규제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쟁구도의 변화,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자산운용전략 변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수요-공급 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2013년 말부터 바젤 III가 도입되고 2015년 유동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업권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 KiRi Weekly 이슈

##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0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는 등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주된 이유로는 퇴직급여제도의 이원화(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부재, 그리고 퇴직연금세제(이하 ‘연금세제’라 함) 혜택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과감한 퇴직연금세제 혜택을 통해 가입률이 95%를 상회하는 등 대표적인 퇴직연금 개혁의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는 영세사업장 및 파트타임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사용자 기여금의 납부를 보증하는 강제가입형 보증부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이 1992년에 도입되었다. 특히 호주의 경우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강제가입 시행과 더불어 과감한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기여금에는 15% 최저세율(일시금 기여금은 48%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

는 한편, 50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10만 호주 달러(50세 이하 근로자는 5만 호주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60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급유형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연금재원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2012년부터 저소득계층에게는 불입금의 1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약 1.3조 호주달러로 성장하여 호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시장이 성장하면서 호주의 자산운용시장은 세계 4위로 도약하고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금세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금세제의 혜택을 단순한 세수감소 문제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고령화 리스크(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되,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상향조정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이 일정수준 미달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호주식의 퇴직연금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 및 소득별에 따른 연금세제의 차별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연금세

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금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국제 신용평가기관 기소의 의미

박선영(연구위원)·임준현(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1호

지난 2월 5일 미국 법무부가 구조화 금융상품에 부여되는 신용등급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사기 혐의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amp;퍼어스(이하 S&P사)를 제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의 투명성 여부와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가 되는 구조화 금융상품이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전에 발행한 주택저당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RMBS)과 이를 담보로 발행된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을 말한다.

미국 법무부는 “금융기관 개혁, 정상화 및 집행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이하 FIRREA)의 법률을 토대로 그동안 입증책임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였던 정부 보증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사기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S&P사에 대한 제소건을 필두로 신용등급평가를 둘러싼 잠재적 법적 논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는 FIRREA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 금융사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조화 금융상품 투자시 외

부 신용평가 등급을 참조지표로 활용할 뿐 자체 실사(du due diligence)를 통한 신용위험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한발 나아가 내부적으로 자체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해 외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제도적으로는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평가회사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 도입, 정보공시(disclosure)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강민규(변호사)·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2호

상법 제4편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보험계약법은 변화된 보험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규범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상법(보험편)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마련하여 2013. 2. 5.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하였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 규정이 미비한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중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장

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계약체결 등 행위규제 관련 사항, 보험소비자 보호관련 사항, 개별 보험종목 정비사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험계약체결 등 행위 규제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최대선의 원칙 명문화, 보험대리상 등 판매채널별 권한 규정 신설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둘째,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명시 및 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권 행사 금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제한적 허용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셋째, 개별보험종목 정비 관련하여서는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 규정 신설,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공제에 대한 상법 보험편 규정 준용 규정 신설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험사기방지 관련 규정, 보험계약금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이나 간병보험에 관한 규정, 음주·무면허운전 시 보험자의 면책규정, 피보험자의 자살 시 보험자의 면책규정, 손해방지비용 제한 규정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서 빠져있는데 이는 향후 보험계약법 개정상의 숙제로 남아 있다.

위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므로 보험회사 등 보험업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품설명서, 약관, 운영규칙 등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보험계약체결부터 보험금지급까지 일련의 사업과정을 재정비하여 예상되는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험소비자 만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계부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3호

국내 가계부채 이슈는 가계부채 수준, 증가율, 대출자산의 질(Quality), 풍선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으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측면에서는 그 논의가 제한적이었다. 가계부채 증가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이었다. 가계부채 수준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하우스 푸어(House Poor)에 대한 대책까지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어 왔으며, 신용카드대출 억제 등을 통해 풍선효과를 제한하려는 정책도 제시되었다. 반면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보험계약대출의 특성상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실화

의 영향은 은행권에 비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험권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관리가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와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로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보험계약이 해약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약관대출이 상환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약관대출이 해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장기적 경영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고채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자산운용이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강화 전략은 향후 보험산업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내방형 보험점포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황진태(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4호

최근 들어 보험판매채널의 다변화 추세 속에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내방형 보험점포가 개설되고 있으나, 신규계약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내방형 점포를 활용한 인바운드 영업이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내방형 점포영업은 보험점포에 내방하는 고객에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계약도 체결하는 영업을 말한다. 현재 국내 내방형 점포의

경우 삼성생명이 ‘파이낸스 카페’라는 점포명으로 전국 47곳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삼성화재의 경우에도 ‘이우시랑’을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성과 부진으로 폐점하였다.

내방형 점포는 사실상 전통적인 보업영업 형태인 아웃바운드(outbound) 위주에서 탈피하여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내방형 점포가 활성화될 경우 인바운드 영업에 따른 충성도 높은 우량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유지율 제고 효과도 큰 장점이다. 또한, 이러한 영업적 특징으로 인해 저렴한 사업비 책정도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는 1인 가구 증가 및 보안강화가 예상되는 사회환경으로 설계사를 활용한 아웃바운드 영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내방형 점포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주로 인터넷 상품비교사이트 등 다른 판매채널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내방형 점포가 2012년 현재 3,000개에 달하며, 주로 인터넷 상품비교사이트와 연계된 하이브리드 채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입점판매제도가 있는데, 소매상이나 장례식장 등에 입점하여 고객들이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보험산업은 과거의 채널전략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판매채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혼합하는 채널믹스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한 인바운드 영업과 역경쟁이 발생하는 보험유통시장에서의 통제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는 내방형 점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개인연금 소득공제제도 효율화를 위한 소고

정원석(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25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준비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 정도로 노후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에 정부는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1층에 국민연금과 더불어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을 준비하여 공사가 함께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해 4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으로 2012년도에 약 7,300억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지지논리로 개인의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일어날 추가적 재정요소에 대한 대비 그리고 장기저축활성화를 통한 산업자본 확충 등이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 경제주체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제도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제도는 과세표준액을 해당 금액만큼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높은 공제율(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은 낮은 공제율(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역진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는 형평성 측면

만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효율성의 문제 역시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에 세제혜택의 소득에 대한 역진성 문제를 줄여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일정소득 이상은 일정한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정하고 일정소득 이하는 소득공제율을 120%로 정해서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면 제도의 혜택이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중·저 소득층으로 흘러 갈 수 있을 것이다.

## 재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공동운명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최근 판결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6호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보상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BestRe라는 말레이시아 재보험회사가 한화손해보험의 핸드폰 분실보험을 90% 수재하였으나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보험회사의 무익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운명조항(Follow-the-fortune clause)이 있으며, 이는 재보험회사가 해당 재보험계약상 모든 사항에 있어 원보험회사가 처리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동운명조항은 원보험회사에 대한 재

보험회사의 보상업무 범위를 정할 때 결정적인 해석기준이 되고 있으며, 계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최대신의성실원칙을 이행할 유인이 작아짐에 따라 보상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재보험시장의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재보험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보험계약 당사자들은 과거에 비해 평판에 덜 구애받는 경향이 있다. 둘째, 보험영업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반복적인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이 낮아진다. 셋째,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존재 자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거대손실의 경우 최대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장기적인 거래관계로부터 기대되는 이익보다 커진다.

최근 미국 뉴욕항소법원은 공동운명조항의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이례적으로 원보험회사의 보험금 및 합의금 산정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보험회사가 정한 보상범위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뉴욕항소법원은 원보험회사는 마치 재보험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조치하는 것과 동등한 분별력과 사리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 즉, 최대신의성실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재보험금 회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보험회사는 공동운명조항 적용에 있어서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보상범위 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 재보험관련 상법규정들이 재보험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노후의료비보장 강화방안

조용운(연구위원)·김동경(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7호

고연령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8년 동안 1인당 실질입원본인부담금은 연평균 남성 고연령층에서 8.9%(여성 12.3%) 늘어났으나 남성 저연령층에서는 6.7%(여성 6.7%)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외래의 경우 남성 고연령층 7.5%(여성 6.4%), 남성 저연령층 4.3%(여성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높은 보험료로 인해 고연령층이 가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층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고연령층 본인부담률은 2010년 31.8%에 이르지만 이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고연령층 가입자는 사실상 전무하여 노후의료비로 인한 의료비 빈곤층 발생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원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나 진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이

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고연령층에 대한 중장년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 소득이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을 제안한다. 소득이 있는 중장년기에 노후 의료비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노인용실손의료보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에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실화를 위해 ‘노인용실손의료보험’은 높은 공제수준(high deductible)을 설정하여 가입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 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보험료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남북유럽 복지 비교와 시사점: 보건 의료

이창우(연구위원)·임준환(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8호

2013년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복지 확충과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이를 벤치마크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은 복지재정과 지출의 반면교사의 예로 제시되고 있다.

본고는 남유럽을 대표하는 그리스, 북유럽을 대표하는 스웨덴의 복지 경험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복지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한 연재물 중 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보건의료지출의 형평성 두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와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를 비교한 결과 스웨덴은 효율성(비용 대비 성과) 측면과 보건의료비 지출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한 국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낮은 의료비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의 조합을 보이고 있어 스웨덴이나 그리스보다 열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용대비 성과 측면에서 스웨덴이나 그리스가 벤치마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보건의료지출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스웨덴에 비해 보건의료지출이 상당히 소득역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건의료지출의 소득재분배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비례적인 세금,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럽복지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이창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29호

최근 우리나라 정치민주화가 성숙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요구가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지출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편이며,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복지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유럽 복지정책모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우리나라 복지모형과 달리, 유럽복지모형의 핵심은 “세금을 많이 내고 사회 복지를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유럽 복지모형인 남유럽식과 북유럽식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그리스)는 복지재원대비 복지지출의 관대성(*generosity*)이 재정부담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후자(스웨덴)는 소득재분배기능, 재정건전성 및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이 높은 복지지출에 따른 노동왜곡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여 유럽복지병의 함정에서 탈피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따라서 유럽복지모형으로 얻은 교훈은 형평성, 재정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복지모형은 건전재정과 높은 경제성장을 감안해 볼 때 그리스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형평성기준을 등한시하여 재정의 복지기능이 사실상 미미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 복지모형은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복지지출의 재정부담 효과를 과소평가한 사례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유럽식복지모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증세 시 소득역진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 비중이 늘어나야한다. 셋째, 스웨덴식의 복지모형이 바람직한데 이는 스웨덴이 소득불균형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경제성장도 구가하는 소위 포용성장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복지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국민부담률을 높이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고 자영업자 중심의 서비스업을 기업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직접세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실손의료보험의 한방법정비급여진료비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

조용운(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0호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상품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한방법정비급여 보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하였다. 한방법정비급여 진료항목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상품개발 및 보장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방제제(탕약 등)는 통상 질병치료와 병행하여 체질개선과 건강유지를 위한 탕약 처방이 이루어져 치료목적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다. 그리고 한방치료재료는 양방과

달리 별도의 인정기준이 없다. 더욱이 한방법정비급여는 진료항목 코드뿐만 아니라 진료내역서 등 서식표준화 미흡으로 보장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데다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현재 기업성 보험의 경우 기업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잉의료이용 가능성 통제가 가능하여 한방법정비급여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얻어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인보험은 통제할 수단이 없어 상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보험에 대해서도 특별약관을 통해 한방법정비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제반 인프라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보험금지급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정비급여 항목의 세분화, 코드 및 진료내역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방진료 및 한약제제 처방 기준 마련·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인프라가 개선되면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므로 상품개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장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간·공사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소고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1호

탈세, 부정수급, 사기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공사기관 간·민간기관

간 정보이동이 불가피하나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공공기관 간·공사기관 간·민간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민간부문의 손실과 국가재정 누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에서는 심각범죄법(Serious Crime Act 2007) 제정을 통해 사기를 심각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매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방지 목적인 경우 공공기관은 내무부가 지정하는 사기방지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민간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사기방지 목적의 데이터 매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기관 간·공사기관 간·민간기관 간 데이터 매칭이 가능하다.

사기방지 및 정보이용에 대한 영국정부의 정책추진 방식 및 인식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는 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하고 사기만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둘째, 산업별·부문별·부처별 사기방지 정책의 중복 또는 충돌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통합사기방지전략을 수립·추진하였다. 셋째, 정보취급 방식 및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자유로운 정보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넷째, 합리적인 소통으로 정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보이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큰 편인데, 사기, 탈세,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 방지 목적의 정보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정보 취급 방식 및 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방지 및 정보이용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별·부문별·부처별 접근보다는 정부 주도의 통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자문업 글로벌 제도개편과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32호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재무설계, 상속, 세무, 법률 서비스 등 컨설팅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독립 금융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s)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오는 7월 호주에서는 『미래 금융자문 관련 (개혁)법안(Future of Financial Advice)』이 전면 시행되고 영국, 싱가포르 등 관련국들도 금융자문업의 수수료 체제정비에 나서는 등 금융자문업에 대한 제도개편이 단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자문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국내 보험산업은 금융자문업에 대한 글로벌 제도개편의 추이와 특징을 고려하여 보험산업 판매채널 다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모색 중인 국내 보험회사들은 금융서비스가 제조, 판매, 자문 서비스로 세분화되는 국제적인 추세 속에 대면채널과 비대면 채널의 병행전략을 구사하면서 고객 자산가치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문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 자문업자를 법인으로 한정하면서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자문서비스 제공 여지를 차단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 자문업의 자격요건을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년 60세 연장의 의미와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3호

2013년 4월 30일 “정년 60세 의무화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력부족문제와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은퇴를 늦춰서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추가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노동의 추가공급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년연장으로 추가되는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신규로 투입되는 젊은 노동력과의

관계를 대체관계로 보느냐 혹은 보완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이든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 대체관계로 보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노동의 추가공급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201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총노동공급을 고려할 경우 정년연장은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든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의 직무가 다르다고 보는 보완관계로 볼 경우 정년의 연장은 젊은 노동력의 일자리 확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논의를 종합하면 정년연장은 중·고령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를 대체관계와 보완관계 중 어느 관계로 보아도 노동시장의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개인의 노후준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난 근로기간동안에 국민연금 혹은 개인연금 등 노후를 대비한 연금 상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현재 61세부터 65세까지 점차 늘어나는 공적연금의 수급기간까지의 소득공백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두텁게 할 수 있으며, 노동 및 산업정책측면에서 안정적인 노동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 본인의 기여액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 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늘어난 근로기간 동안 2,000만 원의 기여를 더 한다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은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더 지급하게 되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년의 연장은 산업측면·개인측면 모두 우호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측면 역시 우호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4호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 회사의 분쟁 및 지급거절과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각국 감독당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호주 감독당국은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외 재보험회사에 인가 취득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 자국 소재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호주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시 호주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재보험계약에 한해 해당 재보험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하였다. 둘째, 출재사의 요구자본(capital charge) 산출 시 미담보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 위험계수를 차별적으로 대폭 상향조정 하였다. 셋째,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재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

월 이상 재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해당 재보험금에 대해 100%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는 호주의 건전성규제 개혁이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호주 재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호주 재보험시장의 과점화, 출재집중도 증가, 재보험가용성 감소, 재보험요율 인상, 호주 금융시장의 위험 노출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없으며 주요국에 비해 재보험자산인정요건 등이 덜 엄격한 편인데, 호주의 건전성규제 개혁의 배경, 내용, 방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의 의지와 시장효율성 저해라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이 재보험거래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합리화 또는 강화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전성규제가 시장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방법 및 방식 선택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외제차 부품시장 경쟁촉진의 쟁점 및 당위성과 실행방안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5호

최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외제차 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와 부품가격에 대한 불투명성

이 국민의 수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Non-OEM부품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Non-OEM부품 활성화 이슈는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안전성 측면에서 상호 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검토·논의됨으로써 그 당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Non-OEM부품 활성화를 통한 부품시장의 경쟁촉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수리비 및 보험요율 인하를 유도한다. 반면, 부품제조업체의 무임승차는 완성차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 유인을 저하시킴으로써 완성차시장의 상품 차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Non-OEM부품의 난립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열등한 Non-OEM부품을 사용할 유인을 제공한다.

주요국에서는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적용을 면제하고 Non-OEM부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자동차 부품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부품시장은 제3자지불제의 맹점, 즉 부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 및 저항이 낮다. 둘째, 차량소유의 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차량 구매 결정이 이뤄짐으로써 부품시장에서 차량 소유자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이 제한된다. 셋째, 완성차제조업체와 직영딜러 간 부품시장의 독점구조를 초래하는 유인 구조가 존재한다.

외제차 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 및 Non-OEM부품 비활성화 원인은 수요·공급 양면에서 찾

을 수 있다. 무엇보다, 통상 사고차량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가 값싼 양질의 Non-OEM부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유인이 부족하다. 둘째, 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검증 기준 미흡은 Non-OEM 부품에 대한 불신과 OEM부품에 대한 맹목적 선호를 초래한다. 셋째, 부품 가격 및 유통구조의 투명성 부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완성차제조업체가 직영딜러·정비소에 OEM부품의 배타적 판매권과 수리노하우를 제공하고 Non-OEM부품 취급 시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사업관행은 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부추길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구조로 부품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자극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Non-OEM 부품 사용을 공식화하고 보험회사의 Non-OEM 부품 적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가 Non-OEM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견 역설적이게도, 보험회사의 Non-OEM 부품 적용에 대한 지침과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는 보험회사의 소비자 기만에 대한 우려와 열등 부품의 시장유입을 차단함으로써 Non-OEM부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 변액보험 해외투자 펀드의 환헤지 전략에 관한 소고

전성주(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6호

최근 변액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를 거쳐 해외 자산에 ‘우회 투자’하는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회투자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으로 차감한 후 채권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운용수익을 배당받아 적립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변액보험을 통한 해외 자산 투자 시 가격 차이에 의한 수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환율 차이에 의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자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 투자 자산의 성격에 적합한 환헤지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환 리스크에 장기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수익률은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 낮은 반면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은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산의 가격이 해당 통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환헤지를 하지 않았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통화 가치 변화율이 주식시장 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때에는 환헤지를 해야 하는 반면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일 때는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 수익률과 통화 가치 변화율 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주가와 통화 가치가 동반 상승/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헤지를 하지 않으면 전체 해외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주식수익률의 변동성과 환율 변동성이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환헤지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해외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 수익률은 통화 가치 움직임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환위험 노출을 피해야 하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체적인 환헤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채권투자에 대한 완전 환헤지 전략은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의 환헤지 전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변액보험 해외투자 펀드는 환헤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투자의 경우 이러한 전략이 최적화된 전략일 수 있으나, 주식투자의 경우 해당국 통화 환율의 변동성과 주식 수익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민영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김석영(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7호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 또는 치매 등

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힘든 노인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보험업계는 장기요양보험 상품을 새롭게 출시함으로써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여 장기요양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초기 1~3급 등급 판정을 받은 유병자는 증가하였으나, 1~2급 등급 판정 유병자는 2009년 6월 131,246명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3등급 기준 완화로 3등급 판정 유병자는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민영 LTC보험 상품(1세대)은 1998년 최초 정액형 상품으로 도입 되었으나, 니즈 부족 및 지급조건의 까다로움으로 판매 실적이 미미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상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이 큰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발생률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갱신형으로 최초 개발 되었으나 지금은 비갱신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보험회사들이 독자적인 장기요양 상태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정부의 등급판정을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새롭게 부각

되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장기간도 연장된 새로운 형태의 LTC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3등급을 보장하는 신상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등급판정기준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발생률이 불안정한 3등급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으로써 국가의 등급판정을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상품개발이 요구되며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되는 장기요양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저금리 대응, 대응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조재린(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8호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로 2.8%대까지 하락했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3.2%까지 상승하여 보험회사 이차마진 축소나 이차역마진 상황을 다소나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금리의 향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 대한 대응수단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금리는 투자수익 감소와 자산 및 부채 가치

증가라는 두 경로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저금리는 투자수익을 줄여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자본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부채 만기가 자산 만기보다 긴 보험업의 특성으로 인해 저금리에 따른 부채 가치 증가가 자산 가치 증가보다 커서 자본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준비금적정성평가를 통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게 된다.

한편 저금리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자산 만기와 유사한 5년 만기 국채금리가 3%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모든 보험회사의 투자영업이익은 단기간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에 높은 확정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형사는 2015년 자본계정 투자수익으로도 이차역마진을 보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수준보다 보험료 증가율, 계약 유지율 등이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당기손익 감소 규모와 속도는 더 크고 빠를 것이다.

저금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투자영업의 이차마진을 유지하거나 보험영업이익으로 이차역마진을 보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영업의 이차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채,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투자 비중을 늘려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만큼 투자위험도 증가하므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준비금적립이율 하향 조정으로 이차마진을 유지하는 방안 또한 공시이율 산출방식 개정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재량권 축소와 최저

보증이율에 대한 RBC규제 등이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저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투자 영업보다는 보험영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보험료에 대한 충분한 마진 설정을 허용하는 등 보장성상품으로의 전환 유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보험영업이익이 사차익이 아닌 비차익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 것 또한 위험보험료에 대한 충분한 마진이 허용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준비금적립이율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장성상품으로의 정책적 유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미국 취약계층 보험공급망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이태열(선임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39호

미국은 차상위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강제 가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가 적게 드는 별도의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상품 구성을 바탕으로 채널 내에서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등 저렴하게 보험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실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성공한 Insurance Exchange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미국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 방식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보험 공급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금을 출연 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시장을 통한 민영보험의 공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판매채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판매채널 구축의 경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사업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 취약계층 전용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뉴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 전용 판매채널이 충분히 소개될 경우 특별한 마케팅 활동 없이도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온라인 채널의 취약한 자문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형 상품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상품을 구성하고 보험회사들 사이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리스크풀링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판매채널과 기존의 판매채널이 동일한 고객을 두고 상호 경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역선택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언더라이팅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고객 층을 상호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 채널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우량물건을 사전에 흡수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 취약계층 채널에는 리스크가 큰 고객만 남게

되는 현상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언더라이팅 기능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역선택에 대한 대응 때문인데 미국의 경우 의무보험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무보험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언더라이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상기에 소개된 취약계층 전용 판매채널에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또는 언더라이팅과 관련한 정보 지원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받을 경우 비용절감과 편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방카슈랑스의 소비자보호 규제 특징과 국내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40호

2001년 4월에 도입된 일본의 방카슈랑스(은행 등에 의한 보험모집)는 총 4단계의 시행단계를 거쳐 2007년 12월 전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일본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은 은행과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가 소비자에게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 채널이 급속하게 성장한 국내와 달리 일본은 방카슈랑스를 12년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채널구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시너지가 있는 저축성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0년 생명보험의 방카슈랑스 점유율은 7.0%에 불과하고 연금보험(변액보험,

종신보험)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손해보험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화재와 상해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보험법」과 「은행법」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규제를 균형적으로 마련하고, 감독당국과 금융협회가 방카슈랑스 허용단계별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규제내용을 정비하는 제도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법」과 「소비자계약법」을 방카슈랑스 도입 시점인 2001년 4월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소비자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 관련규제를 시행과 동시에 마련한 것이 아니라 허용단계별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현재의 규제내용(위해방지조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에도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방카슈랑스가 본래 도입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일본과 같이 금융권역간 균형규제와 상호협력이 정착화 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 니즈에 부합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내 「은행법」에도 예금 오인방지 및 설명의무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금융권역간 협회를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방카슈랑스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설문조사나 민원분석 등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의 새로운 보험감독체계 특징

이기형(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41호

영국은 2007년 노던락(Nothern Rock)의 뱅크런과 금융위기를 겪으며 당시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에 의해 이루어졌던 “3개 기관 감독체계”가 위기 발생 시 위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규제공백이 발생하였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은 전격 해체되었고, FSA가 담당하던 금융감독기능은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PRA)와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로 분리되었다. 또한 영란은행 산하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가 신설되었다.

금융정책위원회(FPC)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감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거, 감소하기 위한 조치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한다. 건전성감독기구(PRA)는 미시건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개별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증진 및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는 PRA와 달리 독립된 회사의 형태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실시하며 PRA의 피감기관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한다. 이러한 감독체계의 변화에 따라 영국의 보험

회사는 PRA로부터 미시건전성 감독을 받으며, FCA로부터 보험영업 등 업무행위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양 감독기구는 피감보험회사를 그룹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전적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IFA, 보험중개사 등의 판매채널은 FCA의 업무행위규제(COB)와 보험업무행위규제(ICOB)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영국보험협회(ABI)는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체계가 은행중심 규제로 재편되어졌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은행과 같은 규제 및 감독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2개 감독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비용 부담과 추가적인 감독규제 규정적용에 따른 혼란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 주요국 그룹감독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42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IMF의 국내 금융안정성 평가결과(초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그룹감독체계가 미비하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업권별 규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을 그룹단위로 감독하는 그룹감독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감독은 금융그룹 내의 노출된 위험(Exposure), 리스크 집중

(Risk Concentration) 등을 식별하고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그룹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과 생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그룹측면(Group-Wide aspect)에서 연결기준(Consolidated)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룹감독 관련 규정이 없고 자회사 위험요인을 간접적으로 관리하여 그룹단위의 위험 요인과 리스크 집중의 식별 및 평가가 어렵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그룹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룹감독이 강조되고 있고,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그룹감독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BIS(은행), IAIS(보험) 등에서 그룹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은행 및 보험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그룹단위 지급여력 비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그룹감독 체계가 규정되어 있고,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도 그룹감독 대상이다.

IMF의 평가결과가 국내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체계가 국제적인 추세에서 뒤쳐져 있어 법률·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적 감독규제 변화는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와 재보험의 역할

김석영(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42호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저금리, 저성장 기조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RBC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BC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들을 반영한 것이지만,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재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후순위채를 발급하여 자본을 조달하거나, 심지어 만기보유 금융자산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여 가용자본을 늘리고 있다.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으나, 현행 RBC 규정하에서는 보험리스크의 전가만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되어 위험 전가수단으로서의 재보험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국내 재보험사는 보험리스크를 이전하는 재보험만 다룰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전체 리스크의 약 50%를 차지하는 금리리스크를 주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보험을 통한 금리리스크 전가를 RBC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써 재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감독당국은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보증 옵션에 대해 국내 재보험사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위험을 국내 재보험사가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리스크와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금융회사로서 재보험의 다양한 기능, 즉 금융재보험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공정한 정비요금을 위한 선결조건: 자동차제작자의 정비기술정보 제공의무 강화 필요

송윤아(연구위원)·이혜령(인턴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43호

자동차가 ‘바퀴달린 컴퓨터’라 불릴 정도로 첨단화·전자화되면서 정비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정비업체의 수요가 높아진 반면, 자동차제작자는 이를 협력정비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있다.

국내 자동차정비업체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총 35,170개이며, 이 중 자동차제작자의 직영 사업소 및 협력업체가 총 4,130개(외제차 포

함)로 약 12%를 차지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의 정비기술정보 등 제공 의무가 존재하지만, 제공대상 기술정보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자동차제작자가 정비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가맹계약 여부에 따라 정비업체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정비산업 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수직적 제한 심화 및 정비업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초래한다. 둘째, 소비자의 정비권 및 정비업체 선택권을 제한한다. 셋째, 신차 및 고도기술이 필요한 정비 부분에 경쟁이 줄어 정비요금 인상을 초래한다. 넷째, 신차종과 신기술에 대한 정비기술정보 부족은 자동차정비 불량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섯째, 최소한의 표준화된 정비방법이 없어 동일 손실이라도 정비업체마다 작업 방법 및 시간이 달라 소비자·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분쟁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EU,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정비산업 내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 소비자의 정비권 및 선택권 증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제작자의 일반정비업체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이 이미 입법화되었거나 정부 개입하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EU에서는 자동차제작자의 정비기술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자동차제작자와 정비업체 간 자율적 합의하에 기술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 시도가 진행 중이다. 호주정부는 2013년 7월 현재, 자동차제작자와 정비업체에 시장자율규제방안을

도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이며, 2013년 말까지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법제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EU,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기술정보제공에 대한 이슈가 공정경쟁과 소비자의 정비권 및 선택권 측면에서 공문화·입법화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의 안전도 측면에서 입법화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문제인식 및 입법목적의 차이는 대안의 구체성과 실효성의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제작자가 부품 및 정비를 지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인식·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경쟁과 소비자의 정비권 및 선택권 측면에서 자동차제작자의 기술정보제공의무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유럽과 미국 금융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차이와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44호

최근 공개된 미국 대형금융그룹들의 실적 개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사업구조조정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미국 대형금융그룹들의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63%, 42% 개선되면서 사업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실적개선은 글로벌 자본규제 강화 추세하에서 이루어낸 사업구조조정 성과이므로, 미국의 대형금융그룹들의 사업구조조정은 자본규제 강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들의 사업구조조정은 방식과 대응속도에서 미국식 금융지주와 유럽식 겸영모형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식 금융지주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신속하게 부실자산을 매각하여 사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반면, 유럽식 겸영모형은 2010-2011년에야 자산·지분매각을 통한 사업구조조정에 나서 사업구조조정의 시차(time-lag)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형금융그룹들의 최근 실적 개선은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측면에서 사업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 대형화와 겸업화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IFI)” 등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그룹들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그룹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황진태(연구위원)·이해량(인턴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46호

2012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생명보험 설계사 850명을

대상으로 설계사 직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신뢰수준 95%±3.4%p).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 직업을 선택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0.6%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 24.3%가 ‘시간활용이 자유롭다’, 19.6%가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들었다.

한편, 보험설계사들의 현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 중 63.2%가 현행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 반면 25.3%는 근로자 신분을 선호하였다. 다만, 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자 신분을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모든 소득계층에서 개인사업자 신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포함된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73.7%가 단체보험을, 나머지 26.3%는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산재보험보다 넓은 보장범위(40.4%), 산재보험의 경우 보장받기 까다로울 것 같아서(25.8%), 단체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24.6%)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세 납부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70.7%, 근로소득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21.5%로 나타났으며, 200만 원 이하 저소득 설계사들 역시 65.1%가 사업소득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설계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으로 인해 4대 보험, 퇴직금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소득감소 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응답이 51.2%, 10% 부담 가능하다는 응답이 28.6%, 20% 부담 가능하다는 응답이 12.8%로 조사되었다.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설계사도 본인 소득 중 30% 이상 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보험설계사 직업에서의 중요한 점으로 응답자 중 24.3%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74.7%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을 들었다. 결론하면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융산업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논의

정원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47호

조세재정연구원은 8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금융부분으로 부가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세금은 누가 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가 세수확보 및 집행으로 부터 얻는 이익보다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이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사회후생의 감소를 생각해 보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로 인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라 하겠다.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기인하는 사회효용의 감소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지게 되는데,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세 및 재원의 집행을 통한 사회적 이익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용감소분보다 크다는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당위성측면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엇갈리지만 이자소득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여타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기반을 두어 각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가능성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이자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송금수수료, 신탁보수 등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권의 경우에는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 역시 거래수수료 등 실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논의가 일찍 이루어졌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EU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에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범위와 기술적과제, 산업 및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48호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또는 유지요건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인도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진입을 막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혼란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라 볼 수 있으며 2011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되지 못하였다.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동 법안에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과 위반 시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선진국인 미국 뉴욕주, 영국, 일본의 경우 보험시장 진입허가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대주주의 출자능력, 사회적 신인도와 재무상태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평가하나, 유지요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영국의 금융통합법은 대주주 유지요건에 있어 사안별로 검토하여 감독조치를 취하며, 명시적인 주식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한 일본 보험업법의 경우 일정한도를 초과한 주요주주에 대해 유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범위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뉴욕주, 영국, 일본은 대주주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유지요건을 도입하더라도 지나치게 넓은 특수관계인 범위와 자유로운 소유권 행사 침해 소지가 있는 주식처분 명령 등은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위반 시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법령도 보험회사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에 맞을 것이다.

### 공동(재)보험의 단일요율과 요율투명성에 대한 공정경쟁 측면의 검토 필요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49호

공동(재)보험의 경쟁제한성과 비효율성이 간헐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동(재)보험이란 복수의 원수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가 비율을 정해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2005년 6월부터 청약방식 공동(재)보험 계약체결과정에서 관찰된 공동행위가 EU 경쟁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쟁법 적용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여기에서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이란 계약자 및 브로커가 입찰을 통해 간사사를 선정한 후, 간사사의 요율 및 조건에 따라 후발참여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U 집행위가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에 대해서 공정경쟁 측면에서 제기한 이슈는 단일 요율 및 조건, 요율투명성, 최혜대우조항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보험산업이 단일 요율 및 조건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동 공동행위로 인해 계약자가 누리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험산업은 공동(재)보험에서 단일 요율 및 조건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사후적 결과일 뿐 사전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는 시장 효율성을 방증할 뿐 아니라, 신속한 담보력 확보, 계약자 서비스 제고 등 계약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EU 집행위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내 공동원수보험제도에 경쟁제한성 및 담합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나라 공동원수보험의 경우 단일 요율 및 조건이 참여사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해진 “게임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 및 담합 가능성이 EU의 공동(재)보험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방식의 공동원수보험제도 유지로 인한 효율성 제고효과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보험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언더라이팅·요율산출 능력 등 보험산업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방식 공동보험 금지로 인한 비용과 이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효율성이 국가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현행 방식의 공동원수보험제도에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그것의 효율성 제고효과가 그 비용보다 크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보험의 단일 요율 및 조건과 요율정보공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재보험의 경우 국경 간·기업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대한 정책당국의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는데, 국내 원수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강성호(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50호

최근 정부의 조세정책 개편 방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을 통해 세수확보와 세제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편방향은 연금과세 체계에게도 영향을 미쳐 사적연금 가입 및 유지 행태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은 저소득층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계층별로 가입 및 유지 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따른 소득수준별 변화효과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득구간을 기점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기인한 세제혜택이 감소

하고 소득이 감소할수록 세제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계층별로 세제적격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및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집단에서는 각각 152.1%, 63.5% 만큼 세제혜택이 증가한 반면,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및 3억 원 초과 집단에서는 각각 40.2%, 58.7% 만큼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 형평성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유형별로 보면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므로 세제혜택의 변화가 없는 반면, 평균적으로 퇴직연금 기여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29,000원, 세제적격 개인연금 기여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32,000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세제개편 방향에서 보면 연금가입 및 유지 행태가 과거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의 취지가 무의미해 질 정도는 아니므로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2013년 연금세제 개편 효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금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금세제 개편 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연금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관성있는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에게는 세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소득층에게는 세제 개편에 맞는 효과적인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소득계층 간 차별화된 세액공제제도 검토 등 추가적인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민영간병보험의 발전방향

조용운(연구위원)·김미희(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53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간병보험은 이에 부응하여 보장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민영간병보험은 치매 및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 보장은 물론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자에게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감독자는 노후의료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병 관련 부분을 포함시키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간병보험은 여러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제도변화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가 예상된다.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최근 유병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기대 밖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된다.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의 발생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민영간병보험은 아직 보장이 다양하지 못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은 치매에 못지않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로

치매 보장에 집중되어 있고 1회성 보험금 지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의 경우 사실상 상당히 진척된 중증상태 만을 보장하고 있다.

민영간병보험은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장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개발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치매 보장은 추세율을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시간에 따라 보험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뇌졸중·심장질환 등의 주요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연금형태로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은 1회성 지급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 솔벤시 2의 보험부채 평가관련 최근 개정 논의와 시사점

장동식(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54호

유럽의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솔벤시 2(Solvency 2)는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따라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인 SCR 비율이 변동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회사채의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의한 자산 감소는 SCR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장기

또는 저신용등급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 또는 고신용등급 자산을 매입하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SCR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솔벤시 2의 이러한 특징과 보험회사의 이 같은 대응은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및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매칭조정 및 경기 대응 프리미엄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매칭조정은 상품특성을 반영한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을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해당 보험부채에 적용하여 통상적인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의한 SCR 비율 변동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 Pension Authority)은 최근 실시한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매칭조정 방안 중 고전적 매칭조정에 대해서만 SCR 비율 변동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장기투자전략을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모든 보험부채에 적용하여 급격한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의한 SCR 비율 변동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에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에서 영구적이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장치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는 아직까지 솔벤시 2의 이러한 특징과 보험회사의 이 같은 대응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솔벤시 2와 관련한 매칭조정 및 경기대응 프리미엄 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감독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과 장기투자 특징을 보험부채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국제적 적합성을 지향하고 있는 측면에서 유럽연합 내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스테이지암보험 현황과 시사점

김석영(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58호

최근 암 단계별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스테이지(Stage)암보험이 국내 최초로 개발되어 판매되기 시작되었다. 기존 암보험이 암의 진행단계와 무관하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해서 스테이지암보험은 암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신상품이다. 새로운 형태의 암보험의 출시로 소비자는

다양한 암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개발·판매되고 있는 스테이지암보험이란 암의 진행단계를 초기 암, 중기 암, 말기 암으로 구분하여, 진단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와 보험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되고 있는 국내 스테이지암보험은 초기 암, 중기 암, 말기 암의 3 단계 구조가 아닌 말기 암만을 특화하여 소비자 이해 및 상품판매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품을 구성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보험시장 전체가 표준화된 스테이지암보험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암보험이 일반화되어 있다. 모든 보험회사들은 스테이지암보험 형태의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단계별 지급보험금을 차별화하여 스테이지암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암의 진행단계에 대한 판정과 이에 따라서 보험금이 차등지급된다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이 상품의 성공을 좌우하였다.

스테이지암보험의 핵심은 암의 진행단계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특히 암의 진행단계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 암보험 상품에 비해서 암의 진행단계별 보험금 차등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검진으로 인하여 암 발생자들은 점점 초기에 진단을 받는 추세이며 따라서 스테이지암보험이 다른 암보험과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으나, 암의 진행단계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암의 진행단계가 높아질수록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스테이지암보험 상품을 보완하여 상품 구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스테이지암보험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스테이지 암보험은 추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KiRi Weekly 포커스

###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대재해채권(Cat Bond)

전성주(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0호

최근 해외자본시장에서는 대재해채권(Cat Bond)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면서 대재해채권의 시장 가치가 1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2011년 28억 파운드 → 2012년 100억 파운드) 채권발행액이 크게 증가하고 관련 투자펀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02년 이후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여타 금융투자지수들에 비해 대재해채권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동시에 낮은 변동성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재해채권의 발행과 운용은 채권을 스폰서하는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재보험계약을 맺고, SPV는 다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채권판매액을 별도의 담보계좌를 통해 머니마켓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대재해채권에 대한 적절한 분산투자는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자산들의 위험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며 회사채에 비해 높은 채권 스프레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별 재보험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전가수단인 대재해채권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개편의 영향 및 시사점

김세중(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1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된다. 2013년 자금이동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은행예금과 채권 등에서 증권, 보험 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산업의 비과세 저축성보험인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해왔으며, 최근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의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0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한 FY2008까지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최근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은 생사혼합보험의 세제혜택이 더욱 부각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 상품 포트폴리오의 쏠림 현상과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산운용 부담 등의 우려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오병국(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4호

2012년 세제당국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이 조치는 2013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순조세비용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조세비용의 감소로 인한 세부담 경감 혜택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도 필요하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부현황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의 단순한 상향조정만으로는 연금저축 납부금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담뱃세 증세 논란

이창우(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5호

금년 3월 6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각 정부부처별 의견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담뱃세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동 법률안을 판단해 볼 때 동 법률안은 세수의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지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득계층별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담뱃세가 초래

할 소득역진성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6호

201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정부 지원 하에 현재 3년째 운영 중이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최근 3개년 보험료 총액은 약 20억 원으로 97개 기업이 가입하였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약 14억 원이다. 지난 2년 동안 54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으며, 총지급보험금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기업의 분쟁대응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지원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분쟁대응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 규모 확대를 통해 보험가입기업을 늘리되, 개별 기업 당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누적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유 및 출재 전략을 효율화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7호

112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9.6%를 기록하며 2011년 7월 81.6% 이후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폭설,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2011년 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손해율 안정, 즉 자동차보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감독 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시행해왔으나, 제도 개선 이후 손해율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후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경영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 자유화 조치와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원)·이소양(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8호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과 자동차상업보험 A, B, C가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또는 요율제도)이다. 자동

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은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이며, 약관내용 및 요율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자동차상업보험 A,B,C는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형 손해보험 3사(A는 PICC, B는 핑안, C는 태평양)가 개발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2012년 2월 23일)로 중국도 상품 및 요율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지에 따르면, 통계량 30만 건 이상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개별회사가 자사의 상품 및 요율을 개발할 수 있다. 중국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볼 때 대형4사를 제외한 많은 보험회사(중자계 및 외자계 보험회사)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 상품 및 요율관련 새로운 진입장벽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9호

FY2012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대수가 전년대비 3.6% 늘어났음에도 원수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대당보험료가 5.0%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대당보험료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보

험료인하(2.5%),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시장 확대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 대당보험료 감소원인별 효과분석

구분	감소효과
직판시장확대	0.4%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판매증가	0.4%
기본보험료인하 (2012.4월 경)	2.5%
사고자 특별할증을 인하경쟁	1%
기타 요인	0.7%
합계	5.0%

현재의 보험료 감소요인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FY2013에는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로 인한 보험료인상 논란이 하반기에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현재는 손해를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시장관계자들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29호

정부는 2013년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① 주택시장 정상화 ②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 ③ 보편적 주거 복지의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장기간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분야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아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도입 여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 달려있다. 보험산업은 내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여부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임대업 활성화와 관련한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 임대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경우 임대소득이 저금리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임대업의 활성화는 임차인의 배상책임 등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 수요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와 관련한 위험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주택종합보험상품의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세가격 급등기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필요성

박선영(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0호

지난 몇년간 전세금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웃도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유인, 즉 전세금을 부도낼 확률이 높아져 세입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입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서민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이 높고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토록 독려하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 인하 등 깡통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법인 세입자에게 보호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과 건강보험

이창우(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1호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병원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논란은 주로 의료공공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체계는 공적건강보험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시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공공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은 공적건강보험의 역할과 운영, 기능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과 정책과제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2호

2013년 국회에서 2016년부터 300인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4월 30일 통과됨에 따라 향후 사적연금시장에 많은 수요변화가 예상된다. 개인연금시장의 경우 50대 연령층의 경우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준비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니즈 확대와 가입자의 자발적인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으로 이어져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주기(활동기·정체기·단절기)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상품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경우 DC형 가입니즈 및 DC형 통산기능 확대, DB·DC형 병행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대규모 중간정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년연장에 대비하여 향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임금피크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거나 중간정산 일시금의 연금계좌 자동이전 장치 도입, 캐쉬 밸런스 플랜의 도입, 퇴직(연)금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시금과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차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독일 해약환급금제도 변화의 특징

강만규(변호사)·이기형(금융정책실장) | KiRI Weekly 포커스

제232호

독일연방법원은 2005년 보험해약환급금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해약환급금의 산정 등이 기재된 약관조항이 명료하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투명성의 원칙을 위반한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독일은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 전까지 보험해약환급금에 관하여 계약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위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자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의 개정 보험계약법에는 보험자의 환급금 지급의무, 환급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 체결 전 환급금 범위에 관한 통지의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조기 해약의 경우에도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연방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도 질멜식책 임준비금적립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보험해약금환급 시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하며, 그 해약환급금 산정방법이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나라도 보험약관에 구체적인 해약환급금의 산정기준 등을 보다 자세하게 명시하고 관계 법령을 재정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 정보의 투명화 필요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3호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간의 FTA 체결로 외제차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 정보제공 의무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가 수리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 수량, 단가, 부품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의 표기사항은 작업내용, 부품(구분, 수량, 단가), 공임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부적인 수리내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정비업자의 허위·과잉 수리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또한 부품명, 일련번호, 제조사, 가격정보 등을 포함한 외제차 부품DB 제공을 의무화하여 수리비 산출 시 이를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 「EU보험모집지침개정(안)」 발표와 영국 보험업계의 반응

이정환(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4호

11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 규제·감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EU보험모집지침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보수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보험 모집인과 보험회사에 대해 보수 명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소비자 선택 폭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자동 부대 특약에 따른 부적절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결합판매(cross selling)를 명시하고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tying practices)을 금지하였다. EU는 모집인 규제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보험업계는 모집인 규제 개정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모집인 보수와 순보험료 노출로 모집인 수수료와 보험료에 대한 보험업계의 가격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둘째, 보수 명시가 소비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줄 가능성도 있으며, 셋째,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tying practices) 금지에 보험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 소비자 민원감축: 상품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전환해야

김해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5호

금융소비자가 2012년에 제기한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95,000건인데, 이 중 보험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51.1%에 해당하는 48,000건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8.8%에 달해 보험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판매와 보험금지급 단계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어 판매자의 충분하지 못한 설명과 소비자의 이해 부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품정보가 알기 쉽게 생산되고 소비자가 이를 활용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험민원에는 보험상품 고유의 특성과 규제의 문제도 있다. 사고 발생 전까지 가치를 알기 어렵고 구매가 자발적이지 않은 탓에 다른 금융상품보다 보험상품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더 높고, 다양한 위험 요소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등장한 보험상품은 수많은 특약으로 덧붙여져 관리도 어렵고 좋은 서비스 질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보험민원을 줄이는 근본 처방은 가격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보험회사에는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이해하기 쉽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가격경쟁이 촉진될 때, 보험민원은 관리될 수 있다.

## 해외 공사적연금 비중과 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6호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과정을 보면, 공적연금 급여는 점진적으로 축소함에 반해 사적연금 기능은 강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면 공적연금 기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미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은 가입이 강제 혹은 준강제적이며, 이외 6개국은 임의 가입이기는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OECD, 2012). 한편, OECD 순소득대체율 기준으로 공사적 연금 급여 비중을 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급여는 공적연금 급여의 약 53.7% 수준으로 공사적 연금의 역할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OECD, 2011). 반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급여비중은 퇴직·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아 OECD가 추정하는 주요국 사적연금 급여 비중보다 훨씬 낮다.

고령화 추세 및 복지정책 방향이 선진국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공·사적 연금제도 개혁 방향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연금 시장은 현재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개척자적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보험산업 독점규제 적용에 관한 소고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7호

독점규제를 통한 경쟁의 촉진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경쟁법 적용의 확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험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일반적 독점규제의 적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문적 금융규제의 강화와 함께 보험산업 전반에 준법리스크와 규제비용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효율산출을 위한 통계의 집적 등 리스크의 관리와 분산이라는 보험업의 본질과 관련된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를 통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시장진입 촉진과 같은 경쟁촉진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독점규제의 적용은 이상과 같은 사업모형의 특수성과 함께 전문규제와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규제로부터 오는 보험회사의 규제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규제당국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용의 탄력성과 규제당국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 HSBC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8호

금융위기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유럽의 대형 복합금융그룹들의 보험사업 매각과 더불어 공적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HSBC도 2010년부터 사업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HSBC는 2010년부터 52건의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남미, 유럽시장의 생·손보 사업을 최근 매각하였다. HSBC의 구조조정은 보험업의 수익성 악화보다는 바젤3 등 글로벌 금융산업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보험업 경영에 따른 자본 비용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HSBC의 보험사업은 생명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생명보험사업을 자산관리사업과 연계하며 보험상품 제조 보다는 판매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젤3 등 글로벌 자본규제 강화는 국내의 금융회사의 상품포트폴리오, 자산운용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전성주(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39호

6월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 발표와 함께 빠르면 2014년 미연준의 QE 정책에 따른 자산매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6월 20일

아침 9시 40분을 기점으로 3.26%에서 3.38%로 12bp 이상 상승하였다. 양적 완화 정책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미 연준 의장의 성명은 내년도 미국 경제를 전망하는 예측자료가 미 경제의 완전한 회복세(moderate expansion)를 시사하였기 때문이다. 금리급등은 제로금리하에서 비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유동성 공급 중단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금리 추세 패러다임이 조만간 종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향후 저금리 지속 또는 하락보다는 금리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같은 금리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 채권으로 재분류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 매도가능채권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RBC 비율이 다시 하락하게 되는 등 장기금리 인상이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 솔벤시 2 최근 동향

장동식(수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40호

유럽연합은 솔벤시 2를 시행하는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솔벤시 2 지침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 Pension Authority)은 솔벤시 2 시행시기를 확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유니버스 2 지침 제정안 확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준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준비 가인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이러한 노력은 솔벤시 2 시행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측면, 영향 파악 시간, 지침 제정 후 조치 등을 감안하면 솔벤시 2의 시행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고려사항

정원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41호

기획재정부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수준별 세금부담 형평성 개선을 위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폐지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소득공제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해 주는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아질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는 세제 혜택의 역진성(수직적 형평성)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해당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세제혜택의 역진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제혜택부여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같은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같은 혜택

이 주어져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의 부분이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제공되는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과 정부가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생각 할 때,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부분, 예를 들면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보장성 보험료공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정부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액 공제 등은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하겠다. 하지만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타당한 항목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역시 제도의 변화가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카드슈랑스 판매제한 규정 적용의 영향과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43호

신용카드회사들은 2013년 말까지 특정 보험회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조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카드슈랑스는 주로 전화영업(텔레마케팅, TM) 조직을 이용한 아웃바운드(outbound)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기존 일반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바운드(inbound) 영업과는 성격이 달라 카드슈랑스 영업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의 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판매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 판매채널 중에서 카드슈랑스 비중은 미미하지만 대면채널이 취약하고 카드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25% 판매제한 규정 적용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되어 채널다변화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보험회사들에 대한 편중이 두드러진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보험회사의 TM조직 인력을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 결과 올 하반기 TM조직의 텔레마케터들이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카드슈랑스 판매제한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영업 측면에서 카드슈랑스와 방카슈랑스의 차이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카드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다이렉트채널 등 대안채널 모색과 판매채널 다변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 회사 지정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44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3년 7월 18일, AIG, AXA, 프루덴셜 등 9개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를 지정하였고, 같은 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G-SIIs의 평가방법과 규제방안 최종안과 함께 보험산업의 거시건전성 정책 및 감시체계를 발표하였다.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은 주로 비전통 비보험 사업의 영위와 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번 G-SIIs 명단은 이런 논의를 반영하

여 IAIS가 제시한 지정방법을 사용하여 마련되었다. 이들 G-SIIs는 내년부터 매년 11월에 업데이트되며, IAIS의 G-SIIs 규제방안에 따라 한층 강화된 보험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내에도 G-SIIs의 국내법인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시스템리스크 방지 차원의 국제적 감독협력 및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더불어 글로벌 보험그룹을 지향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국제적 보험감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진다.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률이 낮은 이유와 시사점

조재린(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45호

FY2008~2012년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률 평균은 56.3% 수준이며, FY2012 보험금지급률은 45.4%를 기록하였다. 여기서 보험금지급률이란 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며 지급보험금은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보험금지급률이 낮은 현상은 IMF 이후 연금보험 등 만기가 매우 긴 장기 저축성보험상품을 주로 판매한 결과이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장기간 적립하는 구조여서 판매초기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만기환급금 포함)은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인다.

장기저축성보험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자산을 빠르게 성장시키며,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증가는 준비금에 대한 평균부담이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차역마진을 키울 수 있고, 향후 신계약이 급감하거나 해약률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유동성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외형성장전략 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상품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보험그룹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Aviva Group 사례

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47호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 시장 철수가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HSBC 그룹, 아비바 그룹, 독일의 에르고 그룹, 네덜란드 ING 그룹 등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보험시장의 수익성·성장성 저하, 국내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 과도한 규제 등 국내 보험산업의 문제점이 철수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규제와 이로 인한 자본수익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국내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회사들은 자본비용을 고려한 수익성 중심 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8.28 전·월세 대책 평가와 진단

박선영(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50호

8.28 전·월세 대책은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은 그동안 국내시장에 부족했던 주택지분 활용상품(home equity release products)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품들이 부실 가계대출의 채무조정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가계대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해 우려된다. 특히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비용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대출 잔액을 밀돌 경우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대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92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택매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 가계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가계대출 부실을 키울 위험이 크다.

최근의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은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한 임대형식인 전세시장이 서서히 재편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인 만큼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신규대출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과 월세 시장 안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김세중(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51호

122

최근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로 신흥국 금융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신흥국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막대한 외환보유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지속 등 대외부분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급속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위축이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오승연(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51호

기초연금은 현 세대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적정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위원회는 네 가지의 기초연금안을 제시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정액지급하기로 한 애초 대선 공약은 2028년 계획된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을 2014년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대상자를 하위 소득 노인 70%로 축소시키고, 수급액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 중 “국민연금연계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 대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20만 원을 주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균등부분 급여액이 20만 원에서 모자라는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연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균등부분액수가 커져 기초연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되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유인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져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 해외환자 유치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이창우(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52호

최근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모형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에 검토된 사업모형은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현지법인 혹은 해외보험회사 등과 합작 또는 계약을 통해 개발한 보험상품

을 근간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방안이었으나, 이는 국내 보험회사의 직간접적 해외시장 진출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의료 기관, 장비 및 인력이 현지에 진출하는 아웃바운드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보건의로 협력 체결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는 이들 진출 기관과 협력하는 사업모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국내 경제의 장기 부진 가능성

전용식(연구위원)·윤성훈(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55호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설비투자 부진으로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생산자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일본식 디플레이션하의 장기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식 장기 침체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 대부분 자산가격 폭락 이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실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이 확대될 경우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장기 부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보험증권화 도입 필요성

최창희(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56호

한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 RBC 제도를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2009년 4월 도입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RBC제도는 국내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높여 보험사가 보험영업을 영위하며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 국내의 제도에 따르면 보험사가 RBC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1) 후순위채권의 발생 또는 증자를 통한 가용자본 확충 2) 안전 자산 투자비율 증가 3) 보험상품 위험관리 4) 재보험을 통한 보험위험 전가와 이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 등이 있다. RBC 제도를 1990년대 초반에 도입한 미국과 유사한 지급여력 제도인 솔벤시II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 위의 방법 이외에 보험사들이 보험증권화로 보험위험을 금융시장에 전가하여 요구자본을 감소시키고 RBC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2008년 금융위기 동안 성장세가 꺾였던 보험증권화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험선진국과 같이 보험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증권화 도입의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와 보험증권화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57호

124

소득보상보험(DI: Disability Income Insurance)이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애로 직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소득보상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특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도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가 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이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을 통한 추가적 위험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책정, 지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상품 도입이 필요한데, 지급심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험금 지급기간을 축소 설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를 한정하는 방식, 영구적 장애를 방지하는 조기복지지원시스템 등을 소득보상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진 익(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59호

확정급여형(DB) 공적 연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연금은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데, 가입률이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라고 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연금의 비유동성, 상속동기, 대안적 고수익 자산의 존재, 가족 구성원들 간 장수위험 공유,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 행태 등)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OECD의 조사결과를 참조 시,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은 약 12%로 독일(약 30%), 미국(약 25%), 영국(약 1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연금의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라는 전략 방향에 비추어 볼 때, 가입 단계에서 필요한 중개(모집)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연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자발적 수요를 견인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위한 공적 거래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계약형 퇴직연금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지배구조 개선방향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60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가입 저조,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중 운용, 자행예금 운용, 수급권 보호 미흡 등과 같은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금형 지배구조의 도입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에서 기금형 지배구조란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외에 독립적인 연기금(pension fund)을 설치하고 연금위원회(사용자 및 근로자로 구성)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기금운용 및 연금관리 등의 업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는 형태를 말한다. 해외 사례조사 결과 기금형 지배구조의 도입이 단시간 내 중소기업의 가입률 제고나 편중 운용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연금운용과 관련한 대규모 사기사건으로 심각한 수급권 침해가 2012년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형 지배구조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외부요인으로 돌리기보다는 먼저 지속적인 현 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이창우(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61호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하였으나 원격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정부당국과 의료계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원격진료 도입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의료보험 측면에서는 원격진료가 외래, 입원 이외의 진료형태가 될 것인지 여부가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격진료를 허용한 1차 의료와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의 범위상충 문제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출구전략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

조영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62호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관련 논의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의 장단기 금리차가 6월 이후 확대되었다.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기금리는 상승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금리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축소하거나 비금리부 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써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

다. 실제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출구전략에 대비하여 듀레이션을 축소한다는 답변을 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상승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량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현재 보유 금리리스크량, 자본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고

윤성훈(선임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63호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소비자물가는 1%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과 자주 비교되는 1990년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조정 시기에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를 자극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높인다는 단순한 케인즈식 논리에 입각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보다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수준, 자금수요 상황 등 미시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II.

## FY2013 주관 행사

정책세미나

국제세미나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Global Insurance Forum

보험정책포럼

기타 행사



# 1

## Chapter

# 정책세미나

-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 이상기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날씨보험의 역할과 발전방향
-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 수리비 개선 및 부품시장 경쟁촉진 방안
-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재와 미래
- 자동차보험 이원화 운영방안
-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제고 방안

#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행사명 :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30

## 행사개요

- 일시 : 2013. 6. 10(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2층)
- 주제 :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민병두 국회의원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사회 : 이순재 교수(세종대)
  - 제1주제 :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 보험산업(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강계욱 상무(보험개발원)  
김영훈 실장(바른사회 시민회의)  
이경주 교수(홍익대학교)  
이득로 상무(손해보험협회)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금융위원회)  
위정환 금융부장(매일경제)

## 개최배경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기, 고가의 수입차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성장 정체로 자동차보험 산업의 구조조정,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역

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선량한 계약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산업이 창의적 경쟁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위해 박대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보험영업 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는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은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하여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화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하여, 규제담보(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하나 자유담보의 경우 완화해야 한다.



## 제2주제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하여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화해야 한다. 보험사기 억제에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 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Non-OEM 부품 사용약관 명시,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한다. 규제담보(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하나 규제담보 이외 담보(자유담보)의 경우 보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규제담보 보험료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요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담보(규제담보 이외 담보)에 대해서는 요율을 자유화해야 한다.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행사명 : 한국리스크관리학회·보험연구원 정책심포지엄 | 주관행사

132

## 행사개요

- 일시 : 2013. 6. 12(수) 15:00
- 장소 : 중소기업회관 제2대연회실(2층)
- 주제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현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축사 :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회 : 정요섭 교수(한양대)
  - 제1주제 : 재무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국내 지급여력제도(RBC)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 토론 : 김무하 상무(신한생명)  
김 범 교수(송실대)  
노병운 상무(보험개발원)  
박용욱 국장(금융감독원)  
안용운 이사(롯데손보)  
이근창 교수(영남대)  
이병건 팀장(동부증권)

## 개최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도 글로벌 경기침체 및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잠재적 불안에 대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점검하고 국내 RBC 제도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의 과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심포지엄을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주제발표

금융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RBC 요구 자본량을 높여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Solvency 2를 벤치마킹하여 보험위험과 금리 및 신용위험에 대해 산출계수 신뢰수준을



재무건전성 규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상호 보완관계를 강화하고, 회계·상품·가격 등 다른 규제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정량평가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접근방식이 달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정량평가를 보완할 정성평가의 강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비금과 보험료에 관련된 회계, 상품, 가격 등에 대한 규제와 자본규제를 아우르는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95%에서 99%로 상향하는 계획을 시행 중이며, 고금리경쟁을 억제할 목적의 표준이율 인하와 공시이율 산식 개정과 함께 준비금의 적정성평가방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재무건전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보험회사 위험관리에 대한 정성평가의 경우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국내 재무건전성 규제에도 적극 참고하여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EU와 미국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정량평가에서는 서로 다른 산출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 자체의 지급능력평가(ORSA)에 기초한 정성평가에서는 EU와 미국 모두 유사한 개혁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건전성 규제의 정량평가는 미국 RBC제도에 기초하여 구축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향후 정량평가 개선에는 EU와 미국의 정량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능력을 모니터링하는 정성평가 강화를 통해 정량평가를 보완하도록 하는 추세는 EU와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자본, 준비금,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수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보험산업

에는 자본 확충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 저금리 환경에서 준비금 증가가 예상되는 준비금적정성평가 강화, 그리고 표준이율 등 이율규제와 보험료인상 억제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들 제도는 모두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나 요구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RBC비율의 등락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통합 관점에서 이들 규제의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보험료 인상 억제는 장래 보험료의 부족과 수익성 및 건전성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결정은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EU와 미국의 건전성규제 추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은 정량평가에 관한 한 “Wait and See”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은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진행 중이다. RBC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 중 유럽 영영이 활발한 일본을 제외하고 대만 등은 Solvency 2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등은 RBC의 부실 보험회사 예측을 보완할 정성평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규제의 개선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조화가 필요하고, 준비금 및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를 아우르는 로드맵 제시로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이상기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날씨보험의 역할과 발전방향

행사명 : 이상기상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 | 주관행사

134

## 행사개요

- 일시 : 2013. 6. 13(목) 14:00
- 장소 : 중소기업회관 제2대연회실(2층)
- 주제 : 이상기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날씨보험의 역할과 발전방향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남재철 국립기상연구소장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축 사 : 이일수 기상청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 사 회 : 김용덕 교수(숭실대)
  - 제1주제 :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국내 재해형 날씨보험 현황과 발전방안  
(박홍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팀장)
  - 제2주제 : 기상기후산업에 있어서 날씨보험 현황과 과제(현봉수 케이웨더 상무)
  - 제3주제 :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과와 과제(유지영 농협손보 부장)
  - 토론 : 김영찬 전문역(한국은행)  
신동호 교수(상명대)  
이영미 대표(에코브레인)  
임용한 과장(기상청)  
임준환 선임연구원(보험연구원)  
정정용 책임(삼성화재)

최경환 선임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건 팀장(동부증권)

## 개최배경

우리나라의 날씨보험시장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상품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레저산업의 성장 등 날씨리스크에 민감한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다. 또한 날씨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 날씨보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날씨보험 활성화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상과 보험의 협력과 융합이 필요하다. 이에 기상청 및 국립기상연구소와 공동으로 이상기상기후 대응을 위한 날씨보험 분야의 제도적 보완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날씨보험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날씨리스크 관리와 날씨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 날씨리스크 관리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된 고객을 실고객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1 주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시도별 재해손실 복구비 현황을 보면 대도시보다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가 기상재해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발생 시설물과 보험가입률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날씨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기상재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기상재해를 담보하는 민영보험 상품은 ▲화재보험 풍수재 특약 ▲건설공사보험 ▲조립공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특수건물 등 보험가입 의무시설을 제외하면 소규모 가계성 물건의 보험가입률은 매우 낮다. 특히, 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단체물건 외에 풍수재 담보 가입률은 2.2%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책성보험도 재해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도 보험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연재해의 예측불가능과 대형화 등 시장 실패에 따른 공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8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4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풍수해보험 사고 발생률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올해 국비예산을 125억 4,500만 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은 정부예산 소진으로 9월 신규 가입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책성 보험상품도 민영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상재해 위험에 대한 낮은 인식이 문제이

다.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 문제와 주택, 온실로 가입대상이 한정돼 소상공인 시설물인 상가나 공장 등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 민영보험의 담보범위 확대, 표준화된 상품개발, 위험관리 세분화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위험관리 인식 제고와 정책성보험의 운영 안전성 확보 및 재해시 실질적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 민영보험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

정책성 보험의 경우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대체하고, 위험지역 시설물만 가입하는 역선택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소재 시설과 정책자금 대출·지원 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가입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소유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과 대규모 자연재해의 최종 위험담보자로서 타 정책성보험과 동일 수준의 국가 재보험을 확충해야 한다.

날씨연계보험은 기상요소를 지수화해 해당지역, 기간 중 산정된 기상지수가 보상조건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날씨변동손실을 약관에 정의한 바에 따라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 없이 보상하는 것이다.

**제2주제** 기후변화 및 기상악화로 인한 국  
내 피해액은 지난 1990년대 6,953  
억 원에서 2000년대 들어 1조7,000억 원으로 급  
증했다. 이에 따라 통제 불가능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손실과 비용증대 등 날씨변동  
손실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날씨연계보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날씨연계보험은 기상요소를 지수화해 해당지역, 기간 중 산정된 기상지수가 보상조건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날씨변동손실을 약관에 정의한 바에 따라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 없이 보상하는 것이다. 날씨연계보험은 전통형날씨보험과 유사하지만 보상형태에서 실손보상에 따른 정액보상형태를 띠고 있는 전통형날씨보험과 달리 지수변동에 의한 협정가액을 보상한다. 그러나 난해한 보험요율 산정, 손해보험의 기본 취지 위배, 보수적인 보험요율 산출

등은 날씨연계보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기상현상은 지역별,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보험설계 시 지역, 시기, 기상인자 등에 따라 수많은 조건들을 고려한 보험요율 산출이 필요하다. 기업의 실손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조건에 해당하는 날씨현상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날씨연계보험은 손해보험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 또 보상조건에 해당하는 날씨현상 발생 확률이 타 손해보험에 비해 높다. 이로 인해 보험요율이 보수적으로 산출돼 타 손해보험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향후 날씨연계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상회사와 보험사, 정부 및 주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기상회사는 정확한 날씨리스크 예측을 위한 지역별, 요소별 날씨데이터를 수집 및 축적해 보험설계를 위한 위험도 분석과 날씨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보험사는 정교한 상품설계, 합리적인 보험요율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개발 시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해하지 않도록 날씨보험의 보상조건 등의 약관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주관기관이 나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주제**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적 요소에 크게 좌우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농업경영 안정수단으로 계속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국가재보험 제도 및 보험요율 산출방식의 연계 개선과 손해평가인력 육성, 보험운용 인프라 확충 등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수확량 측정을 통해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작물은 특정시기에 손해평가업무가 집중되므로 거대 재해 발생시 손해평가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재해라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피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 재해별로 작목, 품종, 재배방법, 지역, 시기 등 각각의 조건을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보험제도는 리스크 정도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유지되는 제도이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동일지역 내에서도 계약자별 입지여건 및 경작 기술차이 등으로 리스크 세분화가 어렵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계약자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아 보험 구매력이 낮고, 기존 재해지원 대체제도 등으로 재해발생 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경우 보험자의 사업유지가 어렵고, 높은 보험료

부과는 계약자의 보험가입 유인 감소와 정부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보험효용성 저하로 정책보험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농가별로 재해대처 방법 등에 따라 손해 발생 수준이 상이하고, 재해발생 후의 기상상황과 농가의 기술수준, 관리에 따라 최종 생산량이 대폭 변동되는 등 손해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 효과적인 리스크 분산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농업경영 안정수단으로 계속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가재보험 제도 및 보험요율 산출방식의 연계 개선과 손해평가인력 육성, 보험운용 인프라 확충 등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가의 영농 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입(가격)에 대한 보장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상품운영으로 농가의 보험선택권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보험의 필요성이 낮아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과 보험운영이 극히 어려운 품목에 대한 상품재설계 또는 다른 경영안정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행사명 :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공청회 | 주관행사

138

## 행사개요

- 일시 : 2013. 6. 20(목) 14:00
- 장소 :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대강당(1층)
- 주제 :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사회 : 이봉주 교수 (경희대)
  - 제1주제 :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경희 상명대 교수)
  - 제2주제 : 보험 측면의 노후의료비 상품도입 및 관리방안(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김정동 교수(연세대)  
박정훈 과장(금융위원회)  
오영수 고문(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웅재 논설위원(서울경제)  
최낙천 박사(삼성화재)  
최성균 팀장(한화생명)

## 개최배경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후의료비의 보장성 강화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들의 개인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고연령층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저축계좌인 “노후의료비저축”과 고액공제의료보험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이 결합한 상품인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근로기간 동안 개인이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분산토록 하며, 65세 이상이 되어서는 위험단체를 결합하며 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의료비보장보험」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연금의료비저축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설계의 주요 원칙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출과정에서도 가입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료 자동이체나 본인부담금 의료비 전용카드 등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 주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후의료비 마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공적보장과 함께 노후의료비 마련 경로를 다원화하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미만의 4.2배에 달하며,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공적 의료지출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은 15.7%이나 전체 의료지출의 45.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전 생애 의료비의 50% 이상을 소득이 급감하는 65세 이후에 지출하게 되나, 노후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어려우며,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고연령층 가입률도 저조하므로 국민들의 개인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손해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은 60~64세 11.8%, 65세 이상은 1% 미만으로 추정되며, 암보험 가입률(생명보험회사)은 65세 이상이 4.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의료저축계좌와 고액공제의료보험을 결합한 제도가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가칭)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을 도입하고자 한다.

즉, 기존 세계적격 “연금저축”에 “노후의료비

저축”을 추가한 세계적격 “연금의료비저축”을 도입하고, “연금의료비저축”은 기존 “연금저축”처럼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 가능하게 한다.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의료저축계좌인 “노후의료비저축”과 고액공제의료보험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이 결합한 상품으로, “노후의료비저축”은 연금저축과 함께 근로기간 중 적립하여 65세 이후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본인부담금 지급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립단계에서 기존 “연금저축”과 유사 또는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별도로 부여하며, 인출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 대비 50% 세율 감면 등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의료비저축”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은퇴에 임박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연금저축” 중 일부를 “노후의료비저축”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노후의료비저축”은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며,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설계의 주요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득세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의료비용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출과정에서 가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료 자동이체나 본인부담금 의료비 전용카드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소비를 억제해 가입 여력을 높여야 히드로 입원 및 통원에 대한 공제액 설정방법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법정본인부담금 보장비율을 현행 80% 수준을 유지하되 비급여 부분에서는 하향 조정하고, 입원 및 통원에 대한 공제액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향과 과도한 의료소비 억제를 통해 보험료를 인하시켜 가입여력을 높인 개선된 실손의료보험이다. 0세부터 75세 까지 전연령층이 가입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부터는 “노후의료비저축”의 인출금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점에 한번만 계약적부심사를 하도록 하여 노후에도 종신까지 계약유지가 가능하나, 65세 이후 가입시 인수거절의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의료비저축” 가입시점이나 이후 건강 유지시기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통제가 어려운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비율을 현행 80%보다 하향 조정하고 정액 고액공제를 추가하여 과잉의료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상급병실, 요양병원,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특약 형태로 운영하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 절차도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을 도입하여 노후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지원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의료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연령 계층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거절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인하를 통해 가입

여력을 높임으로써 민영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의료이용량 관리, 급증하는 노후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세대간 분담 효율화, 효율적인 조세정책 효과 등을 기대효과로 들 수 있다.

향후 취약한 노후의료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고지원 확대, 목적세 신설,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검진 및 예방강화, 의료비의 비용상승요인 통제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후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보험 수리비 개선 및 부품시장 경쟁촉진 방안

행사명 :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정책토론회 | 주관행사

## 행사개요

- 일시 : 2013. 9. 3(화) 1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
- 주제 : 자동차보험 수리비 개선 및 부품시장 경쟁촉진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민병두 국회의원
  - 인사말 : 강호 보험연구원장  
강현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 축 사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사 회 : 류근옥 교수(서울과학기술대)
  - 제1주제 : 자동차보험 수리비 합리화 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촉진 방안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
  - 토론 : 강병도 실장(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성수현 간사(YMCA)  
오병성 전무(한국수입자동차부품협회)  
오재춘 이사(한국자동차산업협회)  
윤진환 과장(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이득로 상무(손해보험협회)  
최용국 이사(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개최배경

외제차 등 고가차량의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외제차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262만 원으로 국산차의 3배를 넘고 있다. 반면 외제차 보험료는 차 값이 비슷한 국산차의 1.5배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제차는 사고 발생 시 받는 보험 혜택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 부담은 국산차 소유자들이 분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손해율에 걸맞게 외제차의 보험료를 현실화하든지, 외제차 수리비를 줄여 보험금 지급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의 합리화, 나아가 손해보험산업과 자동차 제조 및 부품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병두 국회의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Non-OEM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제1주제** 평균 수리비가 262만 원으로 국산차의 3배를 넘는 외제차의 등록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외제차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전체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외제차 수리비가 높은 이유로 독립정비업체의 OEM부품이나 정비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딜러의 Non-OEM부품 취급 제한, 소비자의 부품 및 정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효경쟁 부재를 들 수 있다.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Non-OEM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자동차제조업체 유통망과 독립유통망간 상호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OEM부품을 순정부품,

Non-OEM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용어를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약관 개선을 통해 Non-OEM부품 사용을 공식화하고 보험회사의 Non-OEM부품 적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가 Non-OEM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도 독립정비업체의 OEM부품이나 정비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대상 정비기술정보 범위 및 제공방식, 제공기술정보의 가격산정 원칙, 정비기술정보 제공의 법제화나 시장자율규제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제2주제**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국산차의 전체 수리비 대비 부품비 비중은 42.5%이나, 외제차의 경우 60%로 더 높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5.8%에 불과한 외제차 부품비가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부품비의 22.8%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외제차 부품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부품비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OEM 부품과 대체부품의 시장 경쟁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대체부품에 대한 민간품질인증제도 도입과 대체부품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부품비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OEM 부품과 대체부품의 시장경쟁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대체부품에 대한 민간품질인증제도 도입과 대체부품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및 유럽의 품질인증제도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품질인증제도 개발이 필요하며, 보수용 부품의 최대 사용자인 보험업계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보수용 부품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보험수리작업에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자동차 수리작업의 주체인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공과 품질보증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행사명 : 보험시장 경쟁법 적용관련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44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0. 24(목) 15: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회의실
- 주제 :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 주제발표 : 국내보험시장의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기성 상무(생보협회)  
박광춘 상무(손보협회)  
박영준 교수(단국대)  
이봉의 교수(서울대)  
이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정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개최배경** 2000년대 초반 제도적인 가격자유화가 보험시장에 도입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고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자율적 가격결정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보험규제와의 조화가 매끄럽지 않아 보험산업의 규제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리스크의 증가는 결국 보험료 상승이나 보험회사 경영 부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 즉 **deadweight loss**를 발생시키므로,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규제 적용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전문규제의 편익을 비교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 공동행위와 관련된 조사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보험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법체계와 행정지도 절차 등 제도적 불확실성 아래서 경쟁규제를 보험시장에 적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규제리스크를 지나치게 상승시키고 이는 소비자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규제와 경쟁규제라는 이원적 규제를 받는 보험산업의 규제리스크 경감을 위한 법체계와 행정지도 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거대재해 공동인수 등 보험업 특정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개별 공동행위 인가를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조건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되 일몰조항으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제발표**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이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경쟁규제당국의 이원적 규제에 의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가 증가하여 왔다.

제도적으로는 보험가격이 자유화 되었으나, 실질적인 보험가격 결정은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행정지도에 의한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시작되었다.

2000년 이후 보험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는 모두 7건이며,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는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규정 한 법체계가 미비하고, 금융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규리스크의 증가는 보험회사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 또한,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공동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를 떨어뜨려, 산업발전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향후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증폭되고 일부 중소보험사의 경우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 공동행위와 조건 등을 명시하고, 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자제하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경쟁당국과 사전에 의견수렴 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거대재해 공동인수 등 보험업 특정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개별 공동행위 인가를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조건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되 일몰조항으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에 보험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시장 경쟁 제한 행위도 재무건전성과 함께 규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는 가격자유화의 취지에 맞도록 자제하되, 경쟁당국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도 필요시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재와 미래

행사명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2020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46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1. 5(화) 14:00
- 장소 : 중소기업회관 제2대연회실(2층)
- 주제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재와 미래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사회 : 오창수 교수(한양대)
  - 제1주제 : 재무건전성 규제의 Global Trends (Jason Zhang, RGA Chief Actuary)
  - 제2주제 : 국내 재무건전성 규제의 로드맵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 범 교수(숭실대학교)  
박상용 실장(한화생명 CFO)  
박용욱 국장(금융감독원)  
황희대 상무(동부화재 CRO)

## 개최배경

앞으로 5년 후면, 세계 보험산업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틀을 바꿀 만한 두 가지 중요한 국제기준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유럽의 새 지급여력규제(EU Solvency II)이고, 다른 하나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 4 phase II)이다.

IFRS 4 phase II가 국내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회계규제라면, EU Solvency II는 국제보험감독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된 사례라

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개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RBC 규제의 모델이 된 미국도 지급여력규제 현대화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도 EU Solvency II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점검하고 국내 재무건전성 규제의 로드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주제발표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자본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억제,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부터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에 적용할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준비금 시가평가에 대비하는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저금리에 따라 표준이율이 인하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보험회사 준비금 시가평가에 관한 회계규제의 시행은 2018년부터 적용될 것이 유력하므로 자본규제 보다는 회계규제에 대한 대응이 더 시급하다. 따라서 선 부채적정성평가의 단계적 강화, 후 RBC 자본규제 강화로 진행하고, 자본규제는 정성평가-정량평가 순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가격규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 강화 플랜이 자본, 준비금, 보험료 규제 간 상호 영향과 국제적인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재무건전성 규제의 국제적인 추세와 규제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규제 로드맵이 제시되고, 재무건전성규제 강화는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 촉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본규제에 대한 국제 추세는 위험 세분화와 정성평가가 우선이다. 유럽과 미국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공통분모는 정량평가의 위험 세분화와 정량으로 파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정성평가의 강화에 있다.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은 아직 이견이 많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RBC의 위

험세분화와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정성평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5년부터 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유럽은 Solvency II의 시행 시기를 2016년 이후로 예정하고 상황에 따라 정성평가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 준비금 시가평가에 관한 회계규제의 시행은 2018년부터 적용될 것이 유력하며, 이때 국내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비금을 지금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대응은 자본규제 대응보다 회계규제 대응이 더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전체 재무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자본규제와 회계규제의 강화 시기와 강화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면 규제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준비금 시가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생명보험회사는 당기순익을 전액 유보해야 2018년 회계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데, RBC 강화가 진행될 경우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선 부채적정성평가의 단계적 강화, 후 RBC 자본규제 강화로 진행하고, 자본규제는 정성평가-정량평가 순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 자동차보험 이원화 운영방안

행사명 :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정책토론회 | 주관행사

148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1. 7(목) 15:00
- 장소 : 중소기업회관 제2대연회실(2층)
- 주제 : 자동차보험 이원화 운영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김성태 교수(연세대)
  - 주제발표 : 자동차보험 이원화 운영방안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 토론 : 김성수 자동차보험팀장(국토교통부)  
백광엽 금융팀장(한국경제)  
서대교 교수(건국대학교)  
이득로 상무(손해보험협회)  
홍성태 상무(현대해상)

## 개최배경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는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선진화되어 왔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라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이 보험산업 더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부터이다. 그 이후 손해보험회사들은 서비스 개선 노력과 가격경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런 와중에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분위기는 후퇴를 거듭하였고, 일정 주기로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갈등의 근저에는 주기적으로 충돌하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있다. 그 하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보험이 금융상품의 일종이므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에도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상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손해율 악화로 2013년에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해야하는 적자액이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싸고 반복되어 발생하는 갈등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보험연구원에서는 2013년 6월 국회공청회에서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의무담보와



자동차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갈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운영구조를 현재 보다 더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임의담보의 이원화 운영이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에 제안된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 이어서 시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보험연구원에서는 약 4개월간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다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자동차보험은 2000년 초를 기점으로 이전의 관리요율제에서 자유요율제로 운영구조(제도)가 변화하였다. 관리요율제도 시절에는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는 시각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 상품 및 요율구조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는 형식적 측면에서 자유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민영보험이라는 입장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은 자동차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괴리가 있어, 2000년 이후 일정한 주기를 두고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대통령의 지시로 의한 자동차보험 정상화대책, 2010년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제

도 개선 개입 등이 있어왔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이와 같이 정책당국의 개입으로 시장이 악화되고 안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운영구조를 현재보다 더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구분하고, 규제담보는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천만원)으로 하고, 자율담보는 규제담보 이외의 담보로 한다. 규제담보는 요율구조, 상품내용을 단순화, 그리고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요율수준 결정은 시장참여자(정책당국, 시민단체, 학계, 보험회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율담보에 대해서는 현재 자유화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요율구조, 상품내용 및 요율수준 결정에 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제고 방안

행사명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 역할제고 방안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50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1. 26(화) 10: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주제 :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민병두 국회의원(민주당)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
  - 환영사 :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 사회 :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 주제발표 :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 토론 :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보건복지부)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  
박정훈 과장(금융위원회 보험과)  
오영수 고문(김&장 법률사무소)  
윤석명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이기효 교수(인제대보건대학장)  
전병왕 건강보험정책과장(보건복지부)  
정기택 교수(경희대학교)

##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으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었던 급속한 고령화 과정 속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해 왔지만, 이를 충족시킬 복지재원의 조달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은 60%를 넘지 못하는 보장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재원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민 연금은 2007년의 대대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사적보험의 역할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동안 보험산업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제 보험산업도 변화하는 사회적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사적보험의 역할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보험산업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제 보험산업도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응하여 '민영 복지 사업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위험 보장에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가치에 대응하여 '민영 복지 사업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위험 보장에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사 보험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민병두·신경림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국민연금 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지속이,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적 복지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민영부문도 여유 있는 계층으로 보장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최근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이념, 계층, 이해 집단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공공복지는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큰 폭의 개혁보다는 완만하고 점진적인 부담 증가와 같은 현실적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도 재정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0.15%p 수

준의 요율 인상(2054년까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40년까지 매년 약 1.5%의 추가 수입 증가(매년 0.1%p 수준의 요율 인상과 유사)로도 재정 안정성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세대의 출산율 개선, 근로기간 확대, 이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근본적인 체제 변화와 같은 개혁은 미래세대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의 축소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동시에 총의료비의 증가가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대표하는 급여부문과 의료시장의 시장 경쟁을 대표하는 비급여 부문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급여 대상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의료 정보 공급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민영복지의 경우 공공복지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장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미래 노후 소득을 소득 5분위 별로 추정할 결과, 중위층(3분위)은 사적 연금의 충실도에 따라 노후 소득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적연금을 통한 중위층의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 급여 안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보장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과 이를 위한 공·사 보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영부문이 공공부문의 의료비 억제 노력에 동참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며,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 속에서 비급여 표준화 및 제3자 청구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Chapter

# 2

## 국제세미나

-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소개
- 자연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CAT Model과 CAT Bond 활용
-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환경변화와 과제

##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소개

행사명 : 몽고 금융감독/규제위원회-보험연구원 Round Table Meeting | 주관행사

154

### 행사개요

- 일시 : 2013. 4. 16(화)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12층)
- 주제 :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
- 발표
  - 환영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황진태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주 제 :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개최배경

몽고 금융감독/규제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FRC)

부위원장은 한국의 신용보증 시스템을 파악하고자 몽고의 금융감독 및 중소기업 관련 주요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내한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보험연구원, 한국투자공사를 방문하였다. 몽고 FRC 부위원장은 방한에 앞서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보험연구원은 국가 간 상호 우호 증진, 경험 공유, 그리고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차원에서 Round Table Meeting을 개최하였다.



### 발표내용

한국 보험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생·손보 모두 신규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 과점체제가 유지되었으며, 보험가격 및 상품 개발 등이 자유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시장 개방부터 추진되었다. 보험시장 개방이 은행이나 증권시장 개방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나 이후 보험산업 자유화는 다른 금융산업 자유화와 보조를 맞추거나 오히려 늦게 진행되었다. 한국 금융산업 자유화 및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한 정략적 평가는 거의 없으나 보험산업 자유화가 보험산업 발전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1970년대까지 정부의 금융규제 하에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가치평가 측면에서 한국 금융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한국의 신용보증 시스템을 파악하고자 내한한 몽고 금융감독/규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방한에 앞서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였고, 이에 우리원은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해 소개하고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Round Table Meeting을 개최하였다.

금융산업 자유화 및 보험산업 자유화를 통해 금융역량이 발전될 수 있었다.

보험산업 자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평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보험시장의 경쟁체제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유화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 진출 이후 정부가 국내 생명보험시장이 크게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진입을 대거 허용함에 따라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부실화되었다. 이는 단기간에 경쟁이 갑자기 치열해지면서 생명보험회사는 상품 경쟁력 확보나 자산운용 능력 배양보다는 대부분 모집조직 확대를 기반으로 한 수입보험료 경쟁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 확보 경쟁도 심해졌고 설계사들의 대량 이동에 따라 모집질서가 문란해졌다.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초기 사업비를 이연 상각할 수 있도록 한 회계규정으로 인해 무리한 규모의 사업비를 지출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둘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의 경우 진출 초기에 신규 보험시장 개척보다는 기존 시장의 분할 및 침투로 이어져 국내 보험회사의 성장기반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영업기법의 전수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 보험회사가 개척한 시장을 무임승차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의 교훈은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및 상품개발 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이후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보험산업 자유화와 함께 재무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산업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산업이 상당히 성숙된 이후 보험산업의 역량에 맞추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발전 단계 및 보험산업 발전 단계에 맞추어 정부는 가격규제 등 보험산업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가격 규제와 재무건전성 규제를 조화롭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수행해가야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자연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CAT Model과 CAT Bond 활용

행사명 : 자연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KFPA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 주관행사

156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0. 16(수) 14:00
- 장소 :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1층)
- 주제 : 자연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CAT Model과 CAT Bond 활용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이기영 KFPA 이사장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축 사 :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 회 : 신동호 교수(상명대)
  - 제1주제 : 국내 풍수재위험도지수 산출모델의 언더라이팅 활용(이영규 KFPA 박사)
  - 제2주제 : 대재해채권의 국내도입 필요성 (전성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CAT모델과 위험관리(Shennon Shen 미국 RMS사 박사)
  - 제4주제 : PCS와 대재해채권(Joe Louwagie 미국 PCS사 상무)

**개최배경** 현재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재보험을 제외하면, 자연재해보험 및 대재해채권 등 자연재해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상품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손해보험산업은 더 많은 지역의 대

재해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대재해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자연재해 관련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을 정량화할 수 있는 CAT 모델링 기법(CAT-modeling)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여 손해보험업계의 재해위험 담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재해채권(CAT-bond)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한국화재보험협회(KFPA)가 현재 추진 중인 자연재해 관련 업무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의 앞선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방법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자연재해보험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자 KFPA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 자본시장의 활용은 국내 재보험 담보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으므로 국내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재해채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주제** 최근 들어 재물보험 시장이 화재위험담보에서 전위험(all risk) 담보로 변화해 감에 따라, KFPA는 2012년 4분기에 자연재해전담반을 신설하고 자연재해 위험담보 언더라이팅 자료 제공을 위한 풍수재위험도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전국 약 34,000건의 특수건물 중 임의선출을 통해 선택된 723건의 표본을 대상으로 풍수재위험도지수를 산출하였다.



특수건물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도 KFPA의 풍수재위험도지수를 바탕으로 업종, 건물 층수, 1층 바닥면 높이, 연면적, 등지, 구조급수 등을 통해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KFP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특수건물별 연평균 손실액을 추정하여 정확한 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2주제** ‘CAT model’은 자연재해 손실을 평가하는 모델로서, 과거 통계자료 및 공학적 기법을 기초로 수많은 가상의 거대재해 사건을 생성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손실액을 추정하는 것으로, 과학적 방법에 의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CAT Bond’는 보험사가 인수한 자연재해위험을 특수목적회사(SPV)가 발행하는 채권형태로 자본시장에 전가하여 기존 재보험의 담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으로서, 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 발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활용은 국내 재보험 담보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으므로 국내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재해채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환경변화와 과제

행사명 : 제6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 주관행사

158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0. 22(화) 09:00
- 장소 : 조신히텔 그랜드볼룸(1층)
- 개막식
  - 개막사 :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기조연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사회 :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 제1세션 : 보험판매채널제도의 글로벌 추세와 전망: 독립채널을 중심으로
  - 제1주제
    - 미국 보험판매채널의 변화와 특징(게리 알 루이즈 림라 국제경영관리부문 수석부사장)
  - 제2주제
    - 영국의 IFA 채널: RDR의 영향(로빈 피터스 언스트앤영 금융서비스부문 디렉터)
  - 제3주제
    - 글로벌 보험판매채널: 프랑스 사례(장 크리스트오프 다베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이사)
  - 제4주제
    - GA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박정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제2세션 :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변화와 미래전략
  - 제5주제
    -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영향 및 변화전망 (데이비드 쿡 스위스리 아시아 전략판매채널부문 대표)
  - 제6주제
    - 한국의 보험산업 채널 현황 및 전망(황형준 BCG 서울오피스 보험부문 대표)
  - 제7주제
    - 한국의 보험판매채널 미래전략(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8주제
    -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감독방향(박용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패널토론
  - 좌장: 이경룡 명예교수(서강대)
  - 토론자: 김현수 교수 외 강연자 6인



미국의 독립채널은 현재 보험회사의 채널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독립채널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 판매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독립채널이 보험영업상 원하는 바를 잘 분석한 후 관련 영업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개최배경

보험산업을 둘러싼 기술적·제도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과 파이낸셜뉴스는 각국 보험 전문가들로부터 최근 보험 판매채널 제도의 글로벌 추세와 전망을 들어보고 이에 따른 미래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새로운 보험 수수료체계에 따른 문제점과 변화된 채널전략에 따른 영업성과, 글로벌 보험판매 채널 현황과 미래전략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와 미래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의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국내 보험시장의 미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는 의미 있는 학술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제1주제

미국의 경우 독립채널의 판매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생명보험 56%, 연금 67%, 장기요양보험에서 54%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채널의 미국보험시장 주도 이유로는 ① 기존 전속채널의 높은 판매비용, ② 독립채널의 자율적 활동, ③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속채널이 지배적인 경우도 있었으나 모집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전속채널의 이직률이 높아지

면서 제관분리 원칙하에 판매의 경우 독립채널에 집중하는 전략이 태동하였다. 다수의 전속대리인들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조직에 속박되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을 원하였다. 또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가 확대되면서 복수회사의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채널을 선호하였다. 이에 1980년대에는 237개의 보험회사들이 신규 전속대리인들을 모집하였으나, 2013년 들어서는 동 대리인들을 영입하는 회사들이 84개에 불과하다.



금융위기 이후 독립채널의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속채널이 일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속과 독립채널 모두에서 판매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들이 저능률 전속대리인들을 정리하고 있는 데다, 독립대리인들도 상당수가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면서

영국의 경우 자문수수료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문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문수수료 지불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자발적 탐색 가능성이 커지며, 단순 저축 상품 구매 시 인터넷 등 다이렉트 채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대리인 수도 줄고 있다. 이에 향후 수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채널은 독립자문업자인 IAR/RIA 채널로 예상된다.

미국의 독립채널은 현재 보험회사의 채널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독립채널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 판매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독립채널은 상품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신의 상품포트폴리오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제휴보험회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독립채널이 보험영업상 원하는 바를 잘 분석한 후 관련 영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소매시장에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RDR)”이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RDR 시행의 첫 번째 목적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자문가들의 전문성 기준 강화에 있다. 또한 관련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위해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자문사들의 수수료 왜곡(commission bias) 방지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보수(fee)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보험시장의 판매채널 비중은 IFA가 대략 75%, 다이렉트/독점전속채널(single-tied agents)이 15%, 방카슈랑스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채널은 최근까지 방카슈랑스였는데, 이는 주로 다른 채널보다 계약규모가 큰 보험상품들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성장성이 가장 높은 채널은 인터넷과 같은 다이렉트 채널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상반기 RDR이 영국 보험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면 IFA의 고객에 대해 자문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이 준수되고 있으며, 수수료(commission) 지급 방식의 상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모형이 나타나고 있다. 판매채널 측면에서 보면 약식자문(simplified advice)의 경우 일반적인 자문

IFA 채널은 고객의 부가가치와 연계된 수수료 청구와 효율적이면서도 자동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문인력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양질의 자문으로 고객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에 적합한 수수료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인터넷, 음성 등 자문을 위한 다양한 판매접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ull advice)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전체 자문인력 중 95%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문인력이 자신의 독립성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전체 고객 중 10% 이하만이 RDR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문서비스에 대한 자문보수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RDR 시행으로 수천 명의 IFA들이 폐업 또는 전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자문서비스 갭(advice gap)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래의 규제변화는 이러한 자문서비스 갭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자문수수료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문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문수수료 지불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자발적 탐색 가능성이 커지며, 단순 저축상품 구매 시 인터넷 등 다이렉트 채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DR 시행 이후의 IFA 채널은 고객의 부가가치와 연계된 수수료 청구와 효율적이면서도 자동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문인력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예를 들어, 변호사 출신 자문사의 경우 법률 및 금융자문 모두 가능). 양질의

자문으로 고객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에 적합한 수수료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인터넷, 음성 등 자문을 위한 다양한 판매접점(platform)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주제** 프랑스 보험산업의 경우 고용된 인력은 21만 5,000명이며, 이는 프랑스 전체 고용인구의 약 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프랑스 보험판매채널의 역사에 나타난 2가지 중요사건으로 1960년대 ‘상호회사’, 1980년대 ‘방카슈랑스’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상호회사는 대리인이나 중개사가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수준으로 보장이 가능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방카슈랑스는 당시 투자사업 위주의 영업을 했던 은행의 위기의식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보험시장이 성숙되면서 인터넷 채널의 등장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접점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기술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프랑스 보험판매채널의 형태는 다양하며, 각 채널별로 판매상품의 종류와 판매방식이 특화된 경향을 보인다. 내방형 점포(insurance shop)와 중개사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자리를 잡았고, employee network는 보험회사 직원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특히 저축성 보험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상호보험회사

프랑스의 보험회사 및 관련 판매채널은 그 특성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다른 가운데, 방카슈랑스와 직판채널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향후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소비자의 성숙도와 기술발달에 기인할 것으로, 인터넷이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utual insurance)는 1970년대부터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급성장한 반면, representative network는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으나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전달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소매유통(retail)채널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할인마트나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채널은 2000년 들어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의 보험회사 및 관련 판매채널은 그 특성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다른 가운데, 방카슈랑스와 직판채널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상호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없이 국내시장에만 머물면서 손해보험만을 취급하고 있어 저수익·저성장 상태에 있다. 기존 보험회사들의 경우 멀티채널 활용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채널 다변화

전략이 오히려 소비자의 관점 파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과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동 채널이 고객의 편의성(single stop shopping), 은행의 판매인력 활용, 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판채널은 중간매개자(intermediaries)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더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채널일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판매채널은 시장변화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각자의 모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 보험산업에서 나타난 두 차례의 중요사건(상호보험, 방카슈랑스)은 시장 내 새로운 판매채널의 진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소비자의 성숙도와 기술발달에 기인할 것으로, 인터넷이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 채널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및 구매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상품비교 능력향상에 따라 가격경쟁이 심화될

향후 GA를 대표적인 금융상품 판매모형으로 정착시키고 전문화/대형화 경쟁우위 채널로 성장시키기 위해 소비자 중심 채널로 수익모형을 확립시키고, 판매자 직접책임 원칙을 지게 하여야 한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결론적으로 하나의 특정 채널이 보험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4주제** 우리나라 보험판매인력은 2000년 이전에는 전속설계사만 33만 명에 이르는 등 총 40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외환위기 구조조정 이후 2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후 GA채널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39만 명 수준이다.

GA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회사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전속 대형법인대리점을 의미한다. GA설계사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씩 성장(전속 2.2% 성장)하여 2013년 15만 3,01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험설계사(39만 명)의 40% 차지하고 있다.

GA채널은 기존 채널에 비해 소비자 지향적 채널을 표방하여 채널-보험사-소비자-정책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GA는 이론적으로 소비자 중심 채널을 표방했으나, 운영과정에서 수수료 위주 영업관행, 보험회사의 외형경쟁수단,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소비자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향후 GA를 대표적인 금융상품 판매모형으로 정착시키고 전문화/대형화 경쟁우위 채널로 성장시키기 위해 소비자 중심 채널로 수익모형을 확립시키고, 판매자 직접책임 원칙을 지게 하여야 한다. 대형 GA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하기 위해 M/S 확보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GA에 대한 경영목표 전환토록 하며,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및 민원 시 소비자 구제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채널의 탐욕 억제(commission bias)를 위해 수수료체제를 개선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5주제** 개인생명보험의 경우 국가별 판매채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각 국가별로 전통적 판매채널의 지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직관채널의 성장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

각 국가별로 전통적 판매채널의 지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직판채널의 성장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호채널이 대면채널로부터 인터넷 채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산업에서의 디지털 채널은 보험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채널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은 직판과 소매판매채널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판매채널을 통해 고객의 브랜드 친밀감과 고객충성도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소매판매채널이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개사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직판이 그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전속설계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호주는 직판채널이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채널 간 점유율 변화가 크지 않다.



Swiss Re의 아시아지역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래의 보험판매채널 선호도의 경우 IFA와 인터넷 채널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험대리인(또는 설계사)에 대한 선호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서도 향후 보험상품 구매나 갱신 시 선호하는 채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선호채널이 대면채널로부터 인터넷 채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산업에서의 디지털 채널은 보험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채널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채널은 발달된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소비자 행태 변화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인구와 접촉, 빅데이터 활용, 기존 판매채널 모형의 문제점 개선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채널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당면과제이며,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도 충성고객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분석이 보험판매채널 전략수립의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디지털 채널 외에도 미래의 판매채널 변화와 관련하여 소매판매채널과 브랜드 관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매판매채널 전략은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전략으로 아시아에서는 소매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제6주제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에서 전속 설계사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GA 및 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채널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 최근 신규 설계사 유

전속대면채널의 경우 향후에도 주력채널로서 그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환경변화에 적합한 대안채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전속 중심 보험회사는 특화전략에 입각한 탄력적인 채널 운영이 중요하다

입 감소로 인해 중소형 보험회사는 설계사 채널 기반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며 설계사 기대수입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인해 전속설계사 규모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GA채널은 전략적 중요성 및 보험업계의 확장전략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채널은 정부와 업계 간 이해상충으로 현 규제체계가 지속되면서 제한적 성장이 예상된다.

고소득 고객의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IFA 채널 니즈가 대두될 수 있으나, 공급자 관점에서 본 채널역량 이슈로 인해 보험회사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증권사의 PB/WM 역량 수준이 선진국 대비 열위에 있어 자문형 채널이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정책적 해결과제도 산적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비대면채널 비중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20% 이상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생보형 상품(종신, 정기, 정액형 건강 등)은 고객-상품 간 매칭에 초점을 두어 대면채널 중심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손보형 상품(자동차, 세계적 격연금, 실손형 건강 등)은 상품-채널 간 매칭에 초점을 두어 채널 포트폴리오(mix)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 제7주제

전속 중심 보험회사는 설계사 채널의 고능률화와 대안채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속 중심 보험회사의 설계사 채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설계사의 고능률화가 중요한 시기이다. 전속대면채널의 경우 향후에도 주력채널로서 그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점유율(M/S) 확보를 위해 환경변화에 적합한 대안채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전속 중심 보험회사는 특화전략에 입각한 탄력적인 채널 운영이 중요하다. 비전속채널 중심의 중소형 및 외자계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전속채널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경쟁 전략으로 ‘특화전략’이 중요하며, 이러한 전략에 적합하면서 탄력적인 비전속채널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특정 비전속채널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할 경우 채널의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채널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널 다변화 차원에서의 멀티채널전략 시 개별 보험회사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며, 그 원칙은 아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비전속대면채널(GA)은 인터넷 채널과 더불어 향후 보험산업 발전에 중요한 보완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시장에서 현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GA채널의 우월적 지위 문제 해결과 보험계약 유지능력 제고가 선결과제이다.



전통채널과 인터넷·모바일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통합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객정보를 활용해 판매까지 연결하는 통합채널 구축이 중요하며, 그 예로 일본의 인터넷(탐색)과 보험샵(구입)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채널을 들 수 있다. 채널 간 충돌 및 마찰을 최소화하고 신규채널 간 조화가 중요하며, 이러한 조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하여야 한다. 상품 및 고객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특성에 맞는 채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비전속대면채널(GA)은 인터넷 채널과 더불어 향후 보험산업 발전에 중요한 보완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시장에서 현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GA채널의 우월적 지위 문제 해결과 보험계약 유지능력 제고가 선결과제이다. 중소형 대리점이 보다 높은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대형 대리점과

통합하거나 대형 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매집을 유도하는 통합 또는 매집형 대리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본인의 코드가 아닌 미활동 사용자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무자격모집과 보험계약자의 유지관리 부실현상 발생을 막아야 한다. 전속채널에서 독립채널로 이직한 설계사가 자신의 고객에 대해 승환계약을 권유하는 승환계약 문제 또한 심각하다.

따라서 GA채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전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최소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신설하여야 하며, 영업보증금 상향 조정, 영업기준 제정과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부실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원칙을 법제화하고, 판매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대형 GA에 대해 특정 보험회사와 집중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 제8주제

보험시장 성숙, 보험상품 다양화와 복잡화, 투자형상품(변액보험

등) 증가로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채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경우 독립재무자문업자(IFA) 등 전

전통채널의 급격한 위축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판매채널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영업능력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문 판매채널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반면, 설계사 등 전통적인 전속채널의 점유율은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독립판매채널이 출현하는 등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경우 통신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은행 및 금융투자업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상품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비대면채널이 중요한 판매채널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은 아직 인터넷 채널의 비중이 낮지만, 자동차보험과 같이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으며 자발적 가입 필요성이 있는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인터넷 채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타 보험상품도 상품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인터넷에 적합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권리의식 신장, 정보화 사회 진전으로 보험회사의 평판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 확립, 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판매채널은 시장환경 변화,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기능에 의해 판매채널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전통채널의 급격한 위축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판매채널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영업능력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모집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원감축 및 보험금 지급 적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보험회사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제고로 영업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
- "Risk to Strategy": 리스크 관리와 경영 전략의 연계
- 보험/재보험을 통한 대재해 대처 사례
- 자산배분과 시나리오 분석
- 변액보험 헷지 방안
- Asset Demands and Consumption with Longevity Risk

#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

행사명 : 제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70

## 행사개요

- 일시 : 2013. 5. 2(목) 14:3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1)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  
2) 탄소배출권 투자 펀드 제안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조재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발표 : 1) 최공필 박사(금융연구원)  
2) 정재수 대표(Ecoeye)
  - 토론 : 진 익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서정민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

1)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최근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가격 상승, 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 거래제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한국이 탄소배출감축 의무 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있어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新기후 체제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시장 작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가격변동성과 관련한 심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2) 현재 탄소시장의 약세는 배출권의 과잉 공급현상으로 수요-공급의 급격한 불균형에서 기인되었다.

이에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2기 정산 이후부터 Grey 탄소배출권(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거래 금지, 2013년 이후 공급될 배출권의 유보/취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한국이 탄소배출감축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탄소배출권시장 인프라 구축과 가격변동성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U 회사와의 연계 사업, 탄소배출권 투자 사업모델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향후 한국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승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EU 회사와의 연계 사업, 국내 배출권 투자기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 등 탄소배출권 투자 사업모델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 “Risk to Strategy”:

# 리스크 관리와 경영 전략의 연계

행사명 : 제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72

### 행사개요

- 일시 : 2013. 8. 13(화)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Risk to Strategy: 리스크 관리와 경영 전략의 연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조재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발표 : 이서영 대표(Oliver Wyman)
  - 토론 : 서정수 국장(금융감독원)  
신상수 팀장(메리츠화재)  
전용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리스크/자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째 단계는 위험수용범위(Risk Appetite)를 정의하는 것이다. 위험수용범위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의 제반요소들을 일관되게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험수용범위진술서(Risk Appetite Statement)는 전사적위험관리(ERM) 체계의 핵심요소이며 보험사의 다양한 리스크 관리업무의 방향

성을 제시한다.

위험수용범위진술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Allianz는 위험수용범위진술서에 자본지표 및 이익 변동성 지표를, Prudential은 자본/이익 변동성 지표 외에 유동성 지표를 각각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Zurich은 배당 및 평가에 주주관점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Old Mutual은 명시적으로 운영 리스크를 포함시키고 있다.

위험수용범위의 설정 및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위험수용범위의 외부경계선을 정의하고, 둘째, 비즈니스가 외부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마지막 단계로 위험수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한 경험을 토대로 위험수용범위에 대한 리뷰 및 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규제기관의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험수용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관건은 현업의 리스크 익스포저가 위험수용범위 및 주주에 대한 약속과 연계되도록 위험수용범위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 프로파일은 전사 위험수용범위와 연계된 위험계기판(Risk Dashboard)을 통해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보험/재보험을 통한 대재해 대처 사례

행사명 : 제7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 행사개요

- 일시 : 2013. 9. 4(목) 9:3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보험/재보험을 통한 대재해 대처 사례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조재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발표 : Michael Schwarz(Swiss Re)
  - 토론 : 최창희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

한국에서는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해가 가장 빈번하고 피해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규모는 상당히 작다.

자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개인, 산업, 공공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피해의 많은 부분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자연재해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정부의 비용은 첫째, 긴급구호나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비용 등 기본적인 비용과 둘째, 경제성장 둔화, 세금감소, 예산적

자, 높은 물가상승 등 자연재해의 간접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정부지원 없이는 복구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지원이 있다.

재해에 따른 필요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세금인상, 채권발행, 예산재조정 등 사후적인 방법과 위험전가, 상황의존적 자금지원(Contingent Financing), 준비금 적립 등 사전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사전적 준비는 정부재정의 변동성을 줄이고 재정계획의 확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험/재보험 및 자본시장을 이용한 위험의 전가는 정부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wiss Re는 멕시코 정부에 지진과 허리케인을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지수형 파생상품)을 제공했으며, 미국 Alabama 주정부와 허리케인을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을 계약하였다. 그 외 캐리비안연안 국가나 중앙아시아 정부에도 다양한 자연재해 보험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수형 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손해사정이 필요 없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자산배분과 시나리오 분석

행사명 : 제8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74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0. 17(목)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1) 자산배분과 시나리오 분석  
2) 펀드매니저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고려사항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조재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발표 : 1) Matthew van der Weide 부사장(FactSet)  
2) Willett Bird 부사장(FactSet)
  - 토론 : 전성주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

1) 리스크 모델은 자산배분 프로세스에 유용한 도구이다. 리스크 모델을 통해 자산 간 상관관계수(correlation)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자산배분 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산 재조정(rebalancing) 주기가 월(month)인 경우와 년(year)인 경우에 포트폴리오 성과가 다를 수 있었다. 이는 자산 재조정(rebalancing) 주기를 선정할 때 매매시점효과(Market Timing Effects)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벤치마크 불일치(benchmark mismatch)가 포트폴리오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산 재조정 주기와 벤치마크 불일치는 매매시점효과와 리스크 모델을 통해 포트폴리오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펀드매니저의 선정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무엇이 중요한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사(Due Diligence)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펀드매니저를 선정하거나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 포트폴리오 및 전체 포트폴리오의 관계를 일관된 프레임 워크 안에서 분석해야 한다.

# 변액보험 헷지 방안

행사명 : 제9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1. 22(목)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1) GPU를 이용한 변액보험 동적 헷지 시뮬레이션  
2) 변액보험 헷지 방안 : 해외사례 및 국내 시사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전성주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발표 : 1) 주기홍 대표(포트리스이노베이션)  
2) 윤성훈 대표(IQ Strategy)
  - 토론 : 김용환 박사(연세대학교)

##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

1)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많은 보험사들이 변액상품의 보증금부로 인한 손실 증가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 결과 안이했던 과거의 변액상품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증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실적에 연동되어 있는 변액상품의 위험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민감도 테스트, 준비금 계산, 동태적 헷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 체계인 그래픽연산 전용프로세서(GPU: 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병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동태적 헷징 시스템의 도입은 오랜 시간과 충분한 운영경험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 국내 보험회사들의 헷징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인력부족으로 변액헷지의 외주는 필수적이다. 동적헷지의 큰 문제인 설립 및 운영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중소형사의 경우는 외주가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와 최적분담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로 주식시장 실적연동 변액상품의 위험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GPU를 이용한 병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의 변액헷지 외주에 대한 범위와 최적부담에 대한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는 동적헷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경쟁적 입찰 경매 제도인 미국 CBOE의 CFLEX의 예를 소개 하고, 이를 통해 국내 변액보험 헷지에 적합한 체계를 제안했다. 이 체계는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내 변액헷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Asset Demands and Consumption with Longevity Risk

행사명 : 제10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2. 5(목)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Asset Demands and Consumption with Longevity Risk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조재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발표 : 장봉규 교수(포항공대)
  - 토론 : 최창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

미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람들이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비패턴이나 자산배분이 은퇴 전과 비교하여 은퇴 후에도 큰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에서 조사한 소비자 재무관리 서베이(Survey of Consumer Finance)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의 문헌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인 주식비중을 줄이고 채권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금융자산에서 주식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발달된 은퇴자산 계정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간단한 2-period 모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죽음의 확률에 직면해 있고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높거나 낮을 위험이 있을 때 새로운 은퇴자산 상품 도입이 금융자산 배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금융시장에 채권과 주식만 있는 경우를 벤치마크 케이스로 설정하고 채권, 주식, 그리고 이들에 기반한 연금과 생명보험이 모두 가능한 경우를 완전한 금융시장(Frictionless Complete Market)으로 설정한 후 벤치마크 케이스로부터 금융시장이 부분적으로 발달하여 완전한 금융시장의 일부 금융자산이 배분가능한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발달된 금융시장하에서의 위험자산에 대한 자산배분이 완

전한 금융시장 또는 은퇴금융상품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벤치마크 케이스보다 더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균형있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Chapter

# 4

## Global Insurance Forum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사례
-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평가 및 개선방안
- 아세안 금융산업 현황과 해외진출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사례

행사명 : 제1회 Global Insurance Forum | 주관행사

180

## 행사개요

- 일시 : 2013. 5. 31(금) 07:3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사례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제종옥 연구위원(김&장)
  - 사회 : 전용식 부실장(보험연구원)

##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주제발표

해외 진출을 결정하기 이전에는 세금, 이자율 및 조달규모, 세무 효과 등 재무적 효과와 법률, 철수의 용이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의 거래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주요 리스크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규제 위험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해당 국가의 의사결정 주체 및 결정과정을 파악하기 힘들고 대관 업무(정부/규제기관과의 관계) 처리가 어렵다.

둘째는 법률 리스크로 해당 국가의 법령이 불확실하고 상호 충돌하며 소송절차를 예측하기 어려워 거래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및 현지대리인 평가의 어려움, 부패, 뇌물수수 및 사례금 등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 극복을 위해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법률적 보호수단을 확보하고, 진출 대상국의 정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좋은 명성과 능력을 갖춘 현지 파트너 선정, 기밀유지, 자문사 선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



2012년 국내 보험사들의 주요 진출지역인 신흥시장에는 정치적/규제 위험, 법률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등이 있다.

#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평가 및 개선방안

행사명 : 제2회 Global Insurance Forum | 주관행사

## 행사개요

- 일시 : 2012. 7. 18(목)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8층 회의실
- 주제 :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및 평가 한화생명 사례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전용식 부실장(보험연구원)  
염경훈(한화생명)
  - 사회 : 전용식 부실장(보험연구원)

##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주제발표

2012년 9월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는 358개(34개국)로 최근 해외점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부진한 원인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추진의 구심점 부재, 단기성과 위주의 지배구조 등이다.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해외진출 컨트롤 타워 마련, 해외진출 관련 지배구조 개선, 국가간 무역협정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관련 국

내·외 규제 개선, M&A 등 “빅뱅방식”을 통한 해외진출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 한화생명은 4개의 현지법인 및 5개의 주재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2008년 6월 설립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신계약 기준 시장점유율 2%, 수입보험료 48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현지 생보사 14개 사 중 7위를 차지하였다. 중국 현지법인은 2012년 11월 설립되었으며 방카슈랑스와 전속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현지 생보사 42개 중 22위를 차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M&A와 JV 형태로 2012년 12월 진출하여 2013년 10월 영업개시 예정에 있다.

해외진출 시 외국인 근로에 대한 제한, 국가별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의 차이 등을 유의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부진의 원인으로 금융회사 해외진출 추진의 구심점 부재, 단기성과 위주의 지배구조 등이 지적되었다.

# 아세안 금융산업 현황과 해외진출

행사명 : 제3회 Global Insurance Forum | 주관행사

182

## 행사개요

- 일시 : 2012. 11. 21(목) 10: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회의실
- 주제 : 아세안 금융산업 현황과 해외진출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이충렬 교수(고려대학교)
  - 사회 : 전용식 부실장(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해 역내 금융시장을 통합을 목표로 금융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4월 6차 협상에서 은행, 자본시장, 보험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제거해가며 2020년까지 점진적 자유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중앙은행 회에서 발표된 ABIF(ASEAN Banking Integration Framework)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국 규제를 조율, 아세안 후발국의 경쟁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각국의 금융산업 발전정도

에 차이가 있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은행 규제에 대한 논의만 진행 중이며 보험에 관하여 통합된 시장에 규제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SEAN 사무국에서는 현지 보험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금융통합을 위한 은행의 역내 진출은 아세안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진출 후 2020년 이후 아시아 전체 국가에 대한 은행 진출이 허용될 예정으로 아직 국내 금융기관들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 후 해당 국가의 M&A 시장이 열리는 시점을 포착하여 진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ASEAN 국가들은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해 역내 금융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금융기관 규제를 조율하고 있다.

# Chapter

# 5

## 보험정책포럼

-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 상시감시 방안 및 리스크 현황
- 기후환경변화 평가 및 시사점

#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 상시감시 방안 및 리스크 현황

행사명 : 제1회 정책포럼 | 주관행사

184

## 행사개요

- 일시 : 2013. 7. 24(수) 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보험산업 현황과 주요 정책이슈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양태영 부장(예금보험공사)
  - 사회 : 박선영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2013년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이슈에 대해 정책당국자와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지속적인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공사의 보험사 상시감시 방안 및 리스크 현황”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 절차로 리

스크 감시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해 공사가 파악한 보험업권의 리스크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부보대상 보험회사 현황, 보험회사 리스크 요인, 리스크 감시기법 및 모형, 리스크 감시기법과 공동검사 등을 다루었다. 리스크 예측 모형은 재무지표 등을 활용하여 6개월 이후 보험사가 부실화될 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부실예측모형(Logit모형), 등급예측모형(OP모형)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실금융회사들은 부실화되기 이전, 유사한 재무적 행태를 보이게 되므로 통계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부실금융회사의 경제적 혹은 재무적 지표의 부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미래의 부실을 사전에 예측하고자 설계한다. 부실예측 모형은 로짓모형(Logit Model)을 활용하여 향후 일정기간 후의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금융회사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6개월 후 부실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급예측모형은 개별 금융회사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6개월 후 리스크평가모형 등급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5등급 체계인 리스크평가모형 평가등급을 3등급 체계로 변환하여 예측한다(A~B:1등급, C: 2등급, D~E: 3등급).

# 기후환경변화 평가 및 시사점

행사명 : 제2회 정책포럼 | 주관행사

## 행사개요

- 일시 : 2013. 8. 23(금) 16:00~18: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기후환경 변화 평가 및 시사점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정태용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사회 : 박선영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2013년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이슈에 대해 정책당국자와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지속적인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되었다.



## 주제발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현황,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기후변화 리스크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기후의 변동에 대처

하는 것은 모든 주요 산업의 도전과제이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비하여 지역, 산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첨단 과학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과 분포를 예측하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띠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나 개별회사 모두에게 리스크 평가가 중요하다. 리스크 평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영향과 적응 능력을 파악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계획의 수립을 도울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조직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래의 사업전략을 짜는데도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 보험산업과 관련해서는 스위스리 재보험회사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리스크를 부보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매니징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후 파이낸싱 (climate financing)의 최신기법 등도 다루었다.



# Chapter

# 6

## 기타 행사

- 한국연금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201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IAIS 현안, 보험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
- 노인자살 문제와 방지 방안

# 한국연금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행사명 : 보험 관련 연합학술대회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88

## 행사개요

- 일시 : 2013. 8. 19(월) 14:00
- 장소 : 오크밸리 대연회장
- 주제 : 한국연금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이봉주 한국보험학회 회장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사회 : 이근창 교수(영남대)
  - 제1주제 :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사연금의 역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제2주제 :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험회사 성장전략(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 토론 : 문형표 박사(KDI)
    - 박정훈 과장(금융위원회)
    - 성주호 교수(경희대)
    - 이상묵 전무(삼성화재)
    - 정관영 상무(교보생명)

##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능력의 소진과 복지지출 상승 압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5년이 넘었으나 아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인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1999년, 2007년 두 차례의 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금제도를 받쳐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의 기본 구조로 인해 2060년 이후에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퇴직연금은 대형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위주로 편중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연금은 적립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아직 낮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퇴직금제도 개선과 개인연금 인출 요건 완화 등 연금의 매력도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사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

공적연금 위상이 미정립 상태로 퇴직연금의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개인연금의 발전이 더더지는 등 사적연금 기능까지 혼신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적연금은 중간계층과 상층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자영업자에도 필요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기 위해서는 공·사적 영역 각각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공·사 영역 간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킬 필요도 있다. 민영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연금의 발전방안과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험회사 성장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보험연구원은 한국보험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와 공동으로,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에 앞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우리나라의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고령층에 대한 공·사적 연금은 크게 미흡하다. 인구정책 접근을 포함한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사적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합계출산율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출생한 시기인 1960년 6.33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1975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1983년 인구대체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2005년 1.08명까지 줄었고 2010년 1.2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반면 기대수명은 1970년 남성 58.7세, 여성 65.6세에서 2009년 남성 77세, 여성 83.8세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초고령화사회의 핵심 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이다. 1,650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의 경제·사회적 특징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사망하는 시점인 2060년 국민연금 재정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과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또 직업별로 분리된 공적연금은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고, 사적연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보장 기능이 제한적이다.

공적연금이 이렇다 보니 사적연금은 더 열악한 실정이다. 가입률도 전사업장 대비 13.4%에 불과하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46.0%에 머물러 있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은 9.6%, 1,200만원 이하 계층 개인연금 가입률은 8.3%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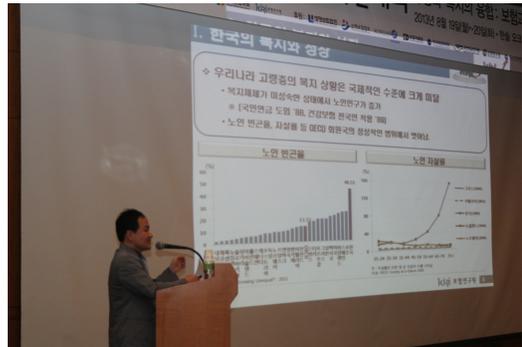
이처럼 한국의 사적연금은 낮은 발전 단계에 있다. 이를 발전시키려면 Portability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3분위(소득 중간 계층) 이하의 노후 준비 정도가 앞으로 한국 고령화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이들 계층을 사적연금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판매 채널이 필요하다. 민간 자율의 독립기관을 통해 온라인 웹사이트처럼 운영비용이 저렴한 보험판매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계정 중심 활성화, 퇴직 후 연금수급 선택자 비율 증가대책 수립, 퇴직연금 상품간 연계 강화와 이전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적연금 위상이 미정립 상태로 퇴직연금의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개인연금의 발전이 더뎠다는 등 사적연금 기능까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적연금은 중간계층과 상층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자영업자에도 필요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 근로계층에 대해선 퇴직 뒤 공적연금 수급 이전기간에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2주제** 복지지출은 주로 고령화와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대표적인 재정압박 요인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앞으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 최근 약제비 인하 등의 노력으로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있지만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1인당 의료비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결국 지출에 대한 부담은 상승하지만 납부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가 올 수밖에 없다.



소득 3분위의 노후준비 정도가 향후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핵심으로 3분위 이하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해 사적연금(3분위)과 공공지원(1, 2분위)이 필요하다. 미래 복지시스템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특수직역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되어야 한다.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연금을 활성화해야 하며, 연금의 매력도를 높여야 하고 퇴직금제도 세제개선 및 개인연금 인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취업자의 감소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별도 요율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민영건강보험은 건강관리서비스나 노인성질환 특화 등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성장보다 리

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제3자 청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사협력을 통해 국민의료비의 효과적인 보장과 의료비 심사, 통계활용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판매채널을 만들어 민간의 자율 독립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지원 시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참여형식을 택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순한 형태의 연금·정기·상해·건강 등 소액상품 위주의 판매와 판매채널에 참여하는 업계의 공동 언더라이팅을 허용해야 한다.

## 201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 제38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192

### 행사개요

- 일시 : 2013. 10. 17(화) 07:30
- 장소 : 조선히텔 오키드룸(2층)
- 주제 : 201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발표 : 윤성훈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개최배경

보험산업은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보험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저금리로 인해 자산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2014년에는 LAT 기준 변경, 신계약비 이연제도 변경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 보이며, RBC 제도도 강화되어 재무건전성 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 및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 주제발표

2014년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 부진 지속에도 설비투자과 수출이 증가하여 2013년보다 0.7%p 상승한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2.3% 상승하는 등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소폭 상승하고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부담으로 국고채(3년)금리는 2013년보다 0.3%p 높아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화로 인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지속,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절상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는 해외경제의 경우 미국 양적완화정책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성장 제한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경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가계 및 기업의 디레버리징 본격화에 따른 수요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미국 양적완화정책 축소에 의한 단기적인 금리 급등 가능성 등이 있다.

2014년 보험산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다소

보험산업은 2014년 들어 개선되기는 하나 예년에 비해 제한적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운용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2014년에는 수수료체계 변경과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며, 재무건전성 관리도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고 상대적인 비과세 혜택이 부각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금년보다 성장률이 개선되어 수입보험료가 FY2013보다 5.6%p 상승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 개편으로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한 FY2012(23.6%)와 FY2013(-0.6%)을 제외하고 FY2011(10.0%)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동 증가율은 5.0%p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은 세계 개편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FY2012에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FY2013에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에는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어 수입보험료가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와 보험업계의 저축성보험에 치중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유인으로 4.3% 성장하며, 저축성보

험은 상대적인 비과세 혜택 부각, 노후소득 관심 확대 등으로 4.6% 성장할 것이다. 단체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시장 확대 어려움 등으로 2.9% 저성장이 예상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소폭 회복되고, 계속보험료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회복과 상대적 소득공제 혜택 장점 부각, 노후소득 대비 수요 확대에 의한 개인연금의 증가 등으로 원수보험료가 FY2013보다 1.5%p 높아진 6.1% 증가할 것이다.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 7.4%, 개인연금 6.7%, 퇴직연금 2.9%, 자동차보험 2.3%, 일반 손해보험 6.2% 성장이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주행거리 연동특약과 블랙박스할인특약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산업은 2014년 들어 개선되기는 하나 예년에 비해 제한적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며, 더욱이 2014년에는 수수료체계 변경과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며, 재무건전성 관리도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수익성 위주의 성장 필요성, 업권 간/업권 내 경쟁 심화,

보험판매채널 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비 차익 중심에서 위험률 차익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및 운영구조 재정립,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합리적 로드맵 제시를 경영 및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 확산이라는 시장환경 변화, 판매채널 및 수수료체계 관련 제도 변화 등 제도환경 변화, 그리고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 감독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영 과제 및 감독당국의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 채널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GA 등 독립채널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복지재정이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보험산업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보험회사 경영은 기존의 사업비 차익 중심에서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의 요율규제가 사업비 차익 중심의 사업구조를 초래하였고 소비자 민원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본업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손해율 악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1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심화로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율 안정 T/F를 구성하고 나아가 자동차보험 운영 구조를 재정립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자본규제 추세에 따라 국내 감독당국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요율규제 등 관련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인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 IAIS 현안, 보험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

행사명 : IAIS 한국포럼 | 주관행사

## 행사개요

- 일시 : 분기로 개최 주기 변경
- 장소 : 보험연구원
- 주제 : 보험회사 건전성, 지배구조 및 시장 행위규제 관련 IAIS 주요 현안
- 논의 주제 및 발표

2013	주제
2.22 (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창언 금융감독국장 격려사</li> <li>• 2012 그룹감독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승준 연구위원(보험연구원)</li> </ul> </li> <li>• 2012 지급여력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li> </ul> </li> <li>• ICP 1, 2, 23 겹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종수 팀장(금융감독원)</li> </ul> </li> <li>• 지배구조소위 등 W/P(비젤,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li> </ul> </li> <li>• 금융안정위원회(FSC, 2월)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종수 팀장(금융감독원)</li> </ul> </li> </ul>
4.26 (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 호 보험연구원장 격려사</li> <li>• 보험산업 현안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승건 애널리스트(대신증권)</li> </ul> </li> <li>• 지배구조/행위규제소위(프랑크푸르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li> </ul> </li> <li>• IMF/World Bank FSAP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종수 팀장(금융감독원)</li> </ul> </li> </ul>
11.29 (10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용욱 금융감독국장 격려사</li> <li>• 지배구조/행위규제소위(한국,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해원 연구위원(보험연구원)</li> <li>- 이은주 선임(금융감독원)</li> </ul> </li> <li>• 지급여력소위(호주,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li> </ul> </li> <li>• G-SII, ComFrame 현안(대만,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상욱 선임(금융감독원)</li> </ul> </li> <li>• 연차총회(대만, 10월)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호의 팀장(금융감독원)</li> </ul> </li> </ul>

## 개최배경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의 활동이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IAIS 한국포럼”을 2012년 2월 7일 창설하여 보험산업의 국제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IAIS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 8 차

2012년 한 해 동안 IAIS에서 논의되었던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 감독에 관한 주요 논의를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2013년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금융감독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배구조와 시장행위규제 소위의 논의 내용도 한국포럼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보험그룹 감독기준(ComFrame)에 관한 2012년 논의는 보험그룹(ICP 23)과 ComFrame 적용 대상인 국제적 보험그룹(IAIG)의 정의와 선정 과정, 선정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 중의 ComFrame 초안 및 최종안 마련과 2014년 영향평가 일정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한편, G-SII와 관련해서는 IAIS의 금융안정위원회(FSC: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논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활동이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에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국제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2월 7일 보험 업계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IAIS 한국포럼”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경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브리핑이 있었다.

**제 9 차** 금융감독당국의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본금(RBC)제도 강화 계획이 제시된 가운데 표준예정이율 인하, 갱신형보험료 조정, 자동차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충돌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자본시장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다.

한편, IAIS 소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는 시장행위규제소위의 경우 판매 시 정보공시를 다루고 있는 조인트포럼의 논의 경과 등 소비자 보호 현안과 관련한 대외기구와의 협력, 생명보험 정산거래 현안과 캐나다 사례 분석, 예금보험 등 소비자보호기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고, 지배구조소위의 경우 감독당국과 보험회사 CEO와의 의사소통, ERM 및 지급여력감독에서의 지배구조 등의 현안과 ComFrame에 대한 지배구조소위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회의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이 IMF(와 World Bank) 금융산업평가(FSAP) 대상이 되었으며, 국내 보험부문 FSAP 평가의 경우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룹감독 등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개선을 IMF가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이 있었다.

**제 10 차** IAIS는 개별 소위원회의 경우 IAIS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 이외에 회원국을 고려하여 지역별로도 개최되고 있는데, 2013년 지배구조소위와 시장행위규제소위는 서울(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11월)에서 열렸다. IAIS 연차총회 외에 개별 소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융감독원은 이번경험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개별 소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11월 IAIS 소위원회 개최에 따라 제10차 한국포럼은 2013년 하반기 IAIS 논의 현안들을 종합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에 관한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연차총회 감독자회의 결과와 그 직후에 열린 지급여력소위 호주 회의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된 지배구조소위와 시장행위규제소위의 주요 논의 사항이 검토되었다. 특히,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대만 총회에서 IAIS가 제시한 일정은 2014년까지 G-II에 대한 추가자본규제(BCR: Backstop Capital Requirement)안, 2015년까지 주요 보험그룹(I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에 대한 추가자본규제(HLA: Higher Loss Absorbency)안, 2016년까지는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할 국제보험자본규제(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노인자살 문제와 방지 방안

행사명 : 제1회 고령화 포럼 | 주관행사

## 행사개요

- 일시 : 2013. 8. 28(수) 11:3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노인을 위한 자살 예방
- 발표 및 토론
  - 발표 : 김재원(美 LA 정신건강국)
  - 사회 : 이태열 실장(보험연구원)

##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09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65~74세)의 자살자 수는 10만 명 당 81.8명으로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수준에 있다. 미국 LA카운티는 자살예방전문가를 두어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연금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원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남성의 경우 75세가 넘으면서 자살률이 다시 상승하기도 하지만 연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안정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살 수단으로는 총기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약품의 오·남용, 목땀/질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한인사회의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냈으나 인종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이 많아 그 원인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LA카운티는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인을 통해 평소 행동과 환경 등을 조사함으로써 원인을 파악하는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개입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서비스를 실시하여 자살시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빈곤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적극 개입하여 예방해나감으로써 노인 자살률 감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 III.

## 2014년 주요 연구 계획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경영 선진화

신성장 동력발굴

고령화시대 보험산업 역할 확대

소비자보호와 신뢰 제고



# 1

## Chapter

#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 본 과제는 계획연구과제의 형태보다는 수시성 과제(CEO Report, 보험동향, KiRi Weekly) 등을 통해 수행 예정

# 글로벌 환경변화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동향분석실 | 수시성보고서

202

**연구배경**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조사와 대응방안 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중국의 긴축정책 시행 등으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 일본의 아베노믹스 성공여부, 신흥국들의 경제·금융시장 불안 등 글로벌 경제·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는 자본비용을 상승시켜 금융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과 해외 자산운용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로 이어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동향분석실은 국제보험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각종 시의성 있는 자료를 수시성 과제의 형태로 작성하여 적기 대응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정기간행물인 계간 보험동향지와 해외보험금융동향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및 경제 환경, 경쟁, 규제 및

제도 변화와 이에 대응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사업전략 변화를 조사한다. 계간지의 테마진단에서는 금융 및 보험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트렌드를 다루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는 KIRI Weekly를 통해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보험회사나 정책·감독당국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슈나 포커스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CEO리포트를 통해 보험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경영인사이트(Insight)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권간 경쟁 심화는 보험산업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험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동향분석실의 시의 적절한 연구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능동적인 대응전략 수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Chapter

# 2

## 경영 선진화

- 보험사의 수익구조 변화전략
-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 대응전략

# 보험사의 수익구조 변화전략

김석영(연구위원) | 보고서

204

**연구배경** 보험사는 보험 본업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험률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사는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내용**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외 손익관련 제도와 규정 조사를 통해 수익구조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일본, 미국, 유럽 보험사를 중심으로 손익관련 전략을 조사하여 국내 보험사 손익전략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험률에 내재된 리스크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위험률 산출방법을 연구하고자 위험률 리스크를 분석하고 계량화 방법을 연구하고 안정적인 위험률 산출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제도 조사의 문헌조사와 함께 국내외 동종업계 손익전략을 탐문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리스크 분석 및 측정을 위한 경험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모델링을 통해 계량분석을 실시한다.

**기대효과** 선행연구와는 회사 전반의 수익 구조에서 위험률 차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독당국의 제도와 업계의 전략을 연구하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또한 안정적인 위험률 차익실현을 위한 위험률 리스크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위험률 산출 방법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언더라이팅을 통한 수익창출, 위험률차익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안정적 위험률 차익 산출방법 등 보험사업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조재린(연구위원) | 보고서

205

**연구배경** 유럽에는 Solvency II가, 미국에는 RBC/SMI가 향후 수 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도 다양한 지급여력규제 개선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2019년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맞춰 IAIS는 보험그룹, 특히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국제보험자본규제기준 신설에 착수하고 있다. 본고는 보험사 지급여력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제도 비교를 통해 국내 지급여력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의 현황 및 개선작업 상황을 비교해보고 G-SII 및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국제보험자본규제를 조사한 후,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지급여력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는 주로 해외 제도를 소개하는 데 머무르고 있으며, 해외 선행연구는 자국 제도 중심의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지급여력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

여 국내 지급여력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지급여력제도가 보다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 대응전략

김해식(연구위원) | 보고서

206

**연구배경** 당국의 RBC규제 강화 추진과 준비금의 시가평가 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보험사의 효율적 자본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험사의 자본관리수단은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상황이다. 현재 후순위채권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만 발행이 허용되고, 재보험도 사실상 보험위험에 대해서만 인정됨으로써 위험전가수단으로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보험사 자본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본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사 자본구조 및 자본조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특히 해외조사를 통해 재무건전성 규제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해외보험시장의 자본조달 및 위험경감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자본규제 및 회계규제의 강화에 따라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또한 자본조달수단의 다양화, 재보험 및 파생상품 등 위험경감수단의 다양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기존 연구들은 보험사의 자본구조와 위험전가수단의 효율성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거나 비교·분석하는데 그쳤으나 본 연구는 보험사가 자본관리에 필요한 자본조달수단 및 위험경감수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효율적인 자본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hapter

3

신성장 동력발굴

- 보험사의 해외진출 방안
-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성장 가능성 연구
- 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전망

# 보험사의 해외진출 방안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208

**연구배경**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은 80년대 중반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글로벌 보험사도 부재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외사업진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목표 설정, 시장선정/사업개발, 상품/판매채널 믹스 전략, 조직/인력 확보, 글로벌 운영 플랫폼구축, 글로벌 자산운용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보험사의 해외진출 및 자산운용 사례와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보험사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금융업권별로 해외진출 현황을 분석하여 보험업의 해외사업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은행업의 경우 상품의 표준화와 판매채널 구축의 용이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보험업의 경우 판매채널 구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실정이다. 또한 현지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와 해외자산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현지 금융회사와의 합작, 현지법인 설립, 지분투자, 해외부동산·인프라 투자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보험업과 은행업의 특성과 해외진출 성공가능성을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보험사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성장 가능성 연구

강성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고령층 인구의 증가에도 이들에 대한 보험상품의 공급이 어려워 노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보험산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층의 경우 높은 위험률, 취약한 경제적 여건(낮은 소득 혹은 무소득)으로 보험상품의 판매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국내외 환경분석과 고령층 특화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고령자 대상 국내보험 시장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령자 대상 해외보험시장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특화 상품과 마케팅 방법, 리스크 관리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보험사의 사업 모델에 대한 조사와 해외 Inbound 영업 및 부가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외 Inbound 영업 및 부가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부가서비스와 Inbound 영업 연계 사례 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도입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통계분석을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본고는 고령층 특화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미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의 고령층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전망

최창희(연구위원) | 보고서

210

**연구배경**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국내의 손해보험사들은 배상책임보험이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보험 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의 해외사례와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조사하여 국내에 도입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국내외 배상책임보험시장과 상품의 종류를 비교하여 국내에 도입 가능한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발굴한다. 외국과 한국의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지위와 배상책임보험 관련 제도를 연구하여 국내에서 배상책임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상한다.

이후 외국의 환경과 비교하여 국내의 배상책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규명하고 국내에서 배상책임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내외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배상책임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상품의 도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보험의 경제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사업상 책임을 가지는 개인과 사업자 등 경제주체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사업지속대책(business continuity plan)의 일환으로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hapter

4

고령화시대 보험산업  
역할 확대

-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 가구형태 변화와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조용운(연구위원) | 보고서

212

**연구배경** 3천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제도정비의 미흡으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손의료보험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상환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액의료비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지급하는 본인부담의료비가 적정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환제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신뢰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는 설계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한다.

비급여본인부담금은 소비자가 일부를 지급하고 보험사가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정에 따르는 비용도 조사한다.

기존 연구는 비급여본인부담금 심사제도와 상

**기대효과** 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3자청구제’가 필요함을 아이디어 제시 수준에서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는 비급여본인부담금 심사실태 조사, 보험금 미청구 규모 추정, 보험사 행정비용 추정, 법률검토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청구제도 정비를 통한 보험소비자 권익훼손 방지, 비급여본인부담금의 적정성 제고,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가구형태 변화와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가구 형태의 변화는 개인의 삶의 패턴과 노후 준비 방식에 변화를 수반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만혼과 이혼,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양극화, 고령화, 여성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보험 상품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가구 형태의 다양한 변화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가족 구성원 간 소득이전과 소비자 니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영보험의 새로운 역할 및 상품 수요를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가족 내 소득이전의 변화를 분석하여 보험 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수요를 모색한다.

- 1인 가구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안전 등 일반 가구에 비해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존의 가족 구성원을 통한 위험 분담(risk sharing)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가족관계의 변화가 수반되어 부모 부양이

나 유산 상속과 같은 가족 내 사적 소득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금융 상품 수요의 변화를 분석한다.

다양한 가구형태에 따른 주거방식, 소비패턴, 저축 등 포괄적인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니즈를 파악한다.

**기대효과** 가구형태의 변화에 수반되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소비자 니즈와 보험 산업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보험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리스크에 대응한 새로운 보험 산업의 역할을 모색하여 보험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Chapter 5

## 소비자보호와 신뢰 제고

- 보험민원의 합리적 해결방안
- 금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 보험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설계사의 법적지위와 채널연구

# 보험민원의 합리적 해결방안

박선영(연구위원) | 보고서

216

**연구배경** 보험산업 민원은 금융산업 내 민원 중 매년 최다 민원건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의 민원감축 노력의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 민원증가로 인한 신뢰저하의 파급효과로는 금융사의 영업기반 축소, 소송비용 및 배상 금지출로 인한 수익성 악화, 회사 불신확대 등으로 인한 평판리스크 증가가 있다.
- 이로 인해 회사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주주이익 감소도 야기될 수 있다.

민원감축 노력은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개선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신뢰도 결정 요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감축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산업 민원감축과 신뢰도 개선을 위한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제도 도입과 연관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도 결정요인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민원감축 노력은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개선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금융민원 발생행태를 권역별 비교, 민원과 신뢰도결정요인과 연계성 분석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측정을 통해 민원해결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보험산업 민원해결제도와 신뢰도 개선을 위한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민원감축의 효과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외국의 “옴부즈만 제도”, ADR 등 다양한 제도와 우리나라 민원해결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민원감축이 감독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민원해결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시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사는 보험민원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금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변혜원(연구위원) | 보고서

217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보험부문에 있어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은 중요성을 가진다.

- 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 불만족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경우가 상당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보험민원의 대부분은 상품판매 단계 및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교육을 통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주요국의 금융교육 관련 추이 및 국내 금융교육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 201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후 변화된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국내 소비자 금융역량 수준을 점검한다.

금융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을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금융교육의 조건에 대해 살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내 금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국내 소비자 금융역량 수준과 함께 보험교육을 포함한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교육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교육의 사례들과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통해 금융 소비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이와 함께 금융이해력 부족에서 온 소비자 불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보험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보고서

218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보험감독도 같은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 하지만 큰 흐름에서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시장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국내 보험감독체계도는 시장규모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시장의 자율성 확대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이에 국내 보험감독체계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주요국 감독체계와 비교를 통하여 보험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보험감독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발전이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보험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국내 보험감독체계의 변화를 경제발전 과정과 주요사건별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감독체계 변화와 비교하여 향후 보험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보험감독체계는 미국형(상품규제 및 행위감독, 건전성감독 병행), 유럽형(행위감독, 건전성감

독), 일본형(미국과 유럽 수정 준용)과 한국형(미국과 유럽 준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 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형성과 변화에는 그 나라 특유의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배경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국의 보험감독체계를 이러한 인식 및 배경까지 고려하여 조사하고 우리나라 보험감독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보험시장 현실을 감안하고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주요국 보험감독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시장의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감독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주요국의 보험감독체계의 형성과 그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성을 살리는 보험감독체계를 통해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설계사의 법적지위와 채널연구

황진태(연구위원) | 보고서

219

**연구배경** 최근 개인사업자 신분인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보험업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시 보험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능률 설계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촉 사태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분한 해외사례 고찰과 합리적인 법적·경제적 논리를 검토한 후, 향후 발생 가능한 설계사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채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2000년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던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고찰한다. 해외문헌 및 사례조사를 활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관련 제도 및 배경에 대해 검토한다.

보험설계사의 직업적 특징을 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교하여 검토하며,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을 파악한다.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시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동 근로자성 인정 시 보험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논함과 동시에 보험산업에 새로이 요구되는 채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본 연구의 결과가 보험산업 판매채널 전략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IV.

## FY2013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고령화리뷰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 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 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투고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제 목	저 자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2013년 2월)	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의 도입이 생명보험회사의 자기자본, 자산리스크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경국, 최종범
	대·중소기업 간 위험공유와 설비투자 - 금융부문의 역할 -	하준경, 한재준
	스왑 스프레드의 기간구조모형	이준희, 박수천, 김재윤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가격효과 - 사업비율을 중심으로 -	서대교, 황진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 가격결정모형에 관한 소고 - 불연속시간체계 하에서의 접근 -	오기석
	일반화 로짓과 대응분석을 이용한 GA사업모델 방향에 관한 연구	전희주, 안철경
	제 목	저 자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2호 (2013년 5월)	집단위험모형을 이용한 성장주세에 있는 실손의료보험리스크 측정	조용운, 조재린
	세제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 분석	이경희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극단값 혼합분포의 베이지언 추정	조재훈, 이근창
	KOSPI200선물 글로벌 아간시장에서 주문집계장의 가격발견	이우백, 우민철
	변액보험에 부과된 최저실적배당연금액 보증옵션에 대한 연구	김용희, 김창기
	제 목	저 자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3호 (2013년 8월)	베이지언 통계기법을 이용한 변액연금 보증준비금의 평가	유병학, 고방원, 권혁성
	보험산업의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	정기호
	금융소비자의 변액연금 수수료 체계 선택에 관한 연구	진익
	장수리스트 측정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김세중

	제 목	저 자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4호 (2013년 11월)	개인연금 가입결정과 유지요인에 관한 분석 -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김재호
	지배주주는 언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가?	이지혜, 변희섭
	An Exploration into the Annuity Puzzle: The Role of Health Risk, Lack of Liquidity of Annuities, and the Value of Life	이경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게임	권세훈

## 2.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은 경제·금융·보험 관련 동향 및 이슈 발굴을 위하여 『보험동향』, 『해외보험금융동향』, 『KiRi Weekly』,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보험동향』은 테마진단, 경제금융 동향, 국내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되며,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다. 테마진단은 보험산업과 관련한 현안 이슈에 대한 발굴과 이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금융 동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변화 요인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내보험시장 동향은 보험회사들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집계하여 종목별 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수지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변화 원인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동향분석실 내 국제보험금융센터는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해외보험금융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보험금융동향』은 테마진단, 글로벌 이슈와 뉴스, 해외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진단은 글로벌 금융·보험시장 변화 및 금융회사들의 전략 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와 뉴스는 주요국의 제도변화,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보험회사의 경영환경 변화 등 주요국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해외보험시장 동향은 글로벌 보험시장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주요국의 보험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에는 데이터 집적이 가능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향분석실은 주간 웹저널인 『KiRi Weekly』를 매주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총 261호를 발표하였다. 경제·보험·금융 전반의 주요 이슈 등을 주간이슈, 주간포커스, 글로벌 이슈,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의 형태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주간이슈는 세계경제 및 보험·금융권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거나 금융·보험 및 실물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간포커스는 2010년 5월부터 추가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경제·금융 일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배경, 진행과정, 전망 및 시사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는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하여 검토

하고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 해외금융뉴스와 국내금융 뉴스를 통합하여 2013년 1월부터 추가되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여 현재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동향분석실은 보험시장을 둘러싼 금융·경제 환경변화 및 보험시장의 변화 등을 영문으로 소개 하기 위하여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를 분기별 1회, 『Korean Insurance Industry』를 연 1회 제공하고 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는 보험회사들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경영 수지, 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투자수익률, 판매채널 등을 간략히 분석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1년 동안의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 및 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재무상태, 보험료, 수익·비용, 판매채널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연 1회 영문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 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행태와 보험수요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1~2013년 동안 총 13회에 걸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동일 하게 시행되는 기본조사와 해당 연도에 보험업계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이슈별 조사로 구분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 등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감독당국의 정책수립 시 요구되는 자료를 집적·분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및 통계치 등은 보험회사 영업기획 및 판매 실무 분석 자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결과 중 일부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제공되고 있다.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적절한 현안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보험연구원 내 T/F를 구성 하여 추진되었으며, 2013년 6월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2013년 설문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세대주 포함) 총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표본추출방법은 인구통계변수인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전국 비례별로 층화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기본조사 항목인 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및 보험가입 회사에 대한 조사,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그 이유, 금융기관 선호도 및 보험가입 희망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슈별 설문으로 방카슈랑스채널 실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실태, 보험에 대한 이해도,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노후생활 및 연금, 금융자산 등에 대한 조사도 시행되었다.

연도	주요 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키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및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2008년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서비스 및 대출 관련)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2012년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2013년	방키슈랑스 채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태, 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노후생활 및 연금, 금융자산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3)

#### 4. 고령화리뷰

고령화연구실이 주관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고령화 리뷰: International Ageing Trend』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통계, 정책 및 현안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심층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시하는 인구고령화 동향지로서 올해로 두 번째 발간을 맞는다. 특정 주제에만 한정되어 집적되고 있는 여타 연구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변화와 통계들을 집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작년의 목차를 더욱 보강하여, I. 특집, II. 올해의 이슈와 정책 동향, III. 올해의 통계 동향, IV. 부록(통계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집은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 혹은 심층분석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인구, 복지 및 재정, 노후소득, 건강, 노동 및 빈곤의 전 분야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통계, 연구결과, 이슈들을 조사한 후,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올해의 이슈와 정책 동향 그리고 올해의 통계 동향에 포함되도록 분류하였다. 올해의 이슈와 정책 동향에서는 주로 새로 도입된 정책이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각 이슈마다 보다 심화된 관련 자료와 연구결과 및 분석들을 소개하여 시사점을 찾고 있다. 올해의 통계 동향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발표되거나 기사화된 주목할만한 통계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주요 통계변수들을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고 있다. 올해 발간된 고령화 리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제목	저자	
I. 특집	1. 고령화시대 출산정책 현황과 평가	오승연	
	2. 기초연금 도입과정과 국민연금연계안 검토	강성호	
II. 올해의 이슈와 정책	1. 인구	생산가능 인구 비중의 감소 저출산의 원인: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김미화 오승연
	2. 복지 및 재정	고령화 대응 준비	김미화
		세대 간 부양체계 국제비교 및 시사점 201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관한 종합 평가	오승연 김미화, 오승연
	3. 노후소득	영국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오승연
		2013년 연금저축계좌의 도입과 시사점 중소기업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와 시사점	이상우 이상우
	4. 건강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김미화
		노인 진료비 공·사 파트너쉽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시사점	김미화 김동겸 김미화
	5. 노동 및 빈곤	정년 60세 연장의 효과와 노동정책의 고려사항	정원석
		노인 일자리 현황과 대책	김동겸
	III. 올해의 통계 동향		김미화, 김유미
IV. 부록 (통계표)			

## 5.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 5.1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 자료 작성과 보험·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OECD와 관련한 일련의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한국 OECD 대표부 참사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결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때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보험정책 수립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는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3년 12월의 제92차 OECD 보험회의까지 한국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3년 6월과 12월에 OECD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와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최근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는 보험회사 및 연기금에 대한 시장감시 및 감독,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회사 및 연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교육 및 소비자 보호, 기관투자자들의 자본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장기투자 및 성장에 대한 기여, 대재해 위험 평가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에도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5.2 LIMRA-LOMA 연례전략이슈회의 참석

LIMRA-LOMA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회사들에게 리서치, 컨설팅, 평가, 개발, 준수, 규정 서비스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 임직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개발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LIMRA-LOMA는 2013년 11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아시아 권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CEO, 임원, 주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아시아 판매채널회의(Asia Distribution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판매채널과 관련한 트렌드 및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T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세대에 적합한 판매채널 전략 및 기술에 대한 논의와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의 변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보험연구원은 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판매채널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요구되는 판매채널 전략 등에 대한 발전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가하였다. 나아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보험연구원의 판매채널 관련 연구역량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6.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 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Maestro-Y」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3년 11월 말 현재 단행본 24,100여 권, 학위논문 1,780여 권, 정기간행물 33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080여 종, 비도서 자료 11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 V.

##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1. 경영비전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보험연구원은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 2. 연혁

보험연구원은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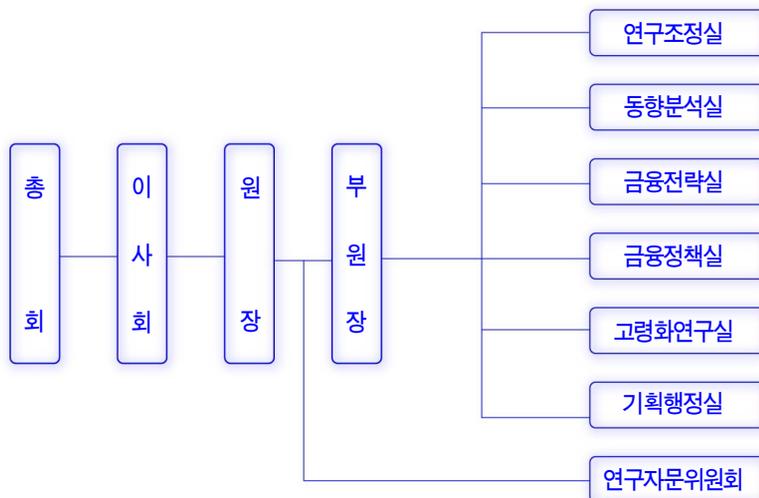
3대 강호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보험연구원은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 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3.1 조직도



#### 3.2 총회

보험연구원은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4개사, 손해보험회사 19개사가 보험연구원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회계년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FY2013에는 2013년 5월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총 5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보험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Y2013에는 2013년 5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1년인 연구자문위원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택된다. 보험연구원장은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FY2013년 연구자문위원회는 연구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2013년 11월에 개최되었다.

#### 4. 임직원 현황

(2013. 11월 말 현재)

구분	임원	부원장	연구 조정실	동향 분석실	금융 전략실	금융 정책실	고령화 연구실	기획 행정실	계
원 장	1								1
연구 직	선임연구위원	1	1	1	1	1	1		6
	연구위원			2	5	5	6		18
	수석연구원			1	1	1	1		4
	선임연구원			4		1	1		6
	연구원			1	5	2	3	2	13
	연구조원			1		1	1	1	4
행정원			2					6	8
계	1	1	5	13	10	12	12	6	60

####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연구조정실

- | 연구사업계획의 기획 및 수립
- | 연구사업계획의 일정 및 실적 관리
- | 연구관련 대외업무 및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각종 연구 관련 위원회의 주관
- | 신규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 대내외 연구원 홍보 및 소통
- |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 | 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 기타 연구 관련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안철경	부원장/실장	송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김세환	부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 및 보험
김진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이상은	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소비자정책, 금융소비자 교육
김영주	연구조원	단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 동향분석실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국내 보험회사 재무분석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금융 및 경제관련 주요통계의 집적관리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보험가입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전용식	부실장/센터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변혜원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장동식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통계학 석사	리스크 감독, 생명보험
이정환	선임연구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거시경제, 계량경제
최원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리스크관리, 보험경영
박정희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김세중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경제, 보험계리
이경아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채원영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	응용통계
이소양	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이아름	인턴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금융, 무역

### 금융전략실

-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 일반생명보험 관한 연구
- |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연구
- |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 등에 관한 연구
- | 자산운용 연구
-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재무건정성감독 연구
- | 회사별 경영성과 평가 연구
- | 보험회계 및 세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임준환	실장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김석영	연구위원	Arizona University 수학 박사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조재린	연구위원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비모수회귀분석, 최적디자인
김해식	연구위원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 관리학 석사	보험회계, 재무건정성 평가
조영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시장미시구조,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전성주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재무계량경제, 시계열계량경제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오병국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응용미시
김미현	연구조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경영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 금융정책실

- | 보험산업 정책 및 제도개선과제 개발연구 및 지원
- |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 | 보험모집 및 채널에 관한 연구
- | 업무행위규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 등에 관한 연구
- |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 |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연구
-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기형	실장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재무관리
황진태	연구위원	Clem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계량경제, 경제성장
송윤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최창희	연구위원	Iowa University 경영과학 박사	보험계리, 경영과학
박선영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투자론, 부동산금융, 국제재무, 자본시장
김경환	수석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정책, 보험 관련 법규
강민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보험관련법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학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이해량	인턴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석사	소비자정보, 공정거래
정민지	연구조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 고령화연구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공사 연금에 관한 연구

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사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제반 이슈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태열	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진익	연구위원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자산운용, 헤지펀드, 파생상품
강성호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재정금융, 연금보험
이창우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산업조직, 응용미시
정원석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게임이론
오승연	연구위원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수리경제
이상우	수석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김동겸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재무관리
김미화	연구원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김유미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계리
정진영	연구조원	국민대학교 국어교육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 기획행정실

- |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 일반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 예산의 수립·운영 및 통제
- | 의전 및 비서업무
- |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 | 문서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 | 기타 연구원 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성 명	직 위	업무분야
김선아	팀장	연구지원 업무 총괄
홍성연	수석담당역	회계, 세무, 교육, 급여 업무
변철성	수석담당역	기획, 행사 업무
이상윤	수석담당역	총무, 서무, 출판관리 업무
김형진	선임담당역	인사, 예산, 규정 업무
이상원	인턴담당역	행사, 예산, 출장 업무 보조

##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 관
정기간행물	보험금융연구	연 4회(2, 5, 8, 11월)	금융전략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8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8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해외보험금융동향	계간(2, 5, 8, 11월)	국제보험금융센터
	KIRi Weekly	주간	동향분석실
	고령화리뷰	연간(12월)	고령화연구실
	보고서 명	저 자	
용역보고서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이기형 외	
	보험사기의 사회·경제적 비용	송윤아 외	
	보험업 시장분석(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이기형 외	
	보험회사의 민영의료보험 리스크분석에 관한 설문조사 및 기초서류 분석	이태열 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조영현 외	
	질병장애 및 장기요양 인구 증가에 관한 연구	김석영 외	



## 2013 연차보고서

---

발 행 인 강 호  
편집위원장 안철경  
편 집 위 원 김세환, 이성은  
편 집 실 무 김영주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13. 12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